

# 교과서연구

제 41 호

2003. 12

차 례

- 발행인 / 한명천
- 편집기획위원장 / 김성환
- 위원 / 김만곤, 김정호, 박삼서,  
송정현, 최봉규

## 권두언

교과서에 디자인이 없다/백명진 .....4

## 특별 기획

### 교과서 제도 현안 및 과제-분야별

- 교과서 제도의 현황 및 발전 방향/김만곤 .....9
- 교과서 편찬·발행-급격한 변혁은 금물/곽상만 .....20
- 교과서 제도 현안-경제 논리로 해결/정동호 .....25
- 검정 교과서 편찬 과정상의 문제점 개선/정용환 .....32
- 교과서 검정제로의 전환 모색/한명희 .....41
- 현행 교과서 제도는 공론화 과정으로 개선/홍후조 .....47
- 교과서 지식의 급진적 재개념화 가능성의 탐색/윤병희 .....55

## 현장 교육

ICT를 활용한 수학과와 교실 수업 개선/제갈태균 .....60

## 나의 제언

- 편수국 부활은 교육 과제 극복의 지름길/허필수 .....66
- 좋은 교과서 만들기 위해 함께 생각해야 할 일들  
/이수랑 .....69

\* 『교과서연구』는 한국도서잡지 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교과서연구』에 게재된 내용은 본 재단의 공식 견해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 편수 행정의 발자취

국민 학교 통합 교과서의 발행/함수곤 .....	73
국민 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편찬/김용만 .....	78
1980년대 교과서의 위상/이종국 .....	84
「기술·가정」 통합 교과목과 관련된 이야기/고석달 .....	90

## 단 상

편수관 천명론(天命論)/박삼서 .....	94
‘교과서 출판 교실’ 연수를 마치면서/정광숙 .....	98
국정 교과서 심의 수당에 관한 이야기/송달용 .....	102

## 연구 보고서 소개

제 7 차 교육과정에 의거한 초등 학교 교과용 도서의 현장 타당도 분석·평가 연구 .....	106
효과적인 교수·학습의 질 향상을 위한 일습 자료 개발에 관한 연구 ...	107
전자 교과서 개발에 따른 저작권법상의 문제점 해결 방안에 관한 연구 ...	108

## 자 료

제 1 회 교과서 관련 수필 공모 최우수 작품 3 편 및 심사평 .....	109
‘교과서연구’지 편집·발행 개선을 위한 앙케트 조사 .....	119
● 연구재단 소식 .....	124
● 교과서 개별 구입 안내 .....	126
● 원고 모집 .....	127
● 연구재단 후원 기금 출연 안내 .....	128
● ‘교과서정보관’ 이용 안내 .....	129

\* 표지 글씨 : 신두영

\* 표지 디자인 : 대한교과서(주) 편집팀

**2003년** 교육인적자원부의 예산은 약 24조 원으로 정부 내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예산은 국민들의 지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젊은이들의 창의력을 개발하며 우리 나라의 미래를 젊어지고 갈 고급 두뇌를 키우는 데에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그것이 나라를 지키는 국방부의 예산보다 더 많이 편성된 것이 이상할 것이 없다. 인구 400만 명에 지나지 않는 싱가포르의 2000년도 교육 예산이 60억 달러(7조 2천억 원)이다. 이 수치에 따르면 인구 1인당 싱가포르의 교육비는 약 180만원으로 한국의 인구 1인당 교육비 60만 원의 약 3배가 사용되고 있다. 이런 예산 대비 교육의 질이 정비례할는지 혹은 그 이상의 효율이 발생되는지를 정확히 평가하기는 그리 쉽지 않을 것 같다.



## 교과서에 디자인이 없다

■ 글 / 백명진(서울대학교 디자인학부장)

지금 우리 사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교육 대란과 공교육의 붕괴 현상에 대한 우려는 심각한 상황에 와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파악하고 있는 사교육 비용이 약 13조 원에 이른다고 한다. 정작 심각한 것은 비용의 문제보다도 학생과 학부모들이 공교육 기관인 학교보다 학원을 더 신뢰하고 있는 현상이다. 지금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는 우리 교육에 대한 총체적 혼선은 고교 평준화가 시작된 1974년 이래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왔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 개선 혹은 교육 개혁과 관련된 수많은 방안들은 또다른 문제점을 양산해 왔다. 올해 수능 시험에서도 출제자와 관련한 소란이 있었다. 수능이 끝난 후 한 명문 대학교의 자연·이공 계열 당국자가 개최한 설명회에는 마련된 좌석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고, 한 사설 학원이 개최한 입시 관련 설명회에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구름같이 모였다고 한다.

이런 혼돈의 와중에 조기 해외 유학 바람은 날로 확산되고 있으며, 유학 대상국도 선진국뿐만 아니라 몽골, 중국, 말레이시아와 같은 곳으로까지 어린 한국 학생들이 모여들고 있다고 한다. 이런 과열 현상을 현실로 받아들이기에는 여러 가지 착잡한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내 아이만은 국제화 시대가 요구하는 유능한 인적 재원으로 키워 내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꺾을 수 있는 대안을 찾을 수 있을까? 과거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와 같은 개발 시대에는 해외로부터의 고급 정보와 문물을 도입하기 위한 확실한 방법은 선진국으로 향하는 유학뿐이었다. 지금은 상황이 다소 달라져서 해외 여행 자유화, 인터넷과 같은 정보 통신 인프라의 확장에 의해서 많은 정보들을 국내에서 손쉽게 취할 수 있게 되었지만, 해외로 향하는 열기는 점점 증폭되면서 우리 사회 계층 간의 전형적 갈등 요소가 되고 있다. 해외 대 국내, 서울 대 지방, 강남 대 서울 등의 배타적 장벽이 형성되면서 심지어는 나와 생각이 다르고 생활 양식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도 맹목적 증오심을 표출시키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렇듯 노골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우리 사회 구성원 간의 갈등을 수습하기 위한 묘안을 찾으려 하는 노력보다는 이런 현상을 기정사실화하는 무기력한 패배감에 모두가 피곤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 II

그 동안 교육의 자율성과 관련해서 많은 논쟁이 있었고, 교사의 권리, 전교조의 교육 민주화, 대학 교육의 세계화 프로그램 등에 관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대학 입시에 관

계되는 이슈만큼 사회적 관심을 끌어 내지 못했다. 우리 교육의 문제점이 대부분 입시 문제에 집중되고 있는 것은 특이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과연 우리 사회의 교육에 대해서 대학 입시 이외의 쟁점은 존재하지 않을까? 사실, 교육의 콘텐츠 문제와 교육의 인프라 문제는 더욱 근원적이고 시급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인데도 입시에 비하면 소외되어 있는 사안이다.

우리 사회에서 대중 매체, 즉 신문이나 공중파 방송에서 교육의 내용이나 환경에 관한 문제를 입시만한 비중으로 다루는 것을 본 기억이 없다. 이것은 매스커뮤니케이션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그 동안 우리 사회의 교육에 관한 관심이 오직 입시에만 집중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교육의 콘텐츠라고 할 수 있는 교과서와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시설과 교육 장비, 그리고 집기에 관한 문제는 예산과 직결된 문제이다. 사실, 우리의 경제적 형편이란 것이 정부 수립 후 겨우 1990년대에 와서야 주변을 둘러볼 수 있었을 정도로 변변치 못했고, 특히 1960년대, 1970년대에 걸쳐 초, 중, 고교를 다녔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시의 상황을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아직 우리의 국민 소득은 10,000달러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1998년의 외환 위기에서 채 벗어나기도 전에 또다시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고 있지만, 국민 전체가 체감하고 있는 물질적 행복 지수는 적어도 중진국 이상이 된 듯하다. 특히, 1990년대에 진입하면서 우리 국가가 쌓은 사회의 여러 가지 기반 시설과 정보화 환경 등을 감안해 볼 때에 이제 우리도 삶의 가치와 질에 관한 논의를 할 수준에 충분히 이르렀다고 느껴진다. 따라

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 사회의 다른 분야가 성장하고 재정비되는만큼 교육적 여건 역시 발전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교육 환경은 그러한 기대에 못 미치고 있고 나아가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당사자들 역시 이 점을 상당히 안타까워하고 있다.

교육 환경과 내용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와 같은 것으로, 그 어느 것도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교육의 하드웨어에 해당되는 시설, 장비, 집기면을 먼저 살펴볼 때, 특이한 현상 중의 하나는 우리의 각급 학교들이, 초, 중, 고, 대학에 이르기까지 공간면에서는 상당히 넓게 자리잡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결코 학교 시설 전체가 효율적으로 넉넉한 공간을 갖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 부지 중 운동장이 상당히 넓게 자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예는 교육을 위한 인프라는 균형적 효율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원칙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를 시사하고 있다.

2003년 기준 초, 중, 고교 학생 수는 각 417만, 185만, 178여만 명으로 전체 780여만 명에 이른다. 그 학생들에게 지급된 국정 교과서 매출액이 연간 1200억 원 정도이며, 검정 교과서의 매출액이 1000억 원 정도가 된다. 따라서, 약 780만 명의 초, 중, 고교 학생들에게 배부되었거나 구입한 국정과 검·인정 교과서의 총 매출액은 2200억 원 정도이다. 이것은 학생 1인당 약 28,000원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국정 교과서의 책당 개발 비용이 약 3500만 원이며, 이는 검·인정 교과서 개발 비용의 약 17.5% 수준이다. 국정 교과서를 사용하는 한 학년의 학생 수를 약 60만 명으로 볼 때에 국가가 투자한 교과서 개발 비용은 학생 1인당 58원 정도이다.

지금 열거한 통계 수치는 전문적 통계 자료가 아니기에 절대적 수치는 아닐 수 있다. 따라서, 통계 지수의 오차를 어느 정도 감안하더라도 이 데이터가 보여 주는 결과는 충격적이다.

이런 현실 앞에서 교과서의 디자인에 관한 언급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교과용 도서 관련 법규집’을 살펴보면 디자인에 관한 관리 규정이나 개발 규정은 단 한 항목도 찾을 수 없다. 교육의 소프트웨어와 그것의 전달 체제면에서 교과서의 내용을 집필하기 위한 투자가 무엇보다 커야 하고, 그것을 전달하는 선생님들의 역할을 생각하면 디자인에 관한 언급은 우선 순위에서 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정 교과서는 공급되는 것이기에 사용자의 선택권은 제한되고 있고 디자인과 같은 사용자를 위한 서비스는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에는 동의할 수 없다. 지금 시대에서 디자인은 단순히 서비스 차원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적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배려해야 하는 것이다.

영화 ‘해리포터’나 ‘반지의 제왕’의 경우, 그것의 원작이 우선 뛰어난 상상력과 극적 재미를 주고 있기에 대성공을 했다. 하지만 영화적 요소인 영상미, 특수 효과, 특수 음향, 촬영 기법, 그리고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력과 같은 영상 디자인과 영화적 요소에 의해서 공전의 대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따라서, 교과서 역시 좋은 내용을 잘 전달하게 하는 디자인, 즉 책의 크기, 판형의 비례, 종이의 질과 색, 일러스트레이션, 사진, 다이어그램, 활자의 꼴, 크기, 지면 전체의 레이아웃(위치 선정) 등에 관한 배려는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한 핵심 수단이다.

교육인적자원부 내에 교과서만을 전문적으로 연구, 개발하는  
상설 독립 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은 참으로 아쉬운 점이다.  
물론,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과서를 편찬하는 편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기는  
하나, 연구 개발의 기능보다는 편수 업무 관리 쪽의 비중이 크다는 생각이다.

1980년 12월에 국내의 공중파 방송이 컬러 방송을 시작하면서 디지털 위성 방송을 하고 있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미디어의 환경은 가히 혁명적 변신을 거듭하고 있다. 따라서, 영상 시대의 후속 세대들은 정서적, 문화적으로 그 이전의 세대들과는 완전히 다른 감성을 갖고 있다. 이들 세대들의 감성 특성 중 가장 뚜렷한 것은 ① 시각 전달 매체에 민감히 반응한다, ② 색채에 예민하다, ③ 동적 매체(움직임)에 관심을 가진다, ④ 사진 이미지를 선호한다, ⑤ 애니메이션 캐릭터, 혹은 마스코트 등에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부여한다이다.

따라서, 신세대들은 예외 없이 유행에 민감하고, 그 유행에 뒤처지는 것을 못 견뎌한다. 기성 세대들의 입장에서 볼 때 신세대들의 이런 감성이 그리 탐탁치 않겠지만, 그들의 그런 성향이 우리 국가 전체의 정보화 능력을 단번에 선진화시키는 데 일조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대개 일반인들은 ‘디자인’ 하면 고비용 측면을 가장 먼저 떠올린다. 사실, 효율면에서 디자인은 고비용 저효율이 아니라, 저비용 고효율을 지향하고 있다. 앞에서 거론한 국정 교과서 한 권의 개발 비용에다 국내 최고 수준의 북디자인이 그 책을 디자인함으로써 발생하는 디자인 비용을 대략 1000만 원 정도라고 가정했을 때, 그 비용은 결코 지나친 비용이라 할 수 없다. 학생 수 60만 명 기준

으로 투입된 디자인 비용은 1인당 겨우 16원 정도이다.

이 정도의 투자에 비해서 학생들의 학습 효과가 증가되고 교과서는 딱딱한 것이라는 경직된 이미지가 개선되어서 학생들이 교과서에 친근감을 느끼게 된다면 그 비용은 정말 고효율적 비용이 될 것이다.

### Ⅲ

요즈음 학생들이 수업 외에 대하게 되는 타 매체들은 상업적 차원으로 학생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으며, 교과서의 외적 체제, 즉 디자인적인 면은 어린 학생들에게 그런 상업적 매체들과 곧바로 비교가 되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수업 시간 외에 대하는 인터넷, 비디오, 전자 게임, 영화, 만화, 그림책 등에서 제공하는 이미지가 감성적 자극을 더해 가는 데 반해, 교과서의 디자인은 여전히 무뎌뎌하고 친절하지 않은 인상만 고집한다면 학생들이 받게 되는 교과서에 대한 인상은 더욱 고답적인 것으로 고정될 수 있다.

디자인에서 영원한 금언인 ‘Form follows Function’은 물고기의 유선형과 같이 형태는 기능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말은 기능을 위해 형태가 존재하는 것같이 들리지만, 완전한 형태에서만 훌륭한 기능이 수반된다는 뜻을 의미한다. 교과서의 경우

**교육용 출판업을 너무 상업적 논리로만 운영해서는 곤란하다.**  
**일차적으로 정부의 비현실적 가격 통제도 문제이지만,**  
**지나친 이윤 추구 역시 지양되기를 기대한다.**

에도 공들여 집필한 내용을 효율적으로 잘 전달하기 위해서 그것에 어울리는 좋은 디자인이 수반되어야 하고, 우리 사회의 역량과 성숙도를 감안할 때 디자인은 필수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교육인적자원부 내에 교과서만을 전문적으로 연구, 개발하는 상설 독립 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은 참으로 아쉬운 점이다. 물론,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과서를 편찬하는 편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기는 하나, 연구 개발의 기능보다는 편수 업무 관리 쪽의 비중이 크다는 생각이다.

그런 측면에서 현 체제는 국정, 검·인정 교과서의 저작, 검·인정, 발행 등의 관리 체계는 잘 갖추어져 있다. 하지만, 질 좋은 교과서를 제작하는 업무는 그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그 조직 체계, 기능 및 독립성, 그리고 충분한 예산 확보면에서는 마땅치 않게 여겨진다.

우리 정부가 하는 일은 대부분 군림하려고만 하고 책임지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하급 기관 내지는 외부로의 프로젝트를 맡주할 때에 책임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반면에 수행자의 자율적 권리는 잘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책임과 권리를 동시에 부여하지 않는 한 누구나 책임을 피하는 방향으로만 움직이게 된다.

우리 아이들이 보다 더 나은 교과서를 갖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큼 민간 출판 업계의 역할도 중요하다. 검·인정 교과서뿐만 아니라 참고서의 시장 규모 역시 엄청나기에

민간의 노력에 거는 기대가 크다. 더 나은 책을 만들고 싶어도 현재의 가격 체제로는 어쩔 수 없을지도 모른다. 교육용 출판업을 너무 상업적 논리로만 운영해서는 곤란하다. 일차적으로 정부의 비현실적 가격 통제도 문제이지만, 지나친 이윤 추구 역시 지양되기를 기대한다.

그 동안 우리의 사랑하는 아이들이 그토록 애를 태우며 공부하던 교과서에 디자인이 없었다. 이 말은 교과서에 멋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내용의 효율적 전달 체계가 아쉬웠다는 의미이다. 그 아쉬움을 보강하기 위해 발생하는 투자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의 투자가 가져올 긍정적 고부가 가치에 기대를 걸어 보자. 그리고 눈을 크게 뜨고 귀를 기울여 교과서를 내용면에서나 외적 체제면에서나 최고의 수준으로 제작하는 전문가 집단을 선정해야 한다. 그 동안의 경험으로 볼 때 최고의 전문가가 국가적 과업에 참여하게 하는 작업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학교의 시설이 획일성과 비효율성에서 벗어나고, 학생들의 실험 실습 장비가 영세성을 탈피하고, 학생들의 책결상이 최고급은 아니더라도 체형에 걸맞은 것으로 교체되고, 그리고 학습 내용 자체가 유익하고 이해하기 편하면서 멋도 있는 그런 교과서를 학생들이 쓰게 된다면, 그런 변화야말로 우리 교육계에 영겨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원적 방안 중의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24



# 교과서 제도의 현황 및 발전 방향

■ 글 / 김만곤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정정책과장)



교과서는 웬만한 사람은 관심이나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주된 교육용 매체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경전(經典)과 같은 지위를 누리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흔히 ‘교과서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며, ‘교과서에도 나오는 인물’이라는 식으로 그 권위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다른 훌륭한 자료의 가치나 인물의 비중에 대하여 예를 들어 ‘경제학의 교과서’, ‘야구의 교과서’라고 선전하거나 격찬하기도 한다. 이러한 표현은 교과서가 그만큼 중요한 교육 자료라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교과서에 관해서는 누구나 그 견해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므로, 이 글에서는 가능한 한 단순하게 우리 나라 교과서 제도의 현황을 소개하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짚어 보고자 하였다.

우리 나라 교과서는 그 동안 여러 가지 변화를 겪으며 발전해 왔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올바른 교육 방향에 맞추어 편찬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므로 교과서의 발전상에 비추어 오늘날 우리의 초·중등 교육이 그러한 방향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

다는 평가를 하고 싶다면, 교과서만 발전시켜서는 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가지고 종합적인 접근을 시도해야 마땅할 것이다.

## 1. 교과서 편찬 방향

### 가. 교육과정 정책과 교과서 성격의 변화

제 7 차 교육과정은 21 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를 대비하여 1997년 말에 개정, 고시된 교육과정이다. 아직도 우리 교육을 암기 위주의 교육으로 비판하면서 마치 초·중등 학교 교육의 목표가 그렇게 설정된 것인 양 비판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미 우리는 1995년에 교육개혁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교육의 방향과 목표를 새로 설정하고 그러한 방향과 목표에 따른 학교 교육의 구체적 설계도로서의 교육과정을 개정한 지 오래 된 일이다.

제 7 차 교육과정은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하고, 능력에 따른 수준별 학습, 진로·적성에 따른 선택 학습을 실시함으로써 임시 위주의 주입식·암기식 교육, 전국적으로 통일된 획일적 교육과정 편성·운영 체제를 지양하고 창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과 창의성 신장에 적합한 질 높은 교과서 편찬을 기본 방향으로 삼아, 쉽고 재미있고 친절하며 활용하기 편리한 교과서를 편찬하고자 하였다.**

의력, 자기 주도 능력 함양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하자는 취지로 개정된 교육과정이다. 이

교육과정의 구조를 간단히 나타내어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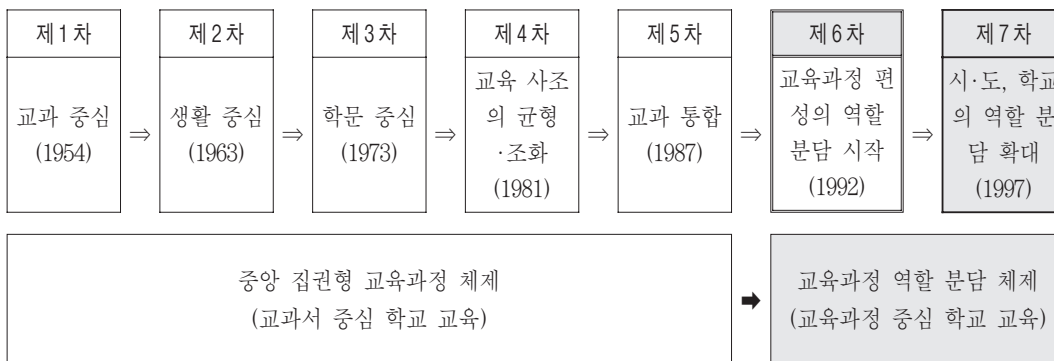
제7차 교육 과정의 구조

학 년	초 1~고 1	고 2~3
교육과정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선택 중심 교육과정
특 징	기초·기본 교육 강화 ※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지식 능력 태도의 함양	적성(진로)에 따른 교육 ※ 최초로 학생 선택권 부여
방 법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개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이상으로 함.

우리 나라 교육과정 정책의 장점은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권한을 중앙 정부와 시·도 교육청, 학교와 교사가 분담하고 있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중앙에서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을 제시하고, 시·도 교육청에서는 각 지역에서 실현할 교육과정의 지침을 제시하며, 각 학교는 당해 학교에서 실현할 실제적인 교육과정을 작성하여 실천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이미 1992년에 개정된

제6차 교육과정에서 시작된 것이며, 제7차 교육과정에 이르러 더욱 강화되고 구체화된 것으로, 이는 종래의 ‘교과서 중심’ 학교 교육을 각 학교에서 편성하는 ‘교육과정 중심’ 학교 교육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학교 교육에서의 교과서의 성격을 교육과정 정책의 이러한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 나라 교육과정 정책의 변화



## 제7차 교육과정이 지향한 교과서

구 분	전통적인 교과서	바람직한 교과서
교과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과옥조형 교과서</li> <li>· 교과서 중심 교육에 적합한 교과서</li> <li>· 지식 영역 중심의 교과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과정 구현을 위한 다양한 자료 중의 주된 자료</li> <li>· 교육과정 중심 교육에 적합한 교과서</li> <li>· 지식과 함께 기능·태도 함양, 창의력·사고력 배양을 중시하는 교과서</li> </ul>
진술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식 요약형, 개념 압축형</li> <li>· 강의 요강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사실·사례 제시형</li> <li>· 학습 과정(절차·방법) 중시형</li> </ul>
단원 전개	· 전 단원에서 동일한 방법	· 단원·주제에 따라 다양한 전개
내용 선정	· 지식 전달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심 개념 관련 생활 경험, 사례 중심</li> <li>· 교과 내용의 실용성, 유용성 추구</li> </ul>

### 나.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편찬 방향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과 창의성 신장에 적합한 질 높은 교과서 편찬을 기본 방향으로 삼아, 쉽고 재미있고 친절하며 활용하기 편리한 교과서를 편찬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교육과정의 정신을 반영한 교과서, 교육과정 중심 학교 교육에 적합한 교과서, 국정 도서의 경우 연구소나 대학 등에 위탁하여 편찬하는 연구 개발형의 장점을 살린 교과서, 현장 교원들의 참여를 높인 현장 친화적인 교과서가 되게 하고자 노력하였다.

오랫동안 지향해 온 바이기는 하지만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전통적인 교과서와 바람직한 교과서를 위의 표와 같이 특징지어 내용과 함께 편집이나 체제면에서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게 하였다. 그러나 우리 나라 학자들 중에는 새로 편찬된 교과서를 구체적으

로 살펴보지도 않은 채 자신들이 중·고등 학교를 다닐 때 배운 교과서와 외국 유학 중에 구경한 다른 나라의 교과서를 비교하여 우리 교과서는 재미 없고 어려우며 단편적 지식을 암기시키는 데 급급한 교과서라고 무책임한 평가를 하는 학자가 많다.

## 2. 교과서 발행 현황

### 가. 교과서 발행 제도

교과서 발행제로는 국정제<sup>1)</sup>, 검정제<sup>2)</sup>, 인정제<sup>3)</sup>, 자유 발행제<sup>4)</sup>가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는 이 중 국정제, 검정제, 인정제를 병행하고 있다. 또,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sup>5)</sup> 네 가지의 교과서 제도를 비교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교과서 발행 제도 비교

구 분		국정제(國定, government-issued textbook system)	검정제(檢定, textbook authorization system)	인정제(認定, textbook adoption system)	자유 발행제
발행자	국가/주	○			
	출판사		○	○	○
	저작자		○	○	○

교과서 저작의 근거	국가/주 교육과정	○	○	○	○
	별도의 교과서 기준		○	○	
	학문적, 교육적 필요				○
교과서 발행 절차	저작→심의→발행	○			
	저작→검정→발행		○		
	저작→발행→인정			○	
	저작→발행→사용				○
교과서 인정자	국가/주	○	○	○	
	별도의 기관		○		
	교육구			○	
	학 교			○	○
	교 사				○
교과서 선정자	국가/주	○			
	교육구				
	학 교		○	○	○
	교 사			○	○
교과서 선정의 근거	없음(의무)	○			
	교과서 목록		○	○	○
	선정자의 자유				○

세계 여러 나라의 교과서 제도를 살펴보면 어느 한 가지 제도를 취하는 나라도 있고, 두 가지 혹은 우리 나라처럼 세 가지의 제도를 병행하는 나라도 있다.<sup>6)</sup>

미국의 교과서 제도는 주 단위 인정제로서, 주 단위로 일정한 절차를 거쳐 작성된 인정 교과서 목록을 보고 각 교육구나 개별 학교에서 선정(채택)하고 있다. 주 교육부는 공립 학교에 대한 최소한의 교육과정 기준을 제시하며, 교과서가 특정 학년이나 학기에 사용되는 경우는 적고 여러 학년에 걸쳐 6~8년 동안 대역제로 사용되기 때문에 교과서 양이

방대하고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영국의 교과서 제도는 국가 교육과정에 의해 저작되는 자유 발행제로서, 미국처럼 대역제를 운영하고 있다. 국가 교육과정의 목표에 따라 각 출판사가 교과서를 제작하여 학교에 홍보하고, 학교별로 교사들과 학교장이 자유롭게 협의하여 채택한다. 영국의 국가 수준 교육과정은 필수·선택 과목 및 각 교과목의 목표만 기술하고 각 학교에서 국가 수준 교육과정을 충분히 가르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영국에서는 국가 고사를 실시하고 교사들

우리 나라가 국정·검정·인정의 세 가지 제도를 병행하고 있는 것은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다양한 교과서를 편찬하기 위해서이며, 이렇게 세 가지의  
 제도를 병행한 것은 제1차 교육과정기 이후 오늘날까지 일관된 것이나 초기의 무제한  
 합격을 5종으로 제한하고 검정 출원 자격을 강화하다가 제5차 교육과정기  
 이후 오늘날까지는 검·인정을 확대해 온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의 신분이 계약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보장되는 자율성으로 보인다.

프랑스에서는 국가 교육과정에 의해 제작되는 인정제와 자유 발행제를 병행하고 있으며, 미국이나 영국처럼 대여제를 운영하고 있다. 초등 학교의 경우, 각 교육구의 교과서선정위원회에서 교과서 선정 목록을 작성하면 이것을 대학구 총장 또는 교육부 장관이 승인하며, 학교에서는 이 목록 중에서 교사가 선정하고 교장이 최종 확정한다. 중등 학교의 경우에는 영국과 유사한 형태로 채택된다.

독일은 각 주의 교육부에서 교육과정과 수업 계획표를 각 학교에 전달하고, 교과서는 검정제를 운영하고 있다. 교과서 공급면에서는 대여제와 급여제를 병행하고 있다. 해마다 과목별로 승인되는 교과서의 종류가 많고 학교에서의 채택은 교사협의회에서 이루어지며, 전년도에 나온 교과서 목록은 무효가 되는 것이 특징이다.

OECD 국가 중에서 대표적인 나라들의 교과서 제도를 개략적으로 살펴보았지만, 교과서 제도는 각 나라의 역사와 문화적 배경, 교과서 발행 여건에 따라 발달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나라나 중앙 정부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서 교과서의 편찬과 발행, 또는 선정 과정에 어떠한 형태로든 관여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영국이나 스웨덴, 덴마크 등

다원화된 사회의 북유럽 국가들에서는 자유 발행제가 운영되고 있다.

우리 나라가 국정·검정·인정의 세 가지 제도를 병행하고 있는 것은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다양한 교과서를 편찬하기 위해서이며, 이렇게 세 가지의 제도를 병행한 것은 제1차 교육과정기 이후 오늘날까지 일관된 것이나 초기의 무제한 합격을 5종으로 제한하고 검정 출원 자격을 강화하다가 제5차 교육과정기 이후 오늘날까지는 검·인정을 확대해 온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 나. 교과서 개발 현황

국정 도서는 초등 학교의 전 교과서와 중등 학교의 국어, 국사, 도덕, 고등 학교의 전문 교과 및 특수 학교용 교과서들이다. 국정으로 발행하는 도서들을 살펴보면 국가 수준에서 기준과 관점의 통일을 기해야 할 교과(국어, 문법), 국가관, 민족 정체성 확립을 위해 과열된 논쟁이 조정·정리되어야 할 과목(국사),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존속, 이념적 혼란 극복이 필요한 교과(도덕), 수요가 적어서 출판사의 검정 신청이 없는 교과들(실업계 전문 교과, 특수 학교 각 교과)이며, 이중 중학교의 국어, 도덕, 국사는 공모제를 통하여 개발 기관을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검정 도서는 중·고등 학교의 국

### 교육과정 변천에 따른 교과서 제도의 변천

교육과정기	주요 내용
1~2 차 (1973년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과용 도서의 종류 : 국정·검정·인정 도서</li> <li>· 국정 도서 : 국민 학교 교과서와 중학교 및 고등 학교 교과서 중 국어, 국민 윤리, 국가 이념 반영 과목, 실업 교과목 중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교과서</li> <li>· 검정 신청 자격 : 저작자 또는 출판사</li> <li>· 검정 합격 종수 : 제한 없음 (원고 심사 기준을 충족한 도서).</li> <li>· 교과용 도서 저작 검인정령 ('77. 8. 20. 폐지)</li> </ul>
제 3 차 (1973~19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과용 도서의 종류 : 1종·2종·인정 도서</li> <li>· 1종 도서 : 국민 학교, 중학교의 교과서·지도서와 실업계 고등 학교의 교과서·지도서, 인문계 고교의 교과목 중 국어, 국민 윤리, 국사 및 사회과 교과서</li> <li>· 검정 신청 자격 : 저작자로 제한</li> <li>· 2종 합격 종수 : 5종으로 제한</li> <li>·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정 ('77. 8. 20.)</li> </ul>
제 4 차 (1981~19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과용 도서의 종류 : 1종·2종·인정 도서</li> <li>· 2종 도서 확대 : 중학교의 국어, 도덕, 국사, 사회과 외의 도서 및 고등 학교 일부 도서의 2종화</li> <li>· 2종 도서 출판업자 자격 요건 강화 : 최근 3년간 5종⇒최근 3년간 10종 이상 발행 실적 있는 출판사</li> <li>· 2종 도서 유효 기간 연장 : 5년에서 2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하도록 함.</li> </ul>
제 5 차 (1987~19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과용 도서의 종류 : 1종·2종·인정 도서</li> <li>· 2종 합격 종수 확대 : 5종~8종 이내 (중학교 5종, 고등 학교 8종)</li> </ul>
제 6 차 (1993~19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과용 도서의 종류 : 1종·2종·인정 도서</li> <li>· 2종 종수 확대 : 중학교 5종→8종 이내, 고등 학교 절대 평가에 의해 18종까지</li> </ul>
제 7 차 (2000~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과용 도서의 종류 : 국정·검정·인정 도서</li> <li>· 검정 합격 종수 제한 폐지</li> <li>· 학년별, 연차별 검정 (일괄 검정보다 집필 기간 많이 확보)</li> <li>· 유효 기간 : 교육과정 개정시까지로 확장</li> <li>· 교과서 출판의 전문화 지향</li> </ul>

\* 명칭 변경 (2002. 6. 25.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 : 1종 도서→국정 도서, 2종 도서→검정 도서

정 도서를 제외한 모든 도서이며, 인정 도서는 국·검정 도서가 없는 경우 및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역 실정에 따른 과목, 교양 교과, 특별 활동·재량 활동의 도서들)에 개발되며, 인정권을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하고 있다.<sup>7)</sup>

제 7 차 교육과정에 따라 편찬된 도서 수를

보면 국정 도서는 모두 721 종 (721 책)이며, 검정 도서는 187 종 1,575 책이다. 인정 도서는 2003년 3월 1일 현재 1,110 책이 개발되어 있으나 계속 늘어나고 있다. 개발된 인정 도서들을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 학교의 경우에는 ‘우리들은 1학년’, 시·도별로 배우는 ‘사회과 탐구’ 등 783 책이 개발되어 있고, 중학교

**교과서 자유 발행제가 기본적으로 그러한 방향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에는 대체로 공감할 수 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우리 교과서 제도는 장차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는 종교 등 45책, 고등 학교는 철학, 논리학, 심리학, 교육학 등 교양 교과와 전문 교과의 도서 282책이 개발되어 있다.

참고로 교과서 가격 및 시장 규모를 보면 초·중·고 교과용 도서 평균 가격은 1,510원이 고, 인정 도서를 제외한 시장 규모는 2,318억 정도, 의무 교육에 따른 교과서 대금 국고 부담액은 1,523억 정도이다.

**다. 인정도서심의회 심의 없는 인정 도서와  
교과서 자유 발행제 도입**

최근에 이르러 교과서 자유 발행제 도입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자유 발행제를 도입 하자는 주장을 들어 보면, 대체로 지식 정보의 다양한 흐름이 학교로 들어올 수 있도록 폐쇄적인 제도를 개방적인 방향으로 개혁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획일화를 탈피할 수 있고, 창의성이 제고되어 질 높은 교과서가 개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제도가 실효를 거둘 수 있으려면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을 원칙 제시 수준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의 우리 제도가 폐쇄적인가, 학교 교육의 획일성이 교과서 제도 때문인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교과서 자유 발행제가 기본적으로 그러한 방향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에는 대체로 공감할 수 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우리

교과서 제도는 장차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자유 발행제를 도입하자면 먼저 그에 필요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우선적인 것은, 학교 교육 및 교육 내용의 수준 확보 문제이다. 즉, 기초적·기본적 교육의 수준 및 질적 기회 균등 문제, 교육 목표 및 교육 내용의 학교급별 일관성, 체계성 유지 문제, 공교육의 객관적 질 관리 및 국민 교육의 일정 수준 확보 문제, 부당한 압력, 교화, 선전 등 교육의 중립성 확보 문제, 표준적인 교육 내용 선정(편견, 오류로부터의 보편 타당성 확보) 및 교육 목표 달성의 국가적 책임 문제 등이 해결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의 해결에는 영 연방국이나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에서 국가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교육과정 기준(NATIONAL CURRICULUM)에 대한 국가의 권한을 강화하고 있는 경향이 참조되어야 할 것이다.<sup>8)</sup> 즉, 국가 기준은 가능한 한 대강화하면서 그 기준은 최대한 지켜지고 실천 정도가 구체적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교과서 출판사들의 지나친 상업주의로 교과서의 내용보다는 외형 체제에 치우칠 수 있는 점, 혹은 대형 출판사가 기존의 판매망을 이용하여 독과점할 우려 등이 경계되어야 하며, 교과서 채택 부조리나 특정 교과서를 편중 선택할 우려 등 급격한 제도 변경에 따르는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이 마련되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제 7 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편찬에서 ‘인정도서심의회 심의 없는 인정 도서’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급속히 변화하는 컴퓨터 관련 과목이나 개별 교육이 가능한 체육·예술·국제에 관한 전문 교과와 과목 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지정하는 과목에 대하여는 당해 학교에서 필요한 도서를 심의·선정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한 것으로, 실제로는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의 전 단계로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다. 제 7 차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과목으로 78 과목을 지정하였으며, 학교장은 이들 과목의 교과서에 대해서는 당해 과목의 교원 자격을 가진 교원 중에서 지정 또는 위촉한<sup>9)</sup> 3 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심의회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기가 시작되는 날의 3월 전까지 관할 시·도 교육감에게 신청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sup>10)</sup> 따라서, 학교장은 이들 과목에 대해서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 14 조 제 1 항에 의하여 시·도 교육청의 인정 도서 심의를 거친 인정 도서에 대하여 사용 신청을 할 수도 있고, 규정 제 14 조 제 3 항에 의하여 시·도 교육청의 인정도서심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자체 심의를 거친 도서의 사용 신청을 할 수도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경우 교육감은 당연히 인정도서심의회 심의 없이 인정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사용 신청된 도서의 내용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거나 특정 정당, 종교를 지지하는 등 교과서로 사용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인정도서심의회 심의를 거치게 된다. ‘인정도서심의회 심의 없는 인정 도서’의 목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컴퓨터 구조, 시스템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 멀티미디어 (4 과목)
- 자료 처리, 전자 계산 실무, 프로그래밍 실무, 사무 자동화 실무, 문서 실무 (5 과목)
- 축구, 농구, 배구, 무용, 육상 경기, 체조 경기, 수영 경기, 태권도·복싱, 유도·레슬링, 사격, 양궁, 역도, 빙상, 사이클, 골프, 요트, 조정, 볼링, 스키, 펜싱, 배드민턴, 카누 (22 과목)
- 음악 이론, 음악사, 시창·청음, 미술 이론, 미술사, 디자인, 영상 미술, 무용 이론, 무용사, 문학 개론, 문학사, 문장론, 고전 문학, 현대 문학, 시창작, 소설 창작, 희곡 창작, 연극 개론, 영화 개론, 연극사, 영화사, 화술, 사진 개론, 사진사, 사진 편집 (25 과목)
- 영어 강독, 독일어 강독, 프랑스어 강독, 스페인어 강독, 중국어 강독, 일본어 강독, 러시아어 강독, 아랍어 강독, 국제 정치, 국제 경제, 국제 문제, 비교 문화, 정보 과학, 국제법, 지역 이해, 인류의 미래 사회, 한국의 전통 문화, 한국의 현대 사회, 한국어, 과제 연구, 예능 실습 (21 과목)
- 잠사 기술 (1 과목)

합계 78 과목

### 3. 교과서 제도 개선 기본 방향

앞으로의 교과서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방향만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내용은 현실적으로 여러 출판사나 관련 학자, 교원들의 매우 큰 관심 사항이 될 수 있으나, 실제적인 적용 방안이 결정되기 전에는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지금까지의 일시적·전면적 교육과정  
개정 및 일시적·전면적 교과서 개편 체제의 폐단을 불식하고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현장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정 수시 개선 체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가. 교과서 제도 발전 방안은 교육과정 적용 수준 제고 방안, 대입 전형 제도 개선 방향과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

우리 나라의 교육과정 정책이나 교과서 정책은 어느 시기에는 성공적이었고 어느 시기에는 실패한 정책이라기보다는 대체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온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학교 교육이 우리가 지향하는 방향에 따라 만족스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 원인을 단편적으로 교육과정·교과서 정책·제도에 치중하여 찾을 수는 없다.

즉, 현행 교과서는 종전의 교과서에 비해 분명히 탐구형, 자기 주도적 문제 해결형, 또는 체험 학습형으로 개발되었다는 것이 인정되고 있지만, 학교에는 아직도 내용 암기에 주력하는 경향이 남아 있다거나 심지어 수업 현장은 늘 그대로라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 한편, 교사들은 교과서가 교육과정에 따라 수업을 전개할 때 사용되는 주된 학습 자료이며 재구성하여 지도할 수 있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는 하지만, 정작 수업을 전개할 때에는 학부모의 요구나 학습 자료 동원 등 지도상의 한계점 때문에 그 내용을 살살이 지도하는 데 급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과서 개편의 취지를 살리는 수업을 기대하려면 먼저 대학 입학 전형 제도나 학업 성취도 평가 방향 등이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착

되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지금까지의 일시적·전면적 교육과정 개정 및 일시적·전면적 교과서 개편 체제의 폐단을 불식하고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현장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정 수시 개선 체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로써 필수 과목 축소 및 선택 과목 확대 정책이나 주 5일 수업제 도입, 교육과정 총론의 대강화와 시·도 및 학교의 자율 재량권 확대 등의 시책이 실현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과서 제도의 획기적 발전도 가능할 것이다.

나. 교과서 제도는 점진적으로 다양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에서 살펴보았지만 세계 여러 나라 중에는 몇 가지의 교과서 제도를 병행하는 나라가 많으며, 우리는 제 7차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국정제와 검·인정제를 병행하면서 국정 도서를 줄이고 검·인정 도서를 확대하여 왔다.

국정 도서 중에는 앞으로 검·인정화 해야 할 도서가 많다. 특히, 초등학교의 전 교과 및 중·고등학교의 국어, 도덕, 국사 등은 우선적으로 검정화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선택하여 배울 학생의 수가 매우 적은 선택 과목의 경우 시중에 개발되어 나온 적절한 도서가 없거나 출판사들이 검·

인정 도서를 개발할 가능성이 적으면 이는 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국정 도서로 개발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국정제를 적용하는 교과목에서도 이미 부분적으로 검정제를 실현하고 있다. 중등 학교의 국어, 도덕, 국사 교과서는 모두 국정 도서로 편찬되어 왔으나,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고등 학교 2·3학년 교과서는 국어, 국사, 도덕을 포함하여 모두 검정 도서로 전환했고, 중학교용 국어, 도덕, 국사 교과서는 공모제를 통하여 개발 기관을 선정함으로써 국정 도서의 한계를 탈피하려는 노력을 시도하였다. 또, 2003년에는 국사편찬위원회에 ‘국사 교과서 편찬 제도 연구’를 위탁하여 검정 도서로 전환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

특히, 자유 발행제의 점진적 도입을 위해 고등 학교 전문 교과와 일부 과목에 ‘인정도서심의회 심의 없는 인정 도서제’를 시행하고 있다. 자유 발행제와 유사한 형태로 사용되고 있는 이러한 성격의 도서들은 보통 교과와 선택 과목과 전문 교과와 과목들이 늘어남에 따라<sup>11)</sup> 그 범위를 더욱 확대하거나 자유 발행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다. 교과서 편찬의 창의성, 다양성 확보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어떠한 교과서가 좋은 교과서인가는 “미국 교과서는 우리 교과서보다 좋더라.”라는 식으로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구체적, 전문적으로 연구되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 홍보 자료에서 ‘친근감과 창의력을 높이는 만화, 삽화 제시’, ‘학생의 개인차를 존중하여

흥미에 따라 선택하거나, 수준에 맞게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게 한 교과서’, ‘실생활 사례를 학습 소재로 도입한 교과서’, ‘학생의 참여와 학습 효과를 높이는 다양한 활동을 제시한 교과서’, ‘신문, 인터넷, CD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입체적 학습을 유도하는 교과서’,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여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살아갈 힘을 기르는 교과서’, ‘국판/단색의 교과서를 4×6 배판/컬러판으로 바꾸고, 창의적인 편집이 이루어진 교과서’ 등을 새 교과서의 특징으로 들고 있다.<sup>12)</sup>

그러나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에서는 교육과정 내용 요소는 종전에 비해 약 70%로 감축되었으나 풍부한 학습 자료를 제시하기 위해 교과서의 판형을 키우고 쪽수를 늘여 편찬하게 되자 학습 내용이 오히려 늘어났다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며, 이러한 비판과는 달리 방대한 학습 자료를 싣고 있는 미국의 교과서를 예로 들어 우리 나라 교과서는 내용이 빈약하기 짝이 없어 참고서를 구입하여 공부하지 않을 수 없고 이로써 사교육비가 늘어난다는 비판을 하기도 한다. 말하자면 내용을 모두 외우기에는 양이 너무 많으나 구체적 학습 활동에는 아직도 그 내용이 빈약하다는 이원적인 비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이처럼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2003년에 공모를 통하여 연구 개발 기관을 선정하고 ‘참고서가 필요 없는 모범 교과서 편찬 연구’를 시작하였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수·학습 활동을 위해서는 전자 도서나 멀티미디어 자료 등 교과별 학습 자료 제작을 위한 지원도 확대되어야 하며, 제7차 교육과정에서 제도적으로 도입된 수준별 학습이 기초·기본 교육을 위한

최적의 방안이라면 수준별 교과서 편찬을 위한 연구도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1

- 1) 국정제는 교과서 저작에 국가가 직접 관여하는 방식으로, 교과서를 국가 기관이 직접 편찬하거나 특정 기관에 위탁하여 편찬하는 제도이다. 현재 우리는 국정의 전 도서를 특정 기관에 위탁하여 연구·개발형으로 편찬하고 있으며, 일부 도서는 위탁 기관을 공모하고 있다.
- 2) 검정제는 교과서 제작에 국가가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방식으로, 민간이 저작한 교과서를 국가 기관이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정한 후 합격된 도서라 하더라도 부적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자로 하여금 수정하게 하는 제도이다.
- 3) 인정제는 교과서의 사용에 국가가 관여하는 방식이기는 하나, 민간 저작 도서에 대하여 국가 기관이 사용 여부를 심사, 결정하는 제도이다. 현재 우리는 방송통신고등학교 등 극히 일부의 도서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관여하여 심사하고 대부분의 도서에 대해서는 인정권을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고 있으며, 한 시·도에서 인정받은 도서는 다른 시·도의 학교에서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 4) 자유 발행제는 국가가 교과서의 저작이나 사용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는 방식이나, 국가 또는 지방 정부에서 정한 교육과정 기준에 따라 교과서가 집필된다는 점에서 제약이 전혀 없다는 의미의 자유 발행제는 거의 없다.
- 5) 초·중등 교육법 제 29 조 제 1 항

#### 6) 세계 각국의 교과서 발행 제도

구 분	해 당 국 가
국정제	핀란드, 필리핀
검정제	독일,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이스라엘
인정제	미국, 호주, 벨기에, 이탈리아, 캐나다
자유 발행제	영국, 스웨덴, 덴마크
검정·인정제 병행	스페인, 러시아
국정·검정제 병행	중국,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국정·자유 발행제 병행	뉴질랜드, 스위스
국정·인정제 병행	파라과이, 인도네시아
인정·자유 발행제 병행	프랑스
국정·검정·인정제 병행	한국, 일본, 멕시코

- 7) 국립의 각급 학교나 방송통신고등학교에서 사용할 인정 도서만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에게 위탁하여 인정하고 있음.
- 8) 영국의 경우 학교교육평의회, 너필드 재단 등 전문 연구 기관과 일반 교과서 출판사, 영국방송공사 등이 경쟁적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해 왔으나, 1988년에 이르러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교육개혁법안(Education Reform Act)'을 제정하면서 교육부 장관의 부령으로 정하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National Curriculum)을 도입하고, 이를 토대로 각 지방 교육당국 및 학교에 교육과정에 대한 책무성을 부여하게 되었으며, 2000년 8월부터는 다시 개정된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있다.
- 9) 당해 학교 내에서 해당 과목의 교원 자격을 가진 교원 3인을 지정할 수 없을 경우, 인근 학교 교원 위촉도 가능함.
- 10)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 14 조 제 3 항 참조
- 11) 제 7 차 교육과정에서는 보통 교과와 선택 과목은 중전의 60 과목에서 79 과목으로, 전문 교과는 378 과목에서 445 과목으로 확대되었다.
- 12) 교육인적자원부(2003. 4), '우리 교과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홍보 자료) 참조

# 교과서의 편찬·발행 - 급격한 변혁은 금물

■ 글 / **곽상만**(전 한국교육개발원 수석연구위원)



## 1. 역사적 배경과 교육적 환경을 중시하는 편찬, 발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

가. 프랑스, 영국 등 서구식 발행 제도의 도입은 시기 상조

**프**랑스의 서남부를 여행하다 보면 보르도 지방을 중심으로 광활한 포도밭이 전개되는 농업 지대를 지나게 된다.

프랑스 하면 우선 떠오르는 것이 예술의 나라, 질 좋은 화장품을 생산하는 나라, 축구를 잘 하는 나라인데, 한편으로 첨단 기계류와 무기류를 생산하여 세계 굴지의 열강 대열에 우뚝 서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호랑이 담배 피우듯 면면히 농사짓기를 계속하는 전통적인 농업 국가이기도 하다. 프랑스는 참으로 여러 방면에서 잘 짜여진 이상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원동력은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수년 전 프랑스의 교육부와 초·중·고교를 돌아다니면서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사용 체제를 살펴본 일이 있다.

프랑스의 교과서는 철저하게 자유 발행제를 취하면서도 교육과정(programme)만은 중

앙 정부에서 제정하고 관장하는 강력한 중앙 집권적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즉, 초등 교육이나 중등 교육

의 조직 체계와 단계별 교육 목표는 정부령인 교육 기본법에 의해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고, 교육과정 역시 부령으로 전국 공통의 것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국가적 수준의 교육과정 내용은 교과서의 취지, 교과목의 목표,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과정의 개발 및 개정을 위한 연구 기관으로 교육부 산하에 INRP(Institut National de Recherche Pédagogique)가 있다.

여기에서는 교육과정의 개발뿐만 아니라 평가와 보급까지도 담당하며, 이 교육과정은 공·사립을 막론하고 모든 학교에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프랑스인이 선호하는 ‘자유’와 ‘다양성’도 이 틀 속에서만 허용되고 있다.

역사상에 나타나는 로마 제국, 루이 14세의 전제 왕정, 나폴레옹 통치 등 전통적 중앙 집권적 경향 때문인지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르게 획일적이고 중앙 집권적인 교육과정 체제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교과서 제도만은 매우 자유로우며

동양권에서와 같은 검정 제도는 없다. 교과서의 민주적 발전 단계를 국정 → 검·인정 → 자유 발행제라고 할 때, 프랑스는 이미 오래 전부터 그 최종 단계인 자유 발행제를 취하고 있는 선진형 국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채택을 위한 선정 제도만은 엄격하여 지역 학구의 선정위원회, 학교별 운영위원회, 교과별 교과위원회 등에서 교과서의 선정을 위한 심의를 거치게 하고 있다. 출판업자는 위험 부담을 감수하는 경우, 어떤 교과서이든지 이를 출판할 수가 있다.

프랑스에서의 교과서는 ‘교과서를 가르친다’라기보다는 ‘교과서로도 가르친다’는 정도의 약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교과서는 교육의 보조물 또는 하나의 자료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교과서에 대한 법적 정의도 없으며, 우리나라처럼 교과서의 사용 의무가 법적으로 규정된 일도 없다. 교사는 자기 수업에 효과적이라고 판단할 때 다른 교재나 교구와 함께 교과서도 사용하게 되며,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외국어 등과 같이 일반적으로 교과서의 사용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교과서의 경우라 할지라도 학습 주제에 따라서는 전혀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고 수업을 진행시키기도 한다.

1920년대에는 프랑스에서도 교과서 중심주의 수업 방식이 수업 현장을 휩쓸어 교육부에서는 아동 중심의 활동주의 교육을 권장하고, 교과서에 의존하는 교육을 삼가라는 통달을 내리기까지 하였다고 한다.

오늘날 교과서의 위치가 약화된 인식의 흐름 속에서도 프랑스는 그 특유의 합리성과 심미성으로 애매모호한 것을 배척하고 합리적인 것을 추구하여 교육과정이 제시하는 지육, 덕육, 체육 등의 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의 틀을 잘 잡아가고 있다.

교과서를 집필하는 장학관이나 교수 및 교사들은 교육과정의 취지에 위배되지 않도록 원고를 쓰고, 출판사들은 교과서에 대한 연구와 개선을 거듭하여 교과서라는 학습 자료의 적합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교과서를 채택하는 교사들은 교과서 이외의 다양한 학습 자료들을 활용하여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교육적 배려가 긴 역사 속에서 자연스럽게 조성되어 왔다. 그들의 이러한 제도는 결코 일조일석에 도입된 것이 아니다.

근자에 프랑스나 영국 등 서구식 자유 발행제의 도입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와는 다르게 특정한 저자나 단체가 써 낸 교과서를 자유롭게 채택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인지는 몰라도 교과서의 자유 발행제에 대하여 떠도는 말이 들려오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의 역사적 배경과 교육적 환경으로 보아 이것은 아직 시기 상조이다.

#### 나. 우리에게 맞는 발행 제도의 유지, 발전

프랑스의 자유 발행제는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일조일석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장구한 역사 속에서 정연하게 이루어진 결과이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의 그 나라로서는 합리적인 제도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대만 등 전통적으로 국정과 검·인정제를 취해 오고 있는 국가에서는, 교과서가 교육 현장에서 차지하는 위치나 교과서관(教科書觀)이 프랑스나 영국의 그것과는 사뭇 다르다.

우리가 성급하게 교과서의 자유 발행제와 같은 변혁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우리의 국가

적, 사회적 교육 환경으로 보아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임은 자명하다.

이것은 우리의 사회적 환경과 교육 환경이 프랑스나 영국과는 달리 불안정하고 열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불안정하고 열악한 환경 위에 다시 자유 발행제를 도입하면 그 불안정성이 더욱 심화되어 갈피를 잡기 어렵게 될지도 모른다.

다음으로 논의되어야 할 일은 우리의 열악한 출판 환경이다. 우리 나라에는 불행하게도 교과서 전문 회사가 없다. 잘 팔리지도 않는 잡다한 학습 자료를 교과서와 함께 출판하는 영세한 출판사들이 대부분이다. 자유 발행제를 도입하는 경우,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뛰어들 수 있는 충분한 재력과 편찬 능력을 갖춘 교과서 전문 회사가 없는 것이다. 능력 있는 교과서 전문 회사의 육성은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영국이나 프랑스에서는 교과서와 교과서 이외의 학교용 도서와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고, 교실 수업에서도 이 양자를 명확히 구별해서 수업을 전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교과서의 편찬, 발행에 있어 채택 부수가 불확실하고 저작 기간이 길며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드는 교과서 사업은 상당한 투기를 수반하는 것으로 교과서 회사들에게 인식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로서는 우선 자유 발행제로의 발전 전단계인 검·인정 제도의 확대를 도모하는 일이 바람직하고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 2. 국정 교과서는 검정 교과서로 전환하고, 검정 교과서는 검정 과정을 보완, 개선해야 한다.

### 가. 검정 교과서의 확대

전통적으로 국·검정제를 병행해 온 한국, 일본, 대만 등 동양권에서는 일본은 이미 30년 가까운 옛날부터 초등 학교용 전 교과서를 국정에서 검정으로 전환시켰고, 대만도 20여 년 전인 1982년부터 초등 학교용 교과서를 예체능·미로과(美勞科) 교과서부터 단계적으로 검정 교과서로 전환시켜 현재는 초등 학교 1, 2, 3학년의 전 교과와 4, 5, 6학년의 예체능·미로과(美勞科) 교과서가 검정 교과서로 전환되고 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국정제를 취하고 있는 나라는 공산주의 국가와 그 위성 계열 국가, 그리고 일부 후진국뿐이며, 민주 선진국 중에서는 오직 한국만이 초등 학교의 교과서를 전부 국정으로 발행하고 있다.

국정 교과서가 갖는 장점도 있지만, 교육의 다양성과 경쟁을 통한 질 좋은 교과서의 개발을 위해서는 검·인정 제도가 바람직하며, 국정 교과서의 몇 가지 장점을 내세워 검정으로의 전환과 확대를 가로막을 수 없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국정제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국가가 의도하는 바를 신속하게 교육할 수 있다는 점과 국가에서 마련한 교육과정의 정신을 다른 교과서 제도에서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고, 교과서 발행에 따른 재화의 낭비 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교과서를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가장 큰 단점으로는 획일적이고 지나친 통제(統制)의 결과, 교과서가 지역 사회 학교의 실정에 맞는 탄력성 있는 교육을 저해한다는 점, 즉 교과서의 내용이 일률적이어서 다양성이 결여되고 다양한 개성을 신장시키는 교육을 하기 어렵다는 점과, 무엇보다도 교과서의 질 개선을 위한 경쟁 체제가 없다는 점이다.



**상설적인 교과서 연구 기구가 필요하다. 교과서 전문 출판사 또는  
저작자들로 이루어진 교육과정 또는 교과서 연구 기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 교과서 전문 회사에 교과서 연구실을 설치하고 충실한 자료를 모으게 하는 한편,  
교과서의 조사 연구,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할 필요가 있다.**

검정 교과서는 발행 전에 교과서의 원고본을 심사하여 다수의 출원본 중에서 경쟁을 통하여 선발하고 합격한 것에 한하여 교과서를 출판, 보급할 수 있게 하는 것이며, 획일화된 국정 교과서의 단점을 보완하고 다양성 있는 교과서를 채택할 수 있게 한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동남아 제국에서와 같이 통제가 심한 검정 기준을 가진 국가에서는 교과서의 종류는 많지만 내용면에서 다양성이 결여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통제를 통한 획일화를 지양하고,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는 국정 → 검정 → 인정 → 자유 발행의 단계를 점진적으로 거쳐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나라의 검정 교과서는 국정 교과서보다는 다양성이 반영되고 저작자들의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민주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으며, 교육의 민주화라는 기본 원칙에 입각하여 검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때, 좋은 교과서가 생겨날 수 있다.

자유 발행이나 자유 채택이 민주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우리 나라와 같이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상대와 접경하고 이념적인 갈등이 있는 환경에서, 그리고 다양한 세계관, 가치관이 혼재하는 상황에서는 당장에 실시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제도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우선 너무 오랫동안 유지해 온 국정 교과서의 빚장을 개방하여 검정 교과서로의 문호를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 나. 검정 방식의 보완, 개선

검정 교과서를 보다 좋은 교과서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 구체적인 방책들이 제기될 수 있다.

첫째로, 상설적인 교과서 연구 기구가 필요하다. 교과서 전문 출판사 또는 저작자들로 이루어진 교육과정 또는 교과서 연구 기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 교과서 전문 회사에 교과서 연구실을 설치하고 충실한 자료를 모으게 하는 한편, 교과서의 조사 연구,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검정 교과서의 검정 방식을 보완해야 한다. 지난번의 검정에서와 같이 한 교과서의 검정을 학년별로 3년에 걸쳐 실시하는 것은 집필 체계의 유지와 자료 정비 등 되풀이되는 부담으로 집필자나 출판사에게 큰 고통을 안겨 주는 결과를 초래한다. 심사 기간을 좀더 단축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종래의 전체적 일시 검정이든 수시 검정이든 간에 그러하다. 그리고 과목별 검정 합격 종수의 결정을 심사위원회에 전적으로 위임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필수와 선택별로 수요의 과다에 따라 사전에 당국이 면밀하게 검토하여 과목별로 7~8종 이내라든지 또는 4~5종 이내 등의 가이드라인을 심사위원회에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난번의 검정에서처럼 심사위원의 성향에



창의성이 풍부한 교과서가 좋은 교과서라고 하면서도 검정 결과를 보면  
창의적인 교과서가 보수성을 띤 교과서보다 반드시 유리하다고 할 수 없으며,  
심사위원의 보수성이 강한 경우, 오히려 불리한 경우도 있다.

따라 어느 과목은 수요가 적은 것인데도 10여 종, 어느 과목은 수요가 많은 필수 과목인데도 4~5 종이 1차 검정에서 합격되는 모순을 드러내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교과서의 가격 산정이나 채택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셋째로, 심사위원의 선정 방법을 개선, 보완해야 한다. 심사위원은 당연히 해당 교과에 대한 학문적 조예가 깊어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교과서의 문장 표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한 예를 들면, 모든 교과서에서 광복 후 50여 년 동안 띄어 써 온 ‘우리 나라’를 ‘우리나라’로 붙여 쓰라고 수정 지시를 한다거나, 본문에 나오는 1000 단위 이하의 1,000 단위에 (,)를 찍으라고 하는 따위의 수정 지시는 현행 교과서의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모르는 데에서 오는 부지(不知)의 소산이다.

‘우리 나라’를 띄거나 붙이는 게 단순하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모든 교과서에서 띄고 있는 것을 어느 교과서에서만 붙여야 되겠는가? 그리고 다른 교과서에서는 안 나온 이런 수정 지시가 왜 그 교과서에서만 나오는 것인지? 나와 같은 집필자의 입장에서는 수정본을 제출해야 하는 시간에 쫓기면서 한 책에 수십 군데도 아닌 백여 군데나 나오는 ‘우리 나라’를 띄었다 붙였다 할 때, 거의 모든 쪽들을 다시 손질해야 하고, 필름도 다시

만들어야 하는 ‘헛된 일’을 거듭하게 되니 역정이 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따위의 수정 지시는 이상의 예 이외에도 많다. 교과 전공의 심사위원이 잘 모르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수정 지시를 걸러서 내보내는 장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 번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은 보안과 공정을 위해 거듭 심사위원으로 위촉되는 사례가 없어야 하며, 출원자와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같은 교과 담당의 심사위원도 배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난번의 검정에서는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다.

넷째로, 검정 교과서의 검정 규정에서 창의성에 대한 점수를 더 높이고, 획일화를 강요하는 규제를 완화시켜야 한다.

창의성이 풍부한 교과서가 좋은 교과서라고 하면서도 검정 결과를 보면 창의적인 교과서가 보수성을 띤 교과서보다 반드시 유리하다고 할 수 없으며, 심사위원의 보수성이 강한 경우, 오히려 불리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창의성에 대한 배점 비율을 높여야 하며, 교과서관이 변함에 따라 교과서도 하나의 학습 자료라고 볼 때,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을 기르는 학습이 될 수 있도록 교과서의 내용이나 체재를 종래의 교전관(敎典觀), 독본관(讀本觀)에서 벗어나 써 넣고, 채색하고, 응답하게 하는 등 획일화를 강요하지 않는 다채로운 체제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24

# 교과서 제도 현안-경제 논리로 해결

■ 글 / 정동호 (두산동아 교과서사업국장)



## 1. 들어가며

먼저, 교과서 제도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고 출판계를 조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은 필자가 이런 자리에 나서 공연히 별집을 건드리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앞선다.

교과서에 관여하는 조직과 집단은 실로 다양하다. 이 중에서 주체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정부와 교육계, 그리고 출판사이다. 교과서에 대한 시각은 이들 간에 차이가 있다. 정부나 교육계는 당연히 공익적 측면을 중시하지만 출판사는 경제성과 수익성을 함께 추구한다.

출판사는 교과서를 발행하는 주체이면서도 사업자라는 연유로 교과서 제도에 대하여 수동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고,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되기 쉽다. 또 출판사들 간의 이해 상충으로 한 목소리를 내기가 어렵다. 교과서 제도에 대한 출판계의 쟁점은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지만 쉽게 표출되지 않는다.

교과서 제도에 대한 출판계의 이러한 쟁점들을 방치하면 교과서 개발과 공교육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 출판계에 잠수해 있는 현안들을 수면 위로 끄집어내고 공론화시켜서 풀어 보자.

출판계의 당면 현안과 행동 특성을 교과서 제도에 반영하는 것은 교과서의 질 담보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출판계의 교과서 제도에 대한 주요 쟁점은 경제적 효율성과 공정성이다. 이 둘은 때로는 상충하지만 잘 접합시키면 상승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 접합점을 찾아보는 것이 본고를 일관하는 취지 중의 하나이다.

교과서 제도는 정책에서 시행 절차에 이르기까지 교육과정에서 편찬, 검정, 발행, 유통에 이르기까지 종횡으로 연결되어 있다. 한 부분에서 발생한 현안은 다른 부분에 두루 영향을 끼친다.

국정제, 검·인정제, 자유 발행제 등 교과서 제도 정책에 관해 논하는 것은 필자의 역량에서 벗어난다. 여기서는 검정 도서를 주대상으로 하여 필자가 제도적 현안이라고 느낀 것을 몇 가지 제시하고 그 대안도 함께 논의해 보기로 한다. 이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임을 밝혀 두며, 이견이 있거나 치졸한 측면이

있더라도 해량하시기를 바란다.

## 2. 교과서 제도 현안과 과제

### 가. 검정 제도의 기본 현안, 책별 이익금의 균등 배분

검정 도서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발행사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공급하며, 이익금 분배 등 주요 방침은 회원사들의 의결로 결정한다.

책별 이익금은 발행 부수에 따라 배분하기도 하고, 발행 부수와 무관하게 발행사들이 똑같이 나누기도 하며, 이 두 가지를 조합하기도 한다. 제6차 교육과정기까지는 발행 부수에 따른 차등 분배와 발행 부수와 무관한 균등 분배를 조합했으나, 제7차 교육과정기에서는 완전 균등 분배제를 택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같은 과목의 교과서에서 발행 부수가 십만 부든 천 부든 상관 없이 발행사에게 이익금을 똑같이 분배하는 것이다. 당연히 발행 부수가 많은 발행사들은 이익금의 균등 분배에 대한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익금 균등 분배가 발행사 간의 갈등에 그치지 않고 교과서의 질 담보를 어렵게 하고 그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점에 있다. 다음에 그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째, 시장 경쟁이나 퇴출의 여지가 없어져 교과서의 질 담보를 검정 심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 검정 심사를 강화하더라도 질 담보는 초기에 국한되는 반면, 심사 기간과 비용, 행정 부담이 늘어나고 교과서의 다양성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

둘째, 검정 심사만 통과하면 일정 수익이 보장되므로 무분별한 검정 출원을 조장한다. 무분별한 출원은 제한된 전문 인력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저해하고, 개발비를 양등시키기도 한다. 또, 검정 심사에서 탈락할 경우 출판사는 투자 비용을 전혀 회수할 수 없게 된다. 출판계는 물론, 국가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낭비를 유발하는 것이다.

셋째, 이익금이 발행 부수나 투자액과 무관해지므로 지속적인 질 개선 투자 의욕이 줄어든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상시적인 교과서 개선이나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기대하기가 어려워지며 그 피해는 학교 교육에도 미친다. 하향 평준화는 검정 도서의 해결 과제이기도 하며, 그 원인을 이익금 균등 분배가 제공하고 있다.

넷째, 편수 및 발행 관리에 부담을 주고, 예산 낭비를 가져온다. 심사를 통과한 검정 도서는 사용 시한이 만료될 때까지 발행하게 된다. 과목당 합격 중수가 아무리 많더라도 실제로 교과서로서 기능하는 것은 5종 이내에 불과하므로 실제 수요가 없는 교과서를 관리하는 데 상당한 노력과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

다섯째, 이익금 균등 분배는 전문 발행사의 출현이나 교과별 전문화를 저해한다. 교과서가 발전할수록 기초 연구가 중시되고, 개발 인력 규모가 커지며, 유통, 생산 체계를 갖춘 출판 시스템이 요구된다. 또, 전문 역량을 갖춘 교과 영역에 집중 투자할 것을 요구한다. 유감스럽게도 검정 도서의 발행 현실은 이러한 시류에 역행하고 있다.

출판사는 또한 기업인 이상 이윤 창출을 통해 재투자를 하고 조직과 인력을 유지한다. 우리 나라의 검정 도서 시장은 매우 영세하다. 총 발행 금액 규모가 1천여 억 원에 불과하나 발행사는 70개사에 가깝다. 게다가 과목별 검정 도서 수는 많고 수익금은 균등 분

배를 하다 보니 재투자는 엄두조차 내기 어렵다.

앞에서 열거한 부작용은 책별 이익금을 발행 부수 비례로 분배하면 저절로 해소된다. 즉, 시장 경쟁 체제가 가동하여 출판사와 저자는 자발적으로 교과서의 질과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힘을 쏟게 된다. 이것은 다시 학교 교육의 개선에 기여하게 되고, 교육 당국의 편수 관리나 발행 관리 부담도 줄어든다. 시장 퇴출 기능이 작용함에 따라 검정 심사도 과중한 질 담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며, 교육 현장의 요구에 맞춘 다양한 교과서의 개발을 유도할 수 있다. 한편, 시장 도태를 통하여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고 출판사별로 전문화가 진행되며, 교과서의 구입 예산도 절감된다.

미국이나 일본같이 교과서 전문 출판이 발달한 나라의 경우, 발행 부수와 관계 없이 이익금이나 인세를 똑같이 나눈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 나. 검정 도서 선정의 공정성 제고

검정 도서에 있어서 시장 논리를 도입하거나 책별 이익금을 발행 부수 비례로 배분하는 전제 조건으로 교과서 선정(채택) 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 문제가 거론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검정 도서의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검정 도서의 최종 합격이 결정되면 전시본을 안내 자료와 함께 학교로 보낸다. 학교에서는 담당 교사들이 전시본을 검토하고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과서를 선정한다.

이와 같은 검정 도서의 선정 방식은 교과서를 사용하는 주체인 교사와 학부모의 검토,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절차상 큰 하자는 없다고 본다. 다만, 교과서 선정에 할당된 기간이 짧아 충분한 검토를 하기 어렵다거나 매년 교과서별로 수정·보완 사항을 비교하여 평정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전시본의 발송을 통한 채택에는 많은 비용과 시일이 소요된다. 대안으로 인터넷 홈 페이지 등을 통해 검정 도서 견본, 연도별 수정 내역, 선정 안내 자료 등을 제공하거나 지역 교육청 단위로 매년 전시회를 개최하는 방법 등을 제시할 수 있다.

교과서 선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 중의 하나는 교사용 시디롬, 청각 자료 등의 무상 제공이나 안내 자료 배부 등에 대한 시시비비다. 경쟁 제품을 비방하지 않는 한 홍보 관측은 허용된다. 전자 제품에서 매뉴얼, 부속물, A/S 등을 제공하는 것은 누구나 당연하게 여긴다. 교과서의 경우에도 공공재이므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기본 입장은 다르지 않다고 본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멀티미디어 등 교수·학습 자료의 사용을 강조하고 있으나 검정 도서에서는 배제되었다. 제도적으로 공급 책임이 출판사에게 떠맡겨진 셈이며, 학교측도 이를 당연시하고 있다. 아무튼 교수·학습 자료의 무상 제공은 출판사에게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히고, 유통 질서를 해치는 부작용이 없지 않다. 이러한 문제는 교과별로 필수적인 교수·학습 자료를 교과서나 지도서에 첨부하면 간단히 해결될 수 있다. 학교 현장과 출판계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교과서 선정을 둘러싼 잡음도 방지된다.

시·도 또는 지역 교육청 단위로 관내 학교에서 사용할 검정 도서를 일괄 선정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다. 이 방식은 검정 도서 선정위원회에 다양한 전문가를 참여시킴으로

써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여지나,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재량권을 제한하고 교육의 획일화를 유발하는 등 부작용이 더 클 수도 있다. 이 밖에 검정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교과서별 특징을 작성하고 이를 일선 학교에 공개하여 검정 도서 선정 과정에서 참고토록 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어떤 방식을 도입하든 검정 도서의 선정은 교육 현장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학교 또는 지역 사회의 여건에 적합한 교과 운영을 유도하고 지역별 교육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며, 나아가 국가 교육 경쟁력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일부의 우려와 달리 오늘날 교과서의 주된 선정 기준은 교과서의 질과 학습 지도의 편의성, A/S 등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검정 도서의 책별 이익금이 발행 부수 비례로 분배되면 각 발행사는 질과 서비스 경쟁에 치중하게 되어 오히려 선정(채택) 부조리가 발붙일 여지가 적어질 것이다.

출판사들도 유사한 교과서로 경쟁하기보다는 학습 전략이나 수준, 제재 등의 차별화에 힘써 각기 독자적인 고객층을 확보하는 것이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교육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검정 도서제의 취지가 자유 경쟁에 근거한 질 담보와 다양한 기술에 있다면 그 기초가 되는 수익 분배나 검정 심사 정책이 이를 지원하고 유도해 나가야 한다. 다만, 자유 경쟁에서 야기될 수 있는 과열 경쟁에 대해서 적절한 통제 수단을 강구하는 것은 검정 도서 제도가 해결해야 할 부차적인 과제다.

#### 다. 교과서에 대한 멀티미디어·청각 자료 등의 포함

제7차 교육과정의 특징 중 하나는 멀티미디어 및 청각 자료 등의 활용을 강조한 것으로서 매우 적절하고 진취적인 조치라고 판단된다. 문제는 이들 자료가 검정 도서 지정 공고에서 누락된 데서부터 시작된다. 검정 도서는 교육과정과 집필 지침에 맞추어 멀티미디어 및 청각 자료의 활용을 전제로 편찬되었지만, 교사나 학생들에게 이들 자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외국어과의 경우 청각 자료가 거의 판매되지 않는 것을 볼 때, 상당수의 학생들이 듣기 공부를 사교육에 의존하거나 불법 복제물을 이용한다거나 아예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멀티미디어 자료의 경우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교과에 따라서 무가 또는 유가로 공급되기도 하지만 질 또는 저작권 담보 측면에서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많다.

교과서를 제외한 수업용 공교육 교재 시장은 열악하다. 검정 도서의 경우 여러 출판사들이 분할하게 되어, 교과서당 사용 학교 수는 수십 내지 수백 개교에 불과하다. 시장은 좁은데 개발비는 많이 들고, 단가도 높아 학교의 예산이 구입을 뒷받침하지 못한다. 나아가 교과서에 부수된 교수·학습 자료는 발행사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다. 시장 판매 경험 자체가 없어 유통 경로가 형성되어 있지도 않다.

지식 정보 사회가 성숙해 갈수록 교육 매체가 다양해지고, 다루어야 할 정보의 양도 많아진다. 머지않아 전자 교과서의 도입도 예견된다. 현재의 상황을 출판계의 노력만으로 타개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제도적인 시장 개입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 중에서도 가장 시급하고도 경제적인 대안은 교과별로 꼭 필요한 멀티미디어 또는 청각 자료를 시장 유통

이 정착될 때까지 교과용 도서에 포함시켜 공급하는 것이다. 교과에 따라서는 저작권 문제가 멀티미디어 자료 개발의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들 자료가 교과용 도서로 편입될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해 저작권 보상금만 지급하면 되므로 개발 여건이 호전된다. 교과서 제도는 시장을 통제하는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양하는 기능도 있다.

교과서와 함께 교수·학습 자료를 공급할 경우 창의적인 수업을 저해한다는 시각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교사들이 직접 저작 도구를 이용하여 수업 자료를 만든다는 것은 기술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서 교과서와 함께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가 세트로 제공되어 수업에 활용된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교실 수업 개선에 필요한 교수·학습 자료는 발행사와 교육 기관이 역할을 분담하여 제공하는 것이 저작권 해결이나 질 담보에 유리하고 공급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즉, 교과서에 직접 관계된 것은 발행사가 유가로 공급하고, 범교과적·범교과서적인 것은 교육 관련 기관이 무가로 제공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그 동안 제 7차 교육과정의 정착을 위해 교사 증원과 시설 개선에 많은 투자를 해 왔고 가시적인 성과도 거두고 있다. 이제 는 교재, 특히 교과서에 대한 투자에도 관심을 가져 주기를 기대한다. 이 부분은 적은 예산으로 단기적, 가시적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 라. 교과서의 외적 체제 개선

제 7차 교육과정기에 접어들어 국정·검정 도서를 막론하고 외적 체제와 내적 체제 양

면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었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성과이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일 뿐 현재 또는 앞으로 보완될 교육과정의 현장 적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기대되는 교과서 역할과 기능은 무엇인지 심도 있는 고민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교과서가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활동 중심 수업, 수준별 수업, 토론식 수업 등에 용이하게 편찬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와 비슷한 교육과정을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의 교과서와 비교할 때 학습 효과면에서 부족함이 없는지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교과서의 내용 체계가 지식 중심이든 활동 중심이든 관계 없이 진술이 요약적, 추상적일 수록 교사의 수업 부담은 늘어나는 반면,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이 어려워지고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진다. 교과서의 진술 방식 개선과 쪽수 증면만으로도 이러한 문제점은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 교육과정의 개선 정도에 맞추어 교과서의 외적 체제와 기능도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 교과서 구입 예산이 부담이 될 경우에는 대여제의 도입을 모색할 수 있다.

당면한 교육 현안 중의 하나가 사교육비 절감이다. 공교육이 바로 서면 사교육은 저절로 위축된다. 초·중·고를 포함한 학생 1인당 연간 교과서 구입비가 평균 3만 원 안팎에 불과하나 사교육비 지출 규모는 그 수십 배에 달한다. 사교육비 절감 대책의 하나로 교과서의 외적 체제와 기능 개선을 포함시킬 것을 제언한다.

#### 마. 예측 가능한 로드맵 제시 등

흔히 출판 사업을 예측 사업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연구·개발 투자에 있어서 타이밍이



중요하고 투자에 대한 위험 부담도 상대적으로 크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교과서도 출판물인 이상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예측이 가능해야 출판사와 저작자는 사전 준비를 하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교과서의 특성상 예측은 교과서 제도 정책 방향과 그 시행 일정에 터할 수밖에 없다. 이를 뒤집어 보면 교과서 제도에 대한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과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 곧 안정적으로 교과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 된다. 여기서는 이러한 취지에서 검정제 등의 교과서 제도 정책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몇 가지 적어 보고자 한다.

교과서의 개편 방식은 흔히 개편 주기나 범위에 따라서 일제 개편과 수시 개선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일제 개편은 일정한 시기를 정해 두고 모든 교과서를 일제히 개편하는 방식으로 대개는 교육과정의 개정과 더불어 주기적으로 시행되어 왔다. 이 방식은 예측하기가 쉬운 장점이 있는 반면, 개편 작업이 단기간에 집중되어 인력의 수급과 교과서의 질 담보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수시 개선은 교과서의 일제 개정시 나타나 는 낭비와 혼란을 줄이고 제한된 전문 인력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교육과정의 수시 보완을 전제로 할 경우 교과서의 수시 개선은 유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다만, 예측 가능하게 운용되어야 한다. 원칙 없는 수시 개선은 학교 수업, 평가, 입시 등에 혼란을 초래하고, 부교재의 개편과 반품 부담을 크게 하여 출판계에 타격을 줄 우려가 있다. 또, 수시 개선이 검정 심사를 수반하는 개편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수정·보완 작업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현재의 검정 도서 수익금 배분 방식을 개선하

고 수정 비용 보전을 현실화함으로써 출판사와 저작자들이 수시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우리 나라의 검정 도서 제도는 대학 입시와 유사하다. 들어갈 때에는 경쟁이 치열하지만 그 뒤는 방치해도 사용이 보장된다. 앞으로 검정 심사는 완화하되, 시장 경쟁과 도태를 통해 상시적으로 질을 담보해야 한다. 이것이 수시 개선의 취지와 부합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현행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의 틀 아래 언제까지나 수시 개선만 할 수는 없어 보인다. 일정한 시점에서는 교육과정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고, 검정 도서의 기득권 보장 시효 만료 문제나 검정 도서의 신규 출원 허용 문제가 거론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수시 개선은 한시적인 질 담보 수단으로서 교과서의 부분 개편으로 구체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부분 개편 정도는 교과별로 탄력적으로 하되, 개편 시기는 일정하게 하는 것이 출판계나 교육계의 혼란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부분 개편 시에는 검정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교육과정의 전면 개정과 더불어 교과서의 일제 개편을 추진하여 사회의 변화를 수용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은 교과서의 부분(수시) 개편과 교육과정 개정 및 교과서의 일제 개편이 3~6년 주기로 반복되는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교과서의 개편 일정은 학년별 또는 학교급별로 분산시키되, 전면 개편의 경우는 제7차 교육과정기보다 시차 폭을 크게 해야 한다. 교과서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매체가 다양해질수록 교과서의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기간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정책 판단의 준거는 공교육 정상화와 국가 교육 경쟁력의 향상,  
교육 정책 수행의 효율성과 경제성 등에 귀납되어야 한다.

출판사 입장에서 보면 교과서는 성수기와 비수기 간에 인력 수요 폭이 커서 전문 인력의 양성과 유지가 어렵고, 수급 조절도 원활하지 못하다. 학교급별로 개발 기간이 중첩될수록 병목 현상이 심해진다. 일부 고급 인력은 호가가 급등하고 여기저기 겹치기가 성행한다. 따라서, 교과서 개편 물량은 출판사에서 적정 인력을 상시 투입할 수 있도록 안배하는 것이 교과서의 질 담보에 유리하고 출판사의 안정적 경영에도 도움을 준다.

아울러 검정 도서의 경우, 출판사들이 투자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기할 수 있도록 검정 공고 단계부터 수익금 분배 방식 등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앞으로 교과서가 질적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면서 제7차 교육과정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편수 조직의 인력 확대와 함께 상시적인 검정 심사 조직 유지가 필수적이라고 보여진다. 교과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분출할수록 그 기본 설계도가 되는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을 관리하고 보완하는 업무는 중시되어야 한다.

교과서는 모든 부문이 정책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의 투자를 요구한다. 일단 개발된 교과서는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입시, 참고서, 나아가 사교육 전반에 영향을 끼친다. 이와 같은 교과서의 특성과 위상을 고려할 때 교과서 제도 정책에 대한 정책 방향과 일정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면서도 의미 있는 일이다.

### 3. 나오며

교과서는 공공재인데다 시장은 한정되어 있고, 교과서의 생산과 발행에는 서로 이해가 다른 다양한 집단이 직접, 간접으로 관여한다. 이들 간의 상충 관계를 조절하기 위해 정부는 교과서 제도를 통해 시장에 개입하게 된다. 교과서 제도의 현안은 상대적일 수밖에 없지만 대개는 교과서관의 차이,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괴리, 제도 입안 시점과 적용 시점의 교육 환경차, 의견 수렴 부족 등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교과서 제도가 교과서에 관여하는 모든 집단이나 단체의 이해를 충족시킬 수는 없으며, 출판계도 여기서 예외일 수는 없다. 정책 판단의 준거는 공교육 정상화와 국가 교육 경쟁력의 향상, 교육 정책 수행의 효율성과 경제성 등에 귀납되어야 한다. 공평성도 중요하지만 경제적 효율성도 중요하다. 적어도 교과서를 하향 평준화시키는 조치나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일은 없어야 한다.

필자는 교과서 제도 정책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 지향적으로 전개되기를 기대한다.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이 국민 모두에게 고통을 주고 있고, 외국 교과서의 수입이 늘어나고 있으며, 매체의 발달이 기존의 교과서 시장 판도를 뒤흔들 위험이 상존하는 시점에서 교과서와 그 준거틀인 교과서 제도의 역할은 크다. 교육 당국과 교과서 관계자 모두가 대국적인 견지에서 교과서를 발전시키는 데 지혜를 모을 때라고 생각한다. ㉨

# 검정 교과서 편찬 과정상의 문제점 개선

■ 글 / 정용환 (천재교육 편집이사)



## 1. 들어가는 말

요즘 학교에 교과서를 가지고 다니지 않는 학생들이 꽤 많다고 한다. 심지어는 교실 바닥에 교과서가 떨어져 있어도 줍지 않고 밟고 다니는 학생도 있다고 한다. 과거에는 수업 시간에 교과서를 가져오지 못하면 옆반 친구에게 빌려서라도 수업을 했던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요즘에는 교과서가 왜 이렇게 학생들에게 천대받게 되었을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교과서의 현장성·현실성 부족일 수도 있고, 멀티미디어 시대에 교과서의 시대성 부족이 한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전자는 교육 제도 및 교육과정과 관련이 깊고, 후자는 교육과정 및 교과서 편찬과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다.

이에 필자는 교과서 편찬 과정별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며, 이것을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이 공론화되어 차제에 합리적인 제도가 만들어지고 시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그럼으로써 학생들이 교범으로 가지고 다니며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교과서가 편찬되기를 아울러

기대해 본다.

## 2. 검정 교과서 편찬 과정상의 문제점

### 가. 교육과정의 개정

검정 교과서는 교육과정을 근간으로 편찬된다. 교육과정은 교육인적자원부 고시로 개정·고시되는데, 교육과정에는 과목별 내용뿐만 아니라, 구성 방향, 교육 목표,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 편성과 운영 지침 등이 제시되어 있다. 세부 과목별로는 성격과 목표, 학년별 내용, 교수·학습 방법 등이 제시되어 있다. 이는 검정 교과서를 개발할 때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 사항으로서, 이를 위반하면 검정본은 교과서로서 빛을 보지 못하고 폐지신세가 되고 만다.

그런데 문제는 교육과정의 내용에 대한 이견이 있거나 이해하기 어려울 때 발생한다. 이러한 갈등이 있을 때 관계 기관에 문의하면 원칙만을 강조할 뿐 자세한 설명이나 안내가 미흡하다. 따라서, 교과서 저자나 편집자는 추리 또는 상상하여 교육과정 내용을 해석하고 집필 및 편집에 적용하게 된다. 이

에 따라 엉뚱한 내용이 서술되는 경우도 있다. 물론 ‘교육과정 해설서’라는 것이 있지만, 이것이 교과서 편찬이 끝난 다음에 발행되는 경우가 많아 편찬 과정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 교육과정은 현실성, 실현 가능성, 현장성을 바탕으로 개정되어야 마땅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교과서 따로, 현장 교육 따로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그 예로서 제 7차 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인 수준별 교육과정을 들 수 있다. 이것은 평균화반 학생들을 심화 학습과 보충 학습으로 나누어 수준에 맞게 수업을 한다는 취지 아래 도입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학교 선생님들께 문의해보면 교육과정의 취지대로, 또 교과서의 내용에 따라 수준별 수업을 한다는 교사는 거의 없었다. 즉, 교과서 따로 교육 따로라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과정 개정시에 어떤 교육 이론을 내세우기에 앞서 교육 현장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부터 현장 교사의 참여 비율을 높여 현실성 있는 교과서 편찬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과정 개정에서 있어서 비용 투자를 과감히 하여 교육과정 연구자와 개발에 참여한 이들의 시간과 노력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하고, 우리는 아낌없는 후원과 응원을 해야 할 것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있듯이 교육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바라보고 설계를 해야 한다. 장기적인 안목이란 측면에서 교과서의 뼈대가 되는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에는 교육과정 개정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이 위원회에서는 다양하고 급속히 변화하는 시대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먼 미래를 내다보고 이를 예상하고 반영하여 학

문의 기초를 세울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 개정위원회가 사명감을 가지고 앞날을 내다보면서 미리 준비하여 예산을 세우고 투자하도록 하여야 한다. 과거의 어느 교육과정 공청회 때는 “예산이 부족하여 개정에 참여한 전문가들에게 보상은 제대로 하지를 못했지만, 그런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된 것이 오늘 발표하는 교육과정입니다.”라고 사회자가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교육과정 개발만큼은 그 어느 분야보다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의 교육 현실을 직시하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면서 교육과정만은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는 제 8차 교육과정 개정을 하지 않고 수시 개정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하였지만, 얼마나 제대로 된 교육과정 개정이 되어 우리 교육의 앞날에 튼튼한 뼈대가 될 수 있는 새로운 교육과정이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다. 왜냐 하면, 교육과정의 발전 없이는 교육의 발전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선진국들은 교육과정 개발에 오랫동안 연구하여 투자하고 있는 데 반하여, 우리 나라는 수시 검정이란 제도가 또 하나의 시행착오를 불러오는 교육 제도가 아닌지도 한 번쯤 되짚어 봐야 할 것이다. 또, 교육과정을 수시로 개정할 만큼 현실적 여건 속에서 쉽게 개정할 수 있는지도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 나. 검정 실시 공고

검정 교과서 개발에 앞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각 일간지를 통해 이를 공고한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사항, 즉 검정 일정과 검정 과목이 공시된다. 이러한 공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검정 계획을 밝히는 행위로, 교육

인적자원부(정부)의 대국민 약속과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이 내용은 교과서 편찬에 참여하는 출판사에게는 법적 강제력을 갖게 되는데, 검정 공고시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

첫째, 검정 일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우리 나라 검정 교과서 역사상 처음으로 교과서 검정 교과서 개발이 몇 개월 연기됨으로써 공고 내용과 다르게 교과서 편찬이 진행된 적이 있었다. 즉, 제6차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 학교 교과서 검정시에 ‘자율 학습을 위한 교과서를 만든다.’, 즉 참고서가 필요 없는 교과서를 만든다는 취지 아래 검정 심사본 제출 마감일 십여 일 전에 갑자기 교과서 제출을 연기한다는 교육부의 통보가 발표되었다. 그 결과 당시 야근과 철야 작업을 하던 편집자들과 저작자들은 함께 일손을 놓고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 교과서 심사본 제출 직전이라면 목숨을 걸만큼 마무리 작업에 몰두해 있던 시점이다. 이 때의 긴박한 상황은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미묘하다. 그 때는 검정 교과서 편찬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지어 작업 중에 세상을 떠나신 분도 있을 만큼 극도의 긴장과 피로가 쌓여 가던 시점이었다.

교과서 검정 작업이란 교육계 몇 분이 참여하는 간단한 일이 아니라 수많은 인력이 참여하는 중대한 사업 중의 하나이다. 왜냐하면, 각 교과서마다 집필자 여러 명과 검토 인력 등 수많은 고급 두뇌들이 검정 교과서 편찬에 참여하여 밤낮으로 시간을 투자하며, 교과서 출판업계의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작업을 마칠 때까지 자신의 모든 사생활을 희생해 가며 검정 일정에 맞추어서 살아가게 된다. 따라서, 심사

본 심사 기일이란 한 번 고시된 이후에는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연기되어서는 아니 되며 반드시 지켜져야 할 약속인 것이다. 비록 학생들에게 더 좋은 교과서 공급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검정 일정을 변경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둘째, 검정 교과목이 일찍 확정, 공고되어야 한다. 교과서 검정 교과목이 확정되고 검정 공고되면 교과서 검정 출원을 준비하는 회사에서는 좋은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다. 교과목별로 유능한 저작자를 모시기 위해 경쟁을 하고, 개발에 필요한 국내외 자료와 정보를 수집한다. 그 이외에도 교과서 개발에 유능한 편집 인력을 확충하고, 디자이너와 삽화가를 섭외하는 등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한다. 편집자가 교과서를 진행하는 방법이란 편집자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교과서 작업을 진행한다. 따라서, 회사가 우수한 편집자를 확보하면 교과서 작업에서 저작자에게 가장 유리하게 되므로, 저작자는 회사별 편집자의 현황을 검토한 후 최종 선택을 하게 된다.

출판사에서는 우선 어떤 분들과 공동 작업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한다. 왜냐 하면, 교과서는 한 과목일지라도 혼자서 진행하는 작업이 아닌 전공 분야별로 영역을 나누어서 집필하고 검토하는 공동 연구에 의한 결과물일 때 좋은 교과서로 평가받기 때문이다. 유능한 집필자들이 모였다고 해서 좋은 교과서가 되는 것이 아니다. 교과서 작업이란 단기간에 끝마치는 일이 아니고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작업이기 때문에 과목별 팀워크가 중요한 요소가 된다. 즉, 공동 작업에 참여하는

집필자마다 교과서에 대한 생각과 의욕이 각각 다르고 작업 분위기가 잘 어울리지 않아서 진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뼈저덕 거리는 일이 종종 일어난다. 한 예로, 어느 경험 많으신 교수님께서 교과서 집필 계약서에 농담으로 “지금은 웃으며 시작을 하지만 작업시에는 내용의 오류를 검증하면서 핏발을 올리게 되니 잘 생각해서 계약서에 서명하십시오.”라고 말씀하시던 기억이 난다. 즉, 저작자 간의 팀워크가 잘 어울리지 않으면 검정 심사에서 실패할 확률이 높고, 실패한다면 그 동안 쏟았던 많은 노력이 물거품되어 허망하기 짝이 없는 휴지 조각 교과서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다.

저작자 입장에서는 교과서를 집필하려면 어느 회사와 계약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회사의 지원 여하에 따라 작업의 능률과 검정 교과서 합격의 지름길이 판가름나기 때문이다. 즉, 검정 교과서란 저작자와 편집자, 회사의 3박자가 잘 어울려서 아름다운 화음을 낼 때에 좋은 작품이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검정 교과목을 일찍 확정하여 발표할수록 저작자와 회사는 이에 대비한 만반의 준비와 사전 작업을 하게 되므로 더욱 질 좋은 교과서가 개발될 것이다.

#### 다. ‘집필상의 유의점’ 발표 시기

집필상의 유의점에서는 교과목별 편찬 방향과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과 특징 등을 설명하고, 각 과목별 교과서 내용의 선정, 조직, 수준과 범위, 분량, 교수·학습 방법, 표현 등을 구체화하여 제시한다. 이 밖에도 교사용 지도서의 구성 체제, 지도의 실제 및 내용 해설, 기타 유의 사항 등을 제시한다.

교육과정은 골격상의 주제들만이 제시되어 있지만, 집필상의 유의점은 집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들이 모두 나와 있으므로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를 시작하려면 판형, 색도, 쪽수가 확정된 집필상의 유의점이 발표되어야만 한다. 즉, 교과서 작업은 이것이 발표되어야만 배정된 쪽수를 확정하고 분할을 하게 됨으로써 집필을 시작할 수 있다. ‘집필상의 유의점’은 교과서 편찬의 지침에 해당한다. ‘집필상의 유의점’ 배포는 곧 교과서 집필의 출발을 알리는 총 소리가 되는 셈이다.

‘집필상의 유의점’의 배포 시점은 빠르면 빠를수록 바람직한데, 늘 검정 출원 시점에서 1년이 채 안 되어 배포된다. ‘1년 내에 좋은 교과서’를 만들어 내기란 시간이 매우 부족하고, 교과서가 줄속으로 만들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차제에 그 배포 시기가 크게 앞당겨져야 할 것이다.

특히, 검정 교과서는 교육과정을 잘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리 배포된 집필상의 유의점을 잘 해석하고 적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검정 교과서의 집필에 관한 모든 조건은 이 집필상의 유의점을 잘 충족시켜야만 검정에 합격할 수 있다. 왜냐 하면, 검정 심사에서 제시된 심사 기준을 보면 거의 집필상의 유의점에서 발표된 항목을 심사 기준으로 설정해 놓은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즉, ‘집필상의 유의점’은 집필은 물론 검정 심사의 근간이 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 라. 교과서 편찬 작업

집필이 시작되면 교과서 편집 작업이 함께 진행되는데, 크게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편집에서는 집필시에 필요한 자료들



을 그 동안 미리 메모하였다가 단위별로 선정된 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저자에게 일방적으로 자료 수집을 맡기는 것보다는 편집자와 함께 자료를 수집하고 준비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또, 편집자는 집필자가 의도하는 집필 계획표를 함께 공유하여 집필자의 집필 의도와 진행 일정을 예상함으로써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제공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모든 집필을 저자에게 일방적으로 일임하는 형식보다는 편집자와 협의하여 함께 지원을 얻어 집필을 시작하는 것이 훨씬 알차고 효과적인 집필 방향이 된다.

둘째, 편집자는 디자이너를 섭외하여 교과서의 외형적인 디자인 구상과 함께 본문 디자인에 대한 세부적인 협의를 먼저 진행하여야 한다. 이 교과서의 목표와 성격을 잘 반영하고 어떻게 디자인을 해야 학생들의 학습 효과를 올릴 수 있고 교육과정의 의도를 살릴 수 있는지 여러 각도에서 토의를 거쳐야 한다. 편집자는 교과서 체제에 따른 디자인 방향을 디자이너와의 긴밀한 의견 교환을 통해 방향을 설정하고 목표를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어느 한 사람의 일방적인 의도보다는 편집자와 디자이너의 합의에 의한 전체적인 교과서의 분위기를 정한 다음, 각 요소별 디자인 형태를 큰 것에서부터 점차 작은 요소로 확정지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 때의 디자인 구상 단계에는 집필자도 함께 참여하여 그 의견을 제안하고 반영함으로써 교과용 도서에 참여한 여러 사람의 아이디어를 모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 디자인은 꾸준히 검토하고 수정하여 최종 단계에서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여러 전문가의 의견과 학생들의 선호

도까지 감안하여 수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셋째, 편집에서는 내용 교정을 진행한다. 여기서 교정이란 개념상의 오류뿐만 아니라 체제상의 오류를 함께 찾아서 수정한다. 집필자와 꾸준한 검토를 통해서 적합한 수준을 맞추고 오류를 찾아 내어 수정하며, 또 이것을 수없이 반복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는 검정 교과서의 헌법이라고 볼 수 있는 교육과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법률이라고 볼 수 있는 집필상의 유의점을 잘못 해석한 부분은 없는지를 가려 내야 한다. 이 때 혹시 일부분이라도 문제가 된다면 재집필을 의뢰하여 그에 적합한 문장으로 재진술을 하여 완전한 원고를 만들어야 한다. 이는 검정 교과서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일로, 저자의 원고를 거의 들어온 상태 그대로 편집을 하는 것은 결과가 뻔한 불합격이 되기 십상이다.

넷째, 편집자는 원고가 진행되면서 삽화가를 선정하고 사진가를 섭외하여야 한다. 선정된 삽화가와 사진가는 편집에서 검토를 한 후 확정된 내용부터 삽화 목록과 사진 목록을 작성하여 구체적인 작업 일정 계획을 세운다.

삽화 목록이 완성되면 삽화 원고를 작성하여야 한다. 본원고의 삽화를 기본도로 하고, 그와 유사한 자료를 수집하여 참고도로 하여 삽화 원고를 만든다. 이 때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하고 내용과 적합한 부분이 잘 표현될 수 있도록 클로즈업한다. 삽화 원고는 삽화가가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하고 검토를 하여야만 수정이 적다.

특히, 삽화는 시간이 많이 투자될 뿐만 아니라 수정이 어려우므로 한 번에 정확하게 그려 내서 수정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

요하다. 따라서, 삽화가에게 삽화 원고를 발주할 때에는 여러 상황과 장면을 상세히 설명한 후 이해를 시켜서 작화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스케치한 것이 내용에 알맞은가를 재확인한 후 채색을 하여 완료한다. 삽화가 완료되면 순서대로 교정지에 담아서 내용 검토시 수정 사항이 없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교과서 내용에 필요한 기타 자료들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수록하며, 모든 과정에서는 각 단계마다 재확인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집필 원고에 사진, 삽화 및 기타 자료 등을 모두 넣고 조판하여 교정을 마친 후에는 이것을 필름으로 출력하여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또, 교과서의 부속물을 정리하여 최종적으로 모든 조건에 부합하는가를 차례대로 검증함으로써 심사본을 인쇄하여 마무리한다.

이러한 교과서의 작업 과정에서 저작자와 편집자에게 나타나는 문제점은 곧 교과서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 (1) 저작자의 문제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편찬기에는 연차 검정의 시행에 따라 새롭게 나타난 저자 문제가 있다. 즉, 중학교 1학년에 합격한 저자는 3학년까지 동일한 저자만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다른 필자는 한 명도 교체할 수 없는 제도가 생기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여러 명의 저자 중 어느 한 분의 원고가 심각한 우려가 있을 정도이거나, 어느 한 분이 불가피한 사정이 생긴 경우에도 오로지 그분한테만 집필을 하게 하고, 그분의 인감도장만으로 심사본 제출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집필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생겨서

다른 대필자가 대신 작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저자의 승낙 없이는 제출을 하지 못하는 웃지 못할 제도가 나오게 되었다.

그 이유는 출판사가 임의로 저자를 교체하게 되면 교과서를 연차적으로 개발할 때 합격된 교과서 개념의 연계성과 체제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회사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처음 합격을 한 후 이듬해부터 최종 합격할 때까지 오히려 연계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회사가 더 노력을 한다는 것이다. 교과서의 집필에 역행하는 형편이 생겼는데도 원저자만을 3년간 고수하다 보니 해마다 교과서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오히려 연차적 개발을 하지 않고 예전처럼 한 해에 세 권을 모두 개발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의견을 제안하는 저작자들도 많이 있었다.

연차적 개발을 하면 집필 기간이 길어서 좋은 원고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 작업에 너무 지쳐서 오랫동안 매진할 수가 없다고 한다. 또, 초기의 집필 의욕보다는 지루한 작업을 몇 년간 계속 작업한다는 것이 교과서의 집필에 심각한 부담을 주는 것이 사실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초기 집필자의 일부는 교체할 수 있는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표 저작자와 회사의 만장일치로 동의를 구하여 집필에 어려움이 있는 필자는 일부를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 (2) 편집자의 문제

교과서를 편찬하는 출판사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교과서와 학습용 참고서를 펴내는 회사, 다른 하나는 교과서만을 펴내는 회사이다. 대개 규모가 큰



회사는 전자에 해당하고, 규모가 작은 출판사는 후자에 해당한다. 다시 전자의 경우는 교과서 편집자가 교과서만을 편집하느냐, 아니면 교과서와 참고서 편집을 병행하는가에 따라 나눌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자의 업무량은 크게 달라진다. 그런데 규모가 큰 출판사의 대부분은 교과서와 참고서 편집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출판사에 근무하는 편집자의 업무량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많다.

이에 덧붙여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편찬기부터 연차 검정을 시행하였다. 교과서 편집자가 교과서 검정 출원 이후 교사용 지도서 연구, 편집일 만으로도 과중한데, 교사용 지도서는 물론 다음 학년의 교과서 편집, 학습 참고서 편집이 줄을 잇고 있다. 편집자는 1년 내내 야근과 철야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형편인 것이다.

이러한 생활을 4년 동안이나 하게 되는 교과서 편집자는 매우 피로하다. 축적된 피로는 건강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집중력을 떨어뜨려 업무 효율을 크게 저하시킨다. 업무 효율의 저하는 곧 교과서 질의 저하를 의미한다. 또, 그 영향은 사회 생활의 부적응으로 인한 낙오나 갈등, 동료 및 상하 간의 갈등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정확한 통계는 아직 없으나,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편찬 과정에서 그 이후에 출판사를 떠나는 유능한 편집자가 많았던 것도 이러한 문제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그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 원인을 들 수 있겠으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정부로부터 지급되는 교과서 편찬에 대한 대가가 적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적은 대가는 적은 투자를 유발하고, 적은 투자는 편집자의 과로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부실

한 교과서 편찬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각 교과서 출판사에 보다 많은 교과서 편찬에 따른 보상을 하고, 이것이 전문 편집자의 양성 및 권익 보장에 채투자되도록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 마. 교과서의 심사

검정 심사본을 제출하여 심사를 할 때에는 심사본과 함께 심사 서류를 제출한다. 검정 교과서의 제출을 위해서는 인쇄본 중에서 깨끗한 것만을 골라 반드시 검본을 해서 심사본을 골라야 한다. 검본은 인쇄본 중에서 페이지 확인 및 인쇄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골라 내고, 완전한 상태의 것만을 확인하여 추리는 작업으로 검본에서 고른 것을 심사본으로 제출해야 한다.

한 예로, 중학교 어느 과목의 심사에서는 마지막 검본을 잘못하여 한 대수(16 쪽)가 누락된 교과서를 심사에 제출하였는데, 심사위원이 이를 발견하고 구제 대상의 논란이 되었다가 최종 심사에서 결국 불합격된 일이 있었다. 이 경우 회사와 저작자는 그 사실을 몰랐지만 참으로 가슴아픈 검본 사건이었다.

또,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서 심사본에 백지가 있을 경우에는 잘라 내고 제출을 하는 규정이 있다. 심사본 제출장에 가서야 그 규정을 알게 되어 면도칼로 백지 한 장을 잘라 내다가 실수로 인해 다음 페이지의 차례까지 잘려 나가고 나니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어쩔 줄 몰라 하던 한문 교과서 제출자도 있었다.

심사본 제출장에서 보면 서류 미비나 기준 미달로 인한 지적 사항을 받아서 다시 준비해야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 특히, 이러한 일 중 가장 안타깝게 하는 것들 중에는 저작자의 인감 도장의 날인이 있다. 모든 서류에

는 저작자의 인감만이 통용되고 자필 서명이나 다른 어느 것도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외국인 저작자는 도장을 만들거나 예외로 서명을 인정하기도 하는데, 이 서류들 중에서는 군데라도 인감과 일치하지 않으면 심사본을 받아 주지 않는다. 제출 마감일에 인감 도장이 틀려서 급히 저작자에게 연락하여 인감 도장을 다시 받아 오려면 애간장이 녹는 듯한 안타까운 사연들이 연출되고, 어느 사람들은 심사본 제출장에서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있었다.

교과서 심사본은 1차 합격 후 2차, 3차 심사가 있는데, 합격본에서 수정 사항을 표시하기 위해 책 상단에 간지를 붙이는 규정이 있었다. 심사위원이 수정된 페이지를 찾는 데 편리하도록 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수정 페이지가 심사표에 적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사표에 있는 항목의 일련 번호를 적어 넣은 간지를 심사본 상단에 붙여서 제출하였다. 이것은 단순히 심사의 편리를 위해 중복이 되는 규정을 만들어서 엄청난 피해를 준 사례이다. 수정 항목이 많고, 심사본이 여러 권일 경우에는 기계적이고 단순한 작업, 즉 내용의 질과 전혀 관계 없는 작업으로 많은 에너지 낭비를 해야 했다.

앞으로는 이런 심사본 제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경우들을 사전에 공문으로 자세하게 알리거나 인터넷으로 열람하게 하여 불편을 줄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또,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줄이고, 심사 양식을 간소화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교과서의 행정적인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사소한 규정이라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일 때 회사와 저작자는 낭비하는 에너지를 모아 좋은 교과서를 편찬하는 데 집중할 것이다.

#### 바. 교과서의 수정 단계

우리가 흔히 ‘교과서적’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교과서가 어느 책보다 편찬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 오류가 거의 없는 완벽한 책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교과서는 오류가 가장 적은 책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데도 교과서가 다른 책보다 수정이 많다면 의아할 것이다. 왜냐 하면, 교과서는 처음 만들 때 아무리 완벽하다고 해도 해마다 수정을 하지 않으면 오류가 많은 엉터리 교과서가 되고 말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사회 과목의 경우 해마다 지명, 용어, 행정 구역, 법률 등이 바뀌게 되는데 교과서도 시기에 맞추어 이런 변화를 적용시켜야만 한다. 이와 같이 검정 교과서가 합격시 완벽하더라도 매년 새로운 오류가 생길 수 있으므로 오류 없는 교과서를 위해서는 해마다 수정 작업을 꾸준히 해야만 한다. 수정 작업은 각 회사에서 수정을 도맡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교과서의 수정 및 관리 과정에서 상당한 오류가 생길 수 있다.

첫째, 저자가 투자한 시간에 대한 보상이 너무 작아서 교과서 수정까지는 관심이 적다. 즉, 집필자가 합격이 된 이후에도 교과서의 오류를 찾고 수정할 수만은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내용 검토와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교과서 저자의 인세가 교과서 작업에 투자한 시간과 노력만큼 보상(인세)이 현실화되지 않은 데서 가장 큰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처럼 교과서 저작자들에게 대한 보상이 적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보아 교과서 정가가 다른 도서에 비해 너무 낮으며, 학생 수에 비해 교과서 종수가 너무 많고, 교과서 작업에 걸리는 시간이 너무 길다는 데 원인이 있다.

우리의 교과서가 학생들에게 환영을 받으며, 수업에 잘 활용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와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즉, 교과서라는 나무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주위의 환경을 그에 알맞게 잘 조성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 교과서 수정 작업에서는 수정비가 현실화되어야만 한다. 수정비가 너무 적어서 처음 편찬 작업을 하던 때처럼 몰두하여 투자할 수가 없다. 수정비가 꼭당 수정 원가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수정을 많이 할수록 회사는 손해를 보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느 회사든 많은 인건비를 투자하면서 수정을 완벽하게 처리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나마 현재 수정을 잘 하는 회사는 규모가 큰 일부 회사들만이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수정 업무를 충실하게 처리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와 같이 수정비가 적다 보니 회사는 적극적으로 교과서를 검토하여 완벽하게 수정을 하지 못하고, 수정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매년 교과서 수정에만 매달릴 수가 없는 실정이다.

셋째, 회사가 교과서만 편찬하는 전문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교과서를 만들던 편집 담당자가 있는 경우에는 나름대로 수정을 하겠지만, 편집자가 없는 회사일 경우에는 어쩔 수없이 비전공자들이 수정을 대신할 수밖에 없다. 이 때 교과서 수정 작업을 완벽하게 처리를 하지 못하여 생기는 오류가 있고, 수정 과정에서 제대로 확인을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오류가 있다. 이것도 원인을 분석하면 교과서 저자가 시간 투자에 대한 보상이 적은 것과 마찬가지로 교과서 회사도 투자에 대한 수익이 너무 적기 때문에 편집 인원을 감원하거나 수정 작업을 하는 인력을 보유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그러므로 오류가 적은 교과서가 되기 위해서는 편찬 과정에서의 오류뿐만 아니라 출간 이후에도 끊임없는 검토와 수정이 필수적으로 뒤따라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 저자와 회사가 사명감만을 가지고 할 수만은 없으며, 여러 가지 제도적인 뒷받침이 뒤따라야 양질의 교과서를 편찬할 수 있을 것이다.

### 3. 맺는말

우리 나라의 교육과정이 해방 후부터 7차에 걸쳐 개정을 하면서 교과서도 그에 따라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으로도 좋은 교과서를 꾸준히 개발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으며,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가 많다. 우리의 교과서가 학생들에게 환영을 받으며, 수업에 잘 활용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와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즉, 교과서라는 나무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주위의 환경을 그에 알맞게 잘 조성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오늘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라도 질 좋은 교과서 개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인식을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과서가 오류가 거의 없는 바람직한 제품이 되기 위해서는 점차적으로 작은 규칙부터 골격을 이루는 교육과정까지 꾸준히 연구하고 투자하여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새로운 교과서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23

# 교과서 검정제로의 전환 모색

■ 글 / 한명희 (용인대학교 겸임교수)



## 1. 문제 제기

초 등 학교 교과서는 건국 후 50여 년 동안 별다른 이의 없이 국정 교과서 체제로 운영되어 왔다. 그것은 국정 교과서가 국민 공통 교육의 이념을 구현하는데 용이하고, 교과서의 질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할 수 있고, 교과서를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국정 교과서는 학교 교육의 획일화라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초등 학교에 검정 교과서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그 동안 교과서 출판사, 교과서 저술을 희망하는 교과 전문가, 일부 학자들이 초등 교육의 자율화와 다원화를 위하여 초등 교과서의 검정제 도입을 간헐적으로 요구하여 오다가 1992년 1월, 한국 2종 교과서 협회에서 ‘제 6차 교육과정 시행에 대한 건의문(2교협 제 133호)’을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면서 공론화되기에 이르렀다.

이 건의문 제 1항에서 “국민 학교의 예체능

교과와 중학교 및 고등 학교 정책 교과 외는 2종 도서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검정 도서의 대상을 확대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교육부는 1992년 9월, 제 6차 교육과정을 고시하고 1995학년도부터 새 교육과정을 적용하게 되었다. 이 때, 초등 교과서의 검정화가 검토되기는 하였으나 새 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업무 폭주로 초등 학교 검정 교과서(예체능 교과) 도입 문제는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제 6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개발이 한창 진행되던 1994년 말경에 당시 교육부 장관이 교과서 제도 개선책의 일환으로 초등 학교 교과서의 검정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여, 편수국 실무진에서는 행정 연구 보고서를 통하여 1종(국정) 교과서를 2종(검정) 교과서로 대폭 전환하기로 하고, 당시 개발 중인 1종(국정) 교과서는 새로 개발되는 2종(검정) 교과서와 일정 기간 함께 사용하고, 다음 교과서 개편 때에는 국정 교과서는 개발하지 않으며, 검정 도서로 전환하는 교과목은 1995년 중에 발표하겠다고 보고하였다.

아울러 초등 교과서의 검정제 도입을 위하

여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도록 건의하였다. 당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4조에는 국민 학교 교과서는 모두 1종(국정)으로 발행하도록 되어 있어 동 규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계화, 국제화에 부응하여 창의와 자율, 경쟁을 통한 다양한 교과서를 제작·발행할 수 있도록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1995. 1. 23.)을 입법 예고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1종, 2종 교과서를 각각 국정, 검정으로 명칭을 환원하고, 국정을 검정으로 대폭 전환하기 위하여 “국정 교과서는 교육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목에 한하여 따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었다.

그러나 협의 과정에서 1종, 2종 교과서의 명칭은 그대로 두기로 하고, 1종(국정) 교과서 대상도 교육부 장관이 필요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 문공부(국어심의회)의 반대로 ‘국민 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과목 중 국어와 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의 교과서와 지도서’로 수정하여 1995년 7월 20일,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14740 호)이 개정되었다.

이 규정 개정으로 초등 학교 교과서도 국어를 제외하고는 모두 검정 교과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적 뒷받침이 마련되었다. 이렇게 추진되던 초등 학교 검정 교과서 도입 방안은 1995년 5월 교육부 장관의 경질로 사실상 사장되기에 이르렀다. 참고로 밝히면 동 규정은 2002년 6월 다시 개정(대통령령 17634 호)되어, 1995년 입법 예고하였던 대로 1종 도서는 국정 도서로, 2종 도서는 검정 도서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검정 대상도 “국정 도서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의 교과용 도서로 한다.”로 바뀌었다.

그러나 1995년 개정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초등 학교 교과서로는 처음 영어가 검정 교과서로 발행되어 1997학년도(3학년)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997년 12월, 제7차 교육과정이 고시되고,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다시 초등 학교 교과서의 검정화 문제가 다시 제기됐다. 교육부는 1999년 3월 ‘교육 발전 5개년 계획(시안)’에서 초등 교과서의 검정화를 추진한다고 밝히고, 구체적인 방안으로 2000년까지 검정 도서로서의 전환을 위한 실행 방안을 연구하고, 2001년에 검정 기준을 마련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는데, 2004년부터 새로운 검정 교과서를 사용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계획에 의거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2000년 12월에 한국교과서연구재단에서는 ‘초등 학교 교과서의 검정제 도입 방안 연구’ 보고서(연구 책임자 조난심)를 내놓았다.

또, 교육부에서는 2000년 12월에 발행한 교과서 백서에서 “우리 나라 교과서 발행 제도의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초등 학교 교과용 도서가 1종 도서로 되어 있는 등 아직까지 교과서의 획일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발행 체계로는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요구하는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르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 곧, 국가 발행제를 실시하고 있는 교과서는 검정제로 전환해 나가고, …… 점차 초등 학교 국가 발행제 교과서들은 검정제로 전환해 나가도록 한다.”라고 초등 학교 교과서의 검정제 도입을 서두르는 듯하였으나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다.

## 2. 논의 자료 검토

### 가. 교과서의 국정제와 검정제

현재 우리 나라 교과서 제도의 주축이 되고 있는 국가 발행제와 국가 검정제를 비교, 검토하여 보자.

#### (1) 국가 발행제

국정제는 국가가 직접 교과서를 제작, 발행하여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로, 우리 나라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서이며, 연구·개발은 연구 단체나 대학에 위탁하고 있다.

우리 나라 초등 학교 교과서는 국정으로 되어 있으나 보조 교과서 성격을 띤 ‘사회과 탐구’ 등 인정 도서가 일부 사용되고 있다.

이 국정제는 교육 수준과 내용의 체계적인 국가 관리가 용이하고 교과서 발행 비용이 저렴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교육의 획일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 (2) 국가 검정제

민간(출판사 혹은 저작자)에서 개발하여 발행한 교과용 도서를 국가에서 검정을 통하여 교과용 도서로서의 지위를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우리 나라의 검정 교과서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검정을 받은 것을 의미하며, 현재 중, 고교에서는 영어, 수학 등 다종의 검정 교과서가 사용되고 있으나 초등 학교의 경우는 검정 교과서는 한 권도 없다.

이 국가 검정제 교과서는 국가 발행제의 단점을 보완한 제도로써, 민간의 창의를 통해 다양한 교과서의 발행이 가능하고, 교육의 다양성을 지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교육 내용의 관리가 국정제에 비해 어렵고, 발행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 단점이다.

2003년 7월 말경에 문제가 되었던 ‘한국 근·현대사(고등 학교 검정 교과서)’의 경우처럼 검정 교과서는 내용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적지 않다. 물론 교과서의 다양한 기술은 검정제 교과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의 하나임에는 틀림없으나 아직도 단한 교과서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단점으로 보일 수도 있다.

‘교과서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로’ 배운다는 열린 교과서관이 확산되면 될수록 초등 학교 교과서의 검정제 도입은 빨라질 것이다.

### 나.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의 변천

○ 국정 교과용 도서 편찬 규정(대통령령 제 337 호. 1950. 4. 29.)

국민 학교, 공민 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정규 과목의 교수를 위한 학생용 도서 및 교사용 도서는 국정으로 한다.

○ 교과용 도서 검인정 규정(대통령령 제 336 호. 1950. 4. 29.)

검정은 국민 학교, 공민 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제외한 각 학교의 정규 교과용 도서에 대하여 행한다.

○ 교과용 도서 저작·검인정령(대통령령 제 3018 호. 1967. 4. 17.)

국정 교과서 편찬 규정과 교과용 도서 검인정 규정 통합

○ 교과용 도서 저작·검인정령(대통령령 제 6281 호. 1972. 7. 11.)

검정 교과서의 내용 검토를 매년 실시할 수 있게 함.

○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 8660 호. 1977. 8. 22.)

— 교과서 구분(명칭)을 달리함.



국정 도서 → 1종 도서 : 연구 개발형  
 검정 도서 → 2종 도서 : 자유 경쟁형,  
 개인 저술형

—1종 도서 위탁 개발 근거 제시

-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 14740 호. 1995. 7. 20.)

1종 도서(국정)는 ‘국민 학교, 중학교 및 고등 학교의 교과목 중 국어(고등 학교는 독본에 한함.)와 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의 교과서 및 지도서로 한다.

\* 초등 학교도 검정 교과서 제도 도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중, 고교도 국어 이외 과목은 모두 검정제 도입이 가능하게 됨.

-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 17634 호. 2002. 6. 25.)

—교과서 구분(명칭)을 환원함.

1종 도서 → 국정 도서

2종 도서 → 검정 도서

—국정 도서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의 교과용 도서로 한다.

\*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직접 뜻이 전달 안 되던 교과서 구분(명칭)을 직접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환원하였다. 또 초, 중,

고교 모든 교과서의 검정제 전환이 가능하게 됨.

#### 다. 중학교 검정 대상 과목 변화 추이

그 동안 초등 학교는 의무 교육 기관이기 때문에 국민 통합 기능을 고려하여 국정 교과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같은 의무 교육 기관인 중학교는 검정 대상 과목을 확대하는 추세이다. 중학교 검정 대상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초등 학교 교과서 제도를 개선하는 데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라. 초등 학교 검정제 도입(안) 검토

‘국민 학교 교과서, 1997년 검정제 전환’(1995. 6. 7. 중앙일보)이라는 기사를 보면 “1997학년도부터 국민 학교 교과서 제작에 검정제가 도입돼 민간이 참여하는 자율 경쟁 체제로 전환된다. 건국 이후 지금까지 국민 학교 교과서는 국민 통합 기능을 고려해 전 과목을 국가가 제작하는 국정 교과서 체제로 유지돼 왔다. 교육부는 6일 국민 학교 교과서 집필과 제작에 민간이 자유 경쟁의 원칙에 따라 참여할 수 있도록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

교육과정기	대 상	비 고
제 1 차 교육과정기	14 과목	도덕, 국어 이외의 교과목은 대부분 검정 교과서 사용
제 2 차 교육과정기	8 과목	초, 중학교 반공, 도덕 생활 신설, 1 차에 비해 검정 축소됨.
제 3 차 교육과정기	국정	중학교 전 교과 국정으로 전환
제 4 차 교육과정기	6 과목	국어, 도덕, 국사 교과서 이외는 검정화가 가능해짐.
제 5 차 교육과정기	9 과목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컴퓨터 교육 강화
제 6 차 교육과정기	11 과목	초등 학교 영어과 신설, 중학교 컴퓨터, 환경 과목 신설
제 7 차 교육과정기	11 과목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설치, 중학교 제 2 외국어 교육 가능하게 됨.

\* 제 2 차 교육과정 적용 시점은 5·16 군사 혁명 직후(제 3 공화국)이고, 제 3 차 교육과정 적용 시점은 유신 헌법 개정(제 4 공화국) 직후이다. 제 4 차 교육과정 적용 시점은 제 5 공화국(전두환 정부) 출범 직후이다.

정'을 이 달 말까지 개정하기로 하고 개정안을 법제처에 제출했다. 교육부는 1997 학년도부터 국교 정규 과목으로 개설되는 영어 교과서부터 검정제로 펴내는 한편, 나머지 과목에 대해서도 연구 및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국정 교과서를 최소화하고 검정 교과서를 확대할 방침이다.”라고 되어 있다. 이 기사는 초·중·고 학교 교과서의 검정제 도입을 추진해 온 당시 교육부의 입장을 그대로 밝힌 것이다.

1994년 말, 편수국에서는 당시 교육부 장관의 지시에 의해 교과서 발행 제도 개선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초·중·고 학교의 경우는 국어, 사회를 제외하고 도덕, 수학, 자연, 체육, 음악, 미술, 실과를 제 6차 교육과정 적용 기간 중에 검정으로 전환하여, 사용 중인 국정 교과서와 병행 사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추진 일정은 아래와 같다.

- 교과서 제도 자문위원회 심의(1995년 1~2월)
-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 준비(1995년 5~10월)
- 검정 공고(1995년 12월)
- 검정 실시(1997년 10월)
- 적용(98 학년도)

이에 따라 1994년 11월에는 ‘교과서 제도 자문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촉(안)’을 장관으로부터 재가를 받기도 했다.

또, 초·중·고 학교 교과서의 검정제 도입 방안 연구(2000. 12.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연구 책임자 조난심)에 의하면 초·중·고 학교 교과서의 검정 전환에 대하여 설문 조사를 한 결과 71%가 찬성하고 있고, 전환 시기는 2004~5년경에 37%(차기 교육과정 시기 36%)가 찬성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검정 대상은 일부 교과에 적용 후 점

차 확대하는 안에 50%가 찬성하고, 도입 교과목의 순서는 영어, 수학, 과학, 미술, 사회, 음악, 실과, 체육, 즐거운 생활, 슬기로운 생활, 국어, 바른 생활, 도덕 순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그리고 상기 연구 도입 방안(결론 부분)에서 검정제를 도입함에 있어, 1단계 교과로 실과, 음악, 미술, 체육을, 2단계 교과로 수학, 과학, 영어를, 3단계 교과로 사회, 도덕, 국어, 통합 교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검정제 도입 및 확대 적용 시기를 현행 국정 도서의 사용 5년 경과 후인 2005년경으로 제시하고 있다.

### 3. 제 언

여러 가치 가운데에서도 ‘인간 존중’의 목적적 가치가 가장 우선되어야 하듯이 교육에 있어서도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은 열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그 동안 국민 교육의 가장 기초가 되는 초·중·고 학교 교육에서 전 교과를 국정 교과서로 지도하여 다양성보다는 획일성을 추구해 온 면이 없지 않다.

학교 교육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획일화 교육인데 우리는 아무런 반성 없이 건국 이후 오늘까지 국정 교과서에 의한 획일화 교육을 해 온 것이다. 물론 국정 교과서가 질이 낮다는 말은 아니다. 질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단일 교과서에 의한 교육은 다양성 교육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물론 국정 교과서에 의한 획일화 교육이 국민 교육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 동안 국정 교과서 제도가 질 높은 교육, 창의적인 교육을 이루는 데 많은 기여도 하

였지만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 면도 없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근자에 와서 초등 교육의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 검정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늘어나고 있으며, 구체적인 연구 보고서에서도 초등 학교 교과서 제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또, 지금은 ‘교과서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로’ 배운다는 교과서관에 많은 사람이 동의할 정도로 교과서관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지금은 초등 학교에 검정 교과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된 지도 10여 년이 지났고, 그 동안 검정제 도입에 따른 장단점, 도입 시기, 도입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연구하여 기초적인 토대가 마련된 만큼 이 시점에서 검정제 도입을 공론화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단안을 내리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될 것이다.

이 글을 마무리하면서 필자의 줄거리를 제언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초등 학교 교과서의 검정 제도 도입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 동안 한두 차례 검정제 도입을 시도하였으나 논의 과정에 머물고, 실천으로 옮겨지지 못한 이유는 교육과정이 마무리되고 새로운 교육과정이 시작될 때를 맞추어 검정 교과서를 발행, 공급하려는 생각 때문에 기회를 놓쳐 왔다.

왜냐 하면, 교육과정이 고시되고 적용되는 데는 대개 2년 내지 3년이 걸린다. 이 기간에는 이미 검정제를 도입했던 교과나 새로 도입하는 한두 교과는 준비가 가능하겠지만 새롭게 초등 학교 교과서의 검정화를 추진하는 데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새 교육과정이 고시되고 난 후에 검정제 도입을 시도하면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다.

필자는 1995년 당시 편수국 실무진에서 검토하였던 대로 검정 교과서를 개발하여 현재 사용 중인 국정 교과서와 일정 기간 병행 사용하다가 새 교육과정이 고시되면 국정 교과서는 사용을 중지하고 검정 교과서만을 사용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면, 2004년 말에 검정 고시를 하고 2006년 말에 검정을 실시하여 2007 학년도부터 새 검정 교과서와 현재 사용 중인 국정 교과서를 한시적으로 병행 사용하고, 차기 교육과정이 적용될 때에는 검정 교과서만 사용하고 국정 교과서 사용을 중지하면 무리 없이 초등 학교에 검정 교과서 제도가 도입되어 정착될 것이다.

둘째, 초등 학교의 일부 교과(실과, 음악, 미술, 체육, 사회과 부도, 영어)를 먼저 검정제로 전환하고, 점차 확대하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부 교과 적용 후에 점차 확대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과서를 저술하거나 교과서 검정에 참여할 교과서 전문가도 부족하고, 출판사도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체능 교과의 우선 도입을 제안하는 것은 예체능 교과의 교과서 활용 빈도가 낮고, 교과서에 낙서 등을 할 필요가 적기 때문에 고본 사용을 확대하거나, 개인별 교과서 소장 제도를 학교용 교과서 제도를 도입하면 적용 첫해는 일시적으로 예산 증액이 필요하지만 다음 해부터는 오히려 예산 절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검정제 도입으로 예상되는 예산 문제는 장애 요인이 되지 않을 것이다.

다음 영어 교과서는 이미 검정제를 실시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선례를 참고하면 검정에 따른 제반 절차를 시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이 검정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25

# 현행 교과서 제도는 공론화 과정으로 개선

■ 글 / 홍후조(고려대학교 교수)



**제** 7차 교육과정기에 들어 교과서의 외양적 체제나 내용의 질적 수준이 많이 향상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과 교사에게 최고 품질의 교재를 발행, 공급함으로써 교육적 성취를 제고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시각에서 보면 교과서 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점은 여전히 적지 않다. 이제 제 7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서 발행, 심사 업무가 일단락되었기 때문에, 그간의 교과서 정책과 관련 문제를 차분히 반추할 때가 되었다.

이 글에서는 교과서를 비롯한 학교 수업용 교재의 정책, 발행 제도, 연구 개발, 발행 후 질 관리, 공급 등에 걸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몇 가지 문제와 그 개선 방안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교과서 발행제 결정의 합리화, 국정 대상의 축소와 검정과 인정 대상의 확대, 교과서 개선 모니터제 구축, 정기 검정제 도입, 전면 개편보다 판 수를 거듭하는 교과서, 검정 교과서의 시장 형성, 교과별 전문 출판사화, 검정 교과서 선정(채택)의 광역화, 1인 1책주의 탈피와 교과별 교재 발행의 형식 다

양화, 사용 후 반납제 확대 등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 1. 교과서 제도와 정책

가. 교과서 발행 제도는 공정한 기구의 공론을 거쳐 적기에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 기준이 고시되고 약 1년 후에 교육부에 의해 교과별 교과서 발행제가 확정·공고되었다.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으로 약칭)’은 국정과 검정 도서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 규정은 결정 주체나 과정에 대해 분명한 언급이 없어 사실상 해당 교과 담당 교육 전문직 인사들이 정하는 관례를 따르고 있다. 이런 관례는 좋은 교재를 연구, 개발하는 시간을 확보하기에는 결정이 너무 늦게 이루어지며, 결정 과정은 공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편이고, 그 결과는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장차 국가 교육과정 기준의 연구 개발과 함께 해당 교과서의 발행제도 함께 제안 공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실 제 7차 교육과정 연구 개발자들은 한 설문 조사에서 절대

**질 높은 교과서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는 예산을 확보해 새로운 아이디어로  
교과서 시장에 진입하려는 신규 군소 출판사들을 육성해 주어야 할 것이다.**

다수가 초등 교과서와 중등 국어, 국사 교과서도 검정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의견을 낸 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공통 기본의 확보 필요성, 국정제의 외부 효과, 검정 도서 구입에 따른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국정을 그대로 고수하였다. 중등 사회가 국정에서 검정으로, 초등 영어는 검정에서 국정으로 바뀌었다. 교과에 따라서는 검정으로 하였음에도 검정에 출원한 출판사들이 거의 없어 검정 자체를 무의미하게 된 경우도 있었다.

무엇보다 ‘규정’을 개선하여 교원, 검정협회, 교과서 연구자와 기관, 출판사, 교육부 인사,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가칭 ‘교과별 교과서 발행 제도 결정 위원회’와 같은 공정한 기구를 구성하여 공론을 거쳐 교과별로 최적의 발행제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전체적으로 국정을 줄이고, 검정과 인정을 늘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우선 공통 필수 교과로서 시장 실패가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초등 교과서와 중등 국어 및 국사 교과서에 대한 검토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같은 초등 교과서라도 예체능 분야, 수학 및 과학 기술 분야를 먼저, 다음에는 국어, 사회 순서로 점진적으로 검정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수 학생이 사용하는 전문 교과서와 특수 학교 교과서 등은 교육 복지 차원에서 국정을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교과서 편찬과 검정에 시간, 인력, 비용을 집중할 수 없고, 교과에 따라 지도서가 없는 경우도 있고, 있더라도 그 사용도가 미미한

교과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지도서는 검정에서 인정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지도서는 교과서를 편찬한 발행사의 후속 서비스 차원에서 발행되고 공급되는 것일 수도 있으며, 전문적인 교원 단체에 의해 자발적으로 마련될 수도 있다. 출판사의 보조 교재로서, 교사들의 자발적인 수업 지도안 개발과 공유를 통해서도 지도서에 해당하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지도서를 검정에서 제외하는 데 대해서는 출판사 관계자들과 교육 전문가들도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함수곤 외, 2002). 꼭 필요한 지도서는 인정 도서로 하되, 교사용이므로 정부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교사에게 무상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국정과 검정 교과서 연구 개발에 대해 정부의 재정 지원을 늘려야 한다.**

국정 교과서의 연구, 개발을 위한 예산은 그간 꾸준히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열악한 수준이다. 연구 개발비, 원고료, 삽화료, 사진료, 개고료, 일반 관리비, 편집비 등은 검정 교과서에 비한다면 형편 없이 낮은 수준이고 국정 교과서 제작에 참여하는 인사들의 희생적 노고에 기반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검정 교과서에 비해 국정 교과서는 전반적으로 질적으로 낮은 편이라는 평가를 듣고 있다. 이런 낮은 질의 교과서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수업의 자료, 학습의 질 향상을 기하려면 국정 교과서는 시장 실패 부분에 한하여야 하며, 국정

교과서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연구 개발비를 검정과 같은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질 높은 교과서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는 예산을 확보해 새로운 아이디어로 교과서 시장에 진입하려는 신규 군소 출판사들을 육성해 주어야 할 것이다. 현재처럼 교과서 판매 대금을 균등 배분하여 잘 만들어 잘 팔리는 교과서 회사들에게 기생하는 관행은 사라져야 하며, 군소 출판사라도 새로운 아이디어와 교과서에 대한 혁신 의욕이 있으면 정부는 연구 개발 계획서를 공모받아 정책적으로 지원 육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장 실패 부분인 국정 교과서의 연구 개발 및 위탁 편찬도 일반 출판사들에게도 공모할 수 있도록 열려져야 할 것이다. 국정 교과서라고 하여 반드시 특정 대학이나 연구소가 편찬할 필요가 없는 것이며, 그 중수도 반드시 한 가지일 필요는 없다. 이런 모든 문제는 ‘규정’을 개정해 연구 개발 예산을 제도적으로 확보,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다. 학교 수업용 교재 정책의 책무성 확립이 요구된다.

교과서를 검정하는 일은 이윤을 동기로 하는 민간 교과서 발행사의 시장 진입을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준사법적 행정 처분 행위이다. 2002년 여름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파동에서 보았듯이, 검정에서 교과서 적부 심사 결정은 저작자, 발행사, 교원과 학생, 학부모, 관련 사회 단체, 의견을 달리하는 학파와 정파 등으로부터 언제나 이의 제기가 뒤따를 수 있다. 이와 같은 쟁점 발생이나 이의 제기 시 교과서 정책 결정과 집행의 분리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여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의 제기를 잘 수용하여 처리하는 안정적 기구와 기관이 필요하며,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검정 제도가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개선의 한 방안은 정책 결정, 정책 집행(검정 실시), 사후 관리는 일관성과 실효성을 위하여 정부가 공공 권한을 배경으로 수행하고, 연구 기관은 정책 집행 대신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교과서 질 향상 및 제도 연구에 집중하는 역할 분담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교육부가 ‘교과서 제도 정책 결정, 집행, 사후 관리’를 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교육과정과 교과서 연구’를 역할 분담하는 것이 한 방안이다. 검정 사업의 시행은 일본의 교과서 조사관 제도, 우리의 국사편찬위원회와 같은 편수국을 별도로 만들어 전담하게 할 수도 있다. 또한, 검정 실시 시기, 국정의 검정으로의 전환 등에 대한 예측 가능한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질 높은 교육용 교재를 연구,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그렇지만 교육부는 이렇다 할 개선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음에도 한꺼번에 검정과 국정 교과서를 전면 개편하게 할 것인가? 교과별·교재별 국정과 검정 및 인정의 구분, 공정한 경쟁 질서와 시장 형성을 위한 각종 단체(예, 검정협회)의 역할, 출판사와 학교 간 교재 채택을 둘러싼 투명한 거래 질서의 확립, ‘규정’에 대한 재검토와 꾸준한 개선 등은 여전히 학교 수업용 교재 정책의 새로운 확립을 요구하는 부분이다.

## 2. 전면 개편보다 판수를 거듭하는 교과서

가. 향상적 질 개선을 위한 교과서 모니터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국가 교육과정 기준의 전면 개정, 교과서의



**전면 개편보다 판수(版數)를 거듭해 나가려면 무엇보다 교과서 사용자, 연구자들로부터  
교과서 내용과 표현, 편집 체제 등에 걸쳐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는 더 나은  
방식을 수집 처리하는 온-오프라인 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전면 개편, 검정의 한정된 기간 안에 심의와 검정의 일시 실시 등은 교과서의 꾸준한 질적 개선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교육과정 기준도 전면, 일시, 단주기적 개정에서 점차 변환을 모색하고 있으므로, 차제에 교과서의 전면 개편 방식도 수정을 해야 하며, 발행 후 질 관리를 통한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교육과정 기준이 전면 개정되면 어쩔 수 없이 교과서 전면 개편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교과서는 교육과정 기준과는 상대적 자율성을 지니고 나름의 항상적 질 관리 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전면 개편보다 판수(版數)를 거듭해 나가려면 무엇보다 교과서 사용자, 연구자들로부터 교과서 내용과 표현, 편집 체제 등에 걸쳐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는 더 나은 방식을 수집, 처리하는 온-오프라인 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홍후조, 2002).

몇몇 발행사들은 교과서를 한 번 공급하고 나면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수용하는 통로를 갖추고 있지 않은 편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손병길 외, 근간) 교사들은 현재의 교과서를 수정, 보완하면 나아질 곳이 많으며, 자신들이 이를 위한 모니터 역할을 적극 하려는 의향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수렴하는 장치가 없다고 한다. 교과서는 사용자들에 의해 개선될 여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장치가 불비하여 개선의 기

회를 놓치고 적당한 수준에서 계속 사용되다가 때로는 교과서 오류에 대한 문제와 쟁점의 제기로 교육력을 낭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과서를 가르쳐본 교원과 연구자들로 하여금 단위별, 주제별, 차시별로 일정 인원을 지정해 교과서를 평가하고 개선안을 제안하는 ‘교과서 개선 모니터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특히, 교사는 가르치면서 발견한 문제점을 교재 발행사나 정부의 교과 담당 관계관에게 수시 통보할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교과서 전문을 웹에 올려 관심 있는 시민, 대학생 등을 ‘명예교과서심의위원’으로 위촉하여 교과서를 상시 분석하도록 함으로써, 더 나은 교재를 만드는 기초 자료를 수집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와 같은 발행사의 교과용 도서 발행에 따른 저수익 구조 아래에서는 발행사에게 모니터 요원 운영비를 비롯한 교과서 개선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현실성이 낮다. 정부에서는 검정 교과서 개선 비용을 정가에 반영할 수 있게 하고, 교과서 판매 이익 배분제를 개선하여 수익금의 일정 비율을 재투자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유도할 책임이 있다.

나. 항상적 질 개선을 뒷받침하는 정기 검인정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교과서 개선 모니터제 등을 통해 교과서가 수정, 보완되면 이에 따라 적기에 검정을 시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차별 검정은 일제 검정보다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는 길은 정기(定期) 검정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정기 검정제가 확립되면 연차별로 적용된 지 일정 기간이 지난 교재들의 개선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완성도가 낮은 교과서의 검정 출원을 방지할 수 있고, 교과서 시장에 신규 진입 장벽을 낮추어 출판사들이 완벽한 준비를 하고 검정에 출원할 수 있으며, 내용과 질에 문제가 있으면서도 개선을 태만히 한 도서는 그 적부를 재심사할 수도 있다. 연차별 검정으로 3개 혹은 2개 학년용으로 짝지어 있어야 할 교과서가 하나밖에 없는 경우, 부적격 판정에 따른 시비를 방지, 불합격 도서를 낸 출판사를 달래기 위한 교육지책으로 재검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또한, 발행사들도 교과서 관련 인력을 상시 구축하고 그 전문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교과 특성에 따라 내용이 안정적인 교과서는 4~6년마다, 내용이 상대적으로 빨리 변하는 교과서는 2~3년마다 검정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교과서 검정 주기를 교과별로 설정하는 것은 사실상 사용 유효 기간을 제도입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전에 교과서 사용 유효 기간이 어째서 교육과정 기준 개정을 유도하였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교과서의 일정 분량과 측면에 대한 수정, 보완이 반드시 교육과정 기준의 개정을 전제로 하지 않도록 ‘규정’을 손질하면 될 것이다. 또한, 교과에 따라 검정보다 인정 형식의 심사를 밟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끝으로 정기 검·인정을 위해서는 편수국과 같은 전담 기구가 요구되며, 복리행정법상의 절차 수수료에 해당하는 검정 수수료를 ‘수수료’의 취지에 맞도록 실

비(實費)로 조정하여야 할 것이고 심사에 드는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교과서의 검·인정 행위는 공교육의 수준 확보와 국가의 교육 정책상 필요한 최소한의 교과 내용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주된 비용은 국민의 조세에서 충당하는 것이 정당하다.

### 3. 검정 교과서의 공정한 경쟁 시장 질서의 확립

검정 교과서 제도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게 지적되어야 할 부분은 검정 교과서 시장의 확립이다. 교과서의 질적 향상을 지속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과별 출판의 전문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거대출판사의 풍족한 자금이 반드시 질 높은 교과서를 제작, 공급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교과서 판매를 통한 이윤이 일정 부분 확보되면 이를 질 개선에 재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것은 분명하다. 제6차 교육과정기에는 특정 교과목에 합격한 검정 출판사들이 총판매 수익 금액에서 60%는 균등 배분하고, 40%는 판매량에 따라 차등 배분하였다. 그러나 제7차 교육과정기에 들어와서는 판매 이익금은 판매량에 관계 없이 균등 배분되었다. 예컨대, 지난 해 중학교 1학년 사회 교과서의 경우, 검정에 합격한 10개사가 674,985부를 주문받아 2,483,515,670 원어치를 팔았으며, 각 출판사는 판매 부수나 정가와 관계 없이 판매에 따른 이익금(수익률 약 13%)을 32,285,704 원씩 검정협회로부터 동등 배분받았다. 결과적으로 221,033 책을 판매한 출판사와 648 책을 판 출판사가 같은 이익 배당금을 분배받았다. 교과서를 잘 만들어 많이 판 출판사나 저작자는 재검정을 거치면서 간신히 합격한 질 낮은 교과서를 낸 출판사와 저작자와 똑같은 금액을 배분받은 셈이다. 결국

교과서 시장은 교과서 제작 및 질 관리를 잘 하거나 못 하거나 보상과 퇴출이 없는, 곧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는 체제를 유지해 오고 있다. 이는 교과서의 질 개선에는 가장 나쁜 방법이다. 이렇게 되면 질 높은 교과서를 내기 위해 노력하는 출판사가 없게 된다. 투기적 검정 교과서 제작과 출원, 재검정 등 비교적 쉬운 검정 기준 통과와 합격, 교과서 판매 대금의 균등 배분으로 연결되는 교과서 시장의 형성을 방해하는 관행과 담합 행위는 교육의 목적과 검정 교과서 제도의 취지에 위배되므로 사라져야 할 것이다.

특히, 민간 교과서 출판사들이 교과서에 이어 참고서, 자습서, 각종 문제집을 발간하여 교과서에 의한 영세한 이윤을 보충하여 왔으나, 학생들이 참고서와 문제집 등을 학원 교재를 중심으로 구입하고 있어 이전처럼 교과서에 의한 적자를 보충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고 있어 자칫 교과서 시장을 방치하면 무너질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정부는 의도적으로 주의 깊게 교과서 시장을 육성,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검정 제도는 점차 정부와 검정 시행 관리 기관의 권위적 개입을 줄이고 시장에 의해 질 높은 것은 보상받고 질 낮은 것은 퇴출되는 시스템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관건은 교과서 판매 수익금의 성과 위주 배분 제도 확립이다. 교과서 판매 이익금의 배분 문제는 교과서 출판의 전문화, 교과서의 지속적 개선을 위한 재투자, 공정한 질 경쟁 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 4. 교과별 전문 출판사화와 발행 형식의 다양화

가. 교과서별로 전문 출판사를 육성, 조장해야 한다.

공정한 경쟁의 시장 질서가 확립되고 합리적 이익 배분 제도는 교과별 교과서의 전문 출판사화를 앞당길 수 있는 전제 조건이다. 질 높은 교재를 생산하고 있는 선진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일부의 교재 발행사들이 교과용 도서를 개발하고 있고, 이들은 검정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집필진, 편집진 등을 확보하고 교재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이미 개발된 도서의 개정판을 지속적으로 발행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교재의 질은 크게 개선되고 있다.

반면에,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검정에 출원사의 대부분이 영세하여 교과서 사업을 1회성 투기 사업 정도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전문적인 집필, 편집진이 상시적으로 확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검정 출원 당시 일시적으로 모여 작업하고 흩어지는 방식이다. 교과별 전문 발행사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검정 실시 공고 때마다 교재 발행의 경험치 일천하거나 없는 영세 군소 출판사들이 완성도 낮은 심사본을 제출하는 관행이 되풀이되어 왔으며, 그들의 편집 전문성 부족과 경험 부족, 영세성으로 인해 교과서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결국 과다한 투자로 인해 파산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기존의 발행사들도 여러 교과용 도서를 한꺼번에 편찬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질이 높지 못하다.

교과용 도서 전문 출판사 육성을 위한 가장 큰 요건은 교과서 발행사의 수익성 보장이다. 교과용 도서 발행사에서 질 높은 교과서 편찬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검정교과서협회나 정부는 합리적인 수익 배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다만, 정부에서는 보장해 준 수익이 다른 곳에

전용되지 않고 오직 교과용 도서의 연구, 개발 및 편집자의 전문화에 쓰일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면 될 것이다.

#### 나. 교과 특성에 따라 교과서 발행 및 공급 방식이 달라야 한다.

현재 교과 특성이나 수업과 학습에서 교재 의존도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교과에 걸쳐 학생이 1인 1책을 소유하고 있다. 특히, 교과서를 주교재로 하여 서책 형태로 개발하고 검정함으로써 주교재를 교과서 형태로 개발할 필요가 없는 것조차 교과서로 개발되고 있다. 특히, 실기, 실험, 실습용 교육 내용이 많은 교과 교재들이 그러하다. 실기, 실험, 실습과 관련한 교과 교과서는 교과 특성을 반영한 오디오, 비디오, 멀티미디어 자료 형태로 개발, 보급되어야 함에도 서책 형태가 주교재가 되고 있다. 이는 교과서 설명 위주 수업을 고정시키는 면도 있다. 컴퓨터 관련 교과와 같이 기술 개발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교과서를 만들지 않는 것이 더 나은 수업 지도를 이끌 수도 있다.

보다 이상적인 미술 교재의 형태도 서책, 명화를 잘 복제한 화첩, 각종 재료, 녹화된 작품 제작 활동 등이다. 보다 나은 기술 교재의 형태는 서책, 모듈과 부품(소재), 제작 및 작동 원리 활동 사진 등이며, 나은 체육 교재는 서책, 운동 기구, 경기와 체조 등 기본 동작과 규칙이 잘 녹화된 것 등이다. 현재와 같은 서책 위주 학교 수업용 교재 정책은 이상적인 교재와는 거리가 있다. 이런 실기, 실험, 실습 교재들은 모든 출판사들이 다 잘 만들 수는 없다. 그 분야에 오랜 제작 출판 경험이 있는 곳에서 고품질의 것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필요한 일은 교과별로 학기나 학년별로 학생별로 1인 1책의 새 교과서를 지급하는 관행을 바꾸는 일이다. 즉, 수업과 학습에서 교과서 의존도가 낮은 교과의 경우 학년별 학기별 1인 1책보다 학급용, 교사용, 학년용, 다학년용, 학교용으로 교재를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생 개인용이 아닌 학교용, 학급용, 교사용으로 만들어 보급해야 할 것이고, 대여 사용 후 반납제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의무 교육기는 국가에서 교과서를 구입 보급하므로, 학급용, 학년용 교재는 국가 재정의 절감을 가져오고, 그 여유분으로 초등 교과서를 비롯한 검정 대상의 확대, 국정 교재 개발의 고급화, 다양한 보완 교재의 구입 보급을 앞당길 수도 있다. 교과서 위주의 단조로운 수업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교재를 연구, 개발하도록 격려하고 이를 학교가 구입 활용할 수 있는 교재 구입 대금을 확보해 주는 데에도 인색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 다. 학교의 채택 후보 교과서 선정을 권역별로 광역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를 전시하고 선정(채택)하기까지 기간은 약 1개월 정도(검토 기간은 15일 내외임.)이다. 소규모 학교에서는 개별 교사가 여러 책을 모두 검토하여 비교, 판단하려면 기간이 짧은 편이다. 단위 학교에서 교과서를 충분히 검토한 뒤, 채택하여 질 낮은 도서를 자연 도태시키는 시장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또한, 교원의 잦은 이동으로 교과별로 교사 수가 소수인 학교는 자신이 참여하여 검토, 추천하고 다른 학교로 옮겨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 개별 학교보다 채택 단위를 광역화하여, 학생수를 감안하여 지구별 자율장학회별로 혹은

**교과서의 질(質)은 정부의 교과서에 대한 관심과 지원, 연구 개발 과정에서 집필진과 편집진의 창의적 노력, 각종 심의 및 검정 심사 과정, 교과서 사용자의 평가 정보 환류, 교과서의 사후 질 관리 등 다원적인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

권역별 채택구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수의 공론에 따라 질 높은 교과서를 공동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통 필수 교과목의 교과서가 1000 책 이하 주문 판매된다면 그런 책의 질은 높지 않다고 상정할 수 있으며, 그런 책으로 학습하는 학생들은 모종의 손해를 보고 있다는 판단도 가능하다. 교과서 출판 전문화와 고품질화를 위해 교과별로 2~5 종 내에서 복수 추천하고 학교에서 현행 절차를 활용하여 채택하도록 하여, 채택 과정에 다수가 참여하여 선택의 타당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교원 단체 등을 통해 교과서 질에 대한 평가 결과를 권장하고, 다양한 사회 단체의 교과서 질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것도 교과서 질을 높이는 방법이다.

요약하건대, 교과서의 질(質)은 정부의 교과서에 대한 관심과 지원, 연구 개발 과정에서 집필진과 편집진의 창의적 노력, 각종 심의 및 검정 심사 과정, 교과서 사용자의 평가 정보 환류, 교과서의 사후 질 관리 등 다원적인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

이 글에서 검토, 제안한 (1) 교과별 교과서 발행제의 합리적 결정, (2) 국정 대상 축소와 검·인정 대상 확대, (3) 지도서의 인정제 전환, (4) 국정과 검정 교과서 연구 개발비 확대 지원, (5) 검정 교과서의 공정한 경쟁 시장 질서 확립, (6) 교과서 질 개선 모니터링의 확립, (7) 항시적 수정 보완 체제 구축, (8) 전면 개편의 지양과 판수(版數)를 거듭

하는 교과서 제도 확립, (9) 정기 검정제의 도입, (10) 검정 수수료의 합리화, (11) 검정 시행 전담 기구의 설치 및 교재 정책의 책무성 확립, (12) 교과별 전문 출판사화, (13) 교과 특성에 따른 교과서 발행 및 공급 방식의 다양화, (14) 채택 후보 교과서 선정의 권역별 광역화, (15) 학교의 각종 교재 구입 예산의 확대, (16) 사용 후 반납하는 교과서 대여제 확대 등은 서로 연결된 교과서 질 개선 방안이다. 최고의, 최적의 교재를 확보하여 교사와 학생들에게 주겠다는 정책 의지는 이 점에서 상호 연결된 실타래를 푸는 일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sup>2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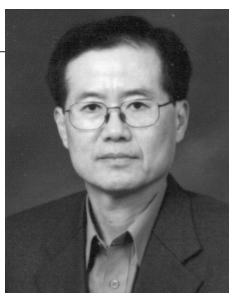
#### 참고 문헌

- 손병길, 이준, 이경순, 홍후조(근간), 교과서의 항상적 질 개선을 위한 온-오프라인 체제 구축 연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연구 보고서.
- 함수곤, 강환동, 홍후조, 조성준(2002), 교과용 도서 검정 업무 개선 방안 연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연구 보고서.
- 홍후조(1999), ‘국가 수준 교육과정 개발 패러다임의 전환(I) : 전면 개정형에서 점진 개선형으로’, 교육과정 연구, p. 17(2), pp. 209~234.
- 홍후조(2002), ‘교과서 제도의 현황, 문제점, 개선 방안에 관한 소고 : 검정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교육법학회 제 10 회 학술 발표회 발표 논문
- 홍후조(2002), 더 나은 교과서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 10 가지, 교과서연구 제 39 호, pp. 50~54.



# 교과서 지식의 급진적 재개념화 가능성의 탐색

■ 글 / 윤병희(숙명여자대학교 교수)



## 1. 들어가며

교과서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걱정은 공적 제도, 즉 국가 기관으로서의 학교가 출현할 때부터 이미 예상되었던 일이다. 교사, 학생, 그리고 교재를 '교육의 3요소'라고 공공연하게 말할 때부터, 이미 학교 교재로서의 교과서는 심각한 근심거리로 대두되었던 것이다. 학교에 교사와 학생이 있는데 가르칠 것, 즉 교육 내용을 담는 교과서가 없다면 '교육'이 성립될 수 없다는 확고부동한 논리이다. 학생과 교사에 대한 다양한 법적, 제도적, 정책적 규제와 아울러 교과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논의가 하나의 담론으로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이러한 학교라는 국가적 제도의 공적 책무성 개념에 근거한 것이다. 교과서의 성격과 특성에 의하여 학교의 모습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목적과 기능에 의하여 교과서의 특성과 성격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지극히 자연스럽게 여겨진다. 교과서는 학교를 위한 수단이자 방법의 하나라는 통념이 문제 없이 수용되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그 동안 학교 교과서 정책과 제도에 관한 다양한 이론적, 실천적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으며, 이에 부응하여 각급 학교 교과서의 질과 외형은 괄목할 만한 발전과 성장을 보이고 있다. 교과서의 발행 제도는 교과서가 단순히 교과용 도서라는 개념에서 탈피하여 교육과정 자료로서의 개념을 개방적으로 수용하고 있으며, 교과서의 편찬과 채택 제도로 점차 전문화, 합리화하고 있다. 또, 교과서의 검정과 편수 업무도 점진적으로 전문화, 합리화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교과서에 담긴 내용으로서의 교과서 지식의 질적 충실성, 포괄성, 다양성, 적합성이 제고되어 왔으며, 교과서의 외형적, 물리적 질도 시중의 서적에 뒤지지 않을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아울러 개발, 편찬, 검정, 채택 등의 절차 및 과정적 측면도 합리화, 효율화, 전문화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징표들이 많다. 이러한 제반 현상들은 학교의 목적과 역할에 관련된 교과서의 중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그 자체로서는 무척 바람직한 변화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와 발전의 기저를 형성하고 있는 수정주의 또는 보완주의라는 보수적 접근과는 달리, 교과서의 존재 및 기능에 대한 보다 급진적이고도 비판적인 접근이 존재할 수도 있다. 교과서에 대한 지금까지의 담론은 학교라는 공적 제도만큼이나 보수적이고 체제 지향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만일 어떤 문제가 있다면 이를 점진적으로 보완하고 수정하는 것이 발전과 성장의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는 개량주의적 접근을 표방한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수정주의나 개량주의적 접근과는 달리, 교과서 지식의 성격이나 특성 자체를 급진적인 입장에서 재개념화할 수도 있다. 이 글에서는 후기 철학 및 해석학적 인식론과 새로운 교육관에 기초하여 교과서에 담길 지식의 성격과 특성에 대하여 하나의 급진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타진하고자 한다. 이는 기존의 교과서 지식에 대한 소극적 비판이라기보다는 교과서에 담길 지식의 성격을 지금과는 전혀 다른 적극적 방식으로 재개념화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 2. 후기 철학적 재개념화 가능성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교과서는 수백만 명의 독자들이 자율적인 선택보다는 반강제적으로 접하게 되는 특이한 유형의 ‘텍스트’라 할 수 있다. 다른 읽기 자료, 즉 텍스트와는 달리 대부분의 학생들에게는 교과서라는 텍스트가 자신들의 선택, 의지, 기호, 흥미, 관심과는 관계 없이 모종의 제도적 장치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주어지며, 그 읽기와 의미의 해석이 일정한 방식으로 강요된다. 이러한 선택과 읽기 및 해석의 자율성 문제의 이면에는

텍스트 지식의 정형화된 특성과 속성이 자리 잡고 있다. 특정 텍스트를 임의적,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없고, 그 의미를 또한 임의적, 자율적으로 해석할 수 없도록 통제하는 제도적 관행은 교과서 지식의 의미나 가치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특정한 메커니즘을 암묵적으로 정당화하고 고착화, 관행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양상은 비교적 명료하다. 보편적 지식과 절대 불변의 진리를 표방하면서, 지식을 누적적이고 연속적인 속성을 가진 것으로 개념화하는 객관주의적 인식론에 의하여 교과서 지식의 본질이 규정된다. 과학적 사실과 객관적 정보를 지식의 패러다임으로 규정하면서, 인간의 합리성 계발을 교과서 지식의 본연적 목적으로 추구하는 이러한 계몽주의 내지 실증주의적 담론은 그야말로 교과서에 관한 거대 담론 또는 초담론으로 자리매김하여 온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각급 학교의 교과나 교과목의 차이에 관계 없이 보편적이다.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 해체주의, 후기 구조주의, 탈구조주의, 그리고 해석학 등으로 명명되는 후기 철학적 인식론에 비추어 본다면, 이러한 계몽주의적, 과학주의적 교과서 담론은 인간의 이해와 지식에 대한 그릇된 가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주체와 대상 또는 객체의 분리를 필연적으로 가정하는 이분법의 논리와, 지식의 확고부동한 근거와 토대를 의심할 여지 없이 받아들이는 정초주의적 인식론은 학교 교과서의 지식을 근대성이라는 개념적 범주에 고착화시킨다. 그리고 그러한 개념적 범주와 함께 통제, 조정, 규율, 제도 등의 학교 이데올로기는 효율성과 효과성의 극대화라는 또다른 경영의 담론과 조화를 이룬다.

앞에서 언급한 다양한 현대의 인식론적 동향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합리성과 정초 개념에 대한 근원적인 회의이다. 정초주의적, 객관주의적 지식 개념은 역사적, 언어적, 상황적 존재로서의 인간 지식과 인식에 대한 하나의 선입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그들의 공통적인 비판이다. 인간의 지식은 절대적, 보편적, 객관적, 누적적, 연속적일 수 없다. 따라서, 교과서적 정답은 존재하기 어렵고 지식의 객관적, 보편적, 준거와 표준을 상정하기 어렵다. 모든 지식은 특정한 이해 관계와 관련되고, 상황 의존적이며 또한 주체에 의하여 상황적 제한 아래에서 능동적으로 구성된다. 인간의 지식은 해체와 재구성 가능성이 가능한 임의적이고 한시적 특성을 가진다. 역사적 맥락과 그 안에 위치한 주체가 처한 고유한 상황 이전의 선형적이고 절대 이성적인 인식의 세계는 개념적 허구에 불과하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현대의 교과서는 근대의 인식론을 추종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텍스트 의미의 떠돌아다님, 흩어짐, 유희, 해체, 그리고 임의성은 교과서가 아닌 다른 텍스트에서는 이미 낯선 현상이 아니다. 대중 매체로서의 다양한 유형의 서적을 포함한 모든 현대적, 초현대적 텍스트는, 기호학이나 상징 이론에서 이미 밝혀진 것처럼 단 하나의 고착된(객관화되고 그래서 소외된) 의미 체계를 추구하지 않는다. 해석과 의미는 기호나 상징, 그 자체의 고유한 내적 속성에 의하여 암호의 해독처럼 자연스럽게, 또는 일방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신비한 현상이 아니다. 텍스트의 의미는 해석자의 인식의 지평과 역사, 언어적 맥락에 의하여 얼마든지 다양화, 확대·심화될 수 있다. 과학과 합리성에 기초를 둔 특전적 어휘들이 지식을 대표

하고, 그것들은 단 하나의 공인된 표준적 의미를 가진다는 교과서의 인식론은 이러한 후기 철학의 인식론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교과서가 특전적 어휘를 대표하고, 표준적 지식을 담으며, 최근 학문의 완성된 이론과 지식을 소개하고, 만일 그 지식이 틀린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 한해 부분적으로 수정되고 보완되어야 한다는 교과서 제도 및 정책의 담론은 후기 철학적 지식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이러한 지식관은 현재 다른 문화 또는 인문 사회 과학 탐구 분야의 텍스트, 그리고 유사 텍스트 읽기 방법론과 커다란 괴리를 보인다. 탈근대성의 시대에서 근대적 텍스트를 강요하고, 객관적 읽기를 ‘교육’의 이름으로 요구하는 이러한 현상은 하나의 문명사적 아이러니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3. 교육학적 재개념화 가능성

교과서에 담겨 있는 지식은 흔히 교과서 저작자나 교과서의 편찬과 발행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책 당국이나 또는 그 밖의 ‘전문가’들의 ‘교육관’을 반영한다고 여겨진다. 또한, ‘교육의 논리’에 의하여 교과서의 ‘내용’이 결정되고 교과서에 관련된 모든 쟁점들은 그것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진다. 따라서, 시중의 ‘양서’나 ‘베스트셀러’를 선택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어떤 논리에 의하여 교과서를 만들고 그 우수성을 평가해야 하며 선택의 기준도 고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그 준거는 바로 ‘교육적’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식적인 주장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는 그렇게 분명하지가 않다. 교과서 저작자나 정책 관련자나 학교 당국자들은 과연 교육의 개념

을 탐구하고, 거기에 기초하여 교과서를 만들고, 편찬하고, 선택하고, 사용하는가? 또, 학교 교장과 교과(목) 담당 교사들은 ‘교육적’ 근거에서 교과서를 선택하고 가르치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매우 심각한 것들이지만 직접적으로 그 타당성과 가치를 논의하기는 쉽지 않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시중의 다양한 장르의 텍스트들과는 달리 교과서는 ‘교육적’이어야 한다는 동의어 반복적인 명제가 의심할 여지 없이 진리로 여겨진다는 점이다.

여기서 교육이 무엇이고 교육적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논의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교육과 교재로서의 교과서의 관계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개념화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교육은 특정 소재 분야의 ‘품위 수준’이 더 높은 사람, 즉 가르치는 자와 품위 수준이 더 낮은 사람, 즉 배우는 자 사이의 긴밀하고도 협조적인 인간 관계의 특수한 양태이다. 가르치는 자의 체화된 경험의 세계와 배우는 자의 결핍된 경험 세계에는 커다란 인식적 간극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러한 간극을 메우고 줄이는 활동으로서의 교육은 ‘교재’로서의 교과서를 중심적인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양자의 직접적이고도 지속적인 교류와 상호 작용의 양상에서 교과서의 필요성은 크게 부각되지 않는다. 바둑 교육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바둑 교과서가 얼마나 보조적이고 지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지 쉽사리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과서의 주변성과 보조 기능은 학교의 경우 철저하게 왜곡된다. 교과서가 교육의 중심에 위치하며 가르치는 사람으로서의 교사는 교과서의 고착된 의미를 배우는 자로서의 학생들에게 해석해 주는, 주변적·보조적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즉, 교과서가 교육의 주체이고 교

사와 학생은 객체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소외 현상은 교과서의 물신화 현상으로 연결된다. 교과서는 지식의 표준이요, 방법론의 근거이며, 교육 관련 논의의 귀결점이다. ‘진리’라는 거대 담론을 대표하는 교과서 지식은 확고부동하고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간혹 교과서에서의 ‘오류’가 발견되면 큰 쟁점으로 부각된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하나의 ‘사건’이다. 교과서는 곧 교육의 개념과 방향과 성패를 판가름하는 ‘정조’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박한 물신주의적 사고 방식은, 교과서 집필자 역시 유한성을 가진, 오류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문제시될 수 있다. 유한한 인간은 결코 완전무결한 절대적 진리를 소유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저작자의 지식이 기호나 상징으로 객관화되거나 기계적으로 부호화될 수도 없다. 교육의 원형적 개념에 비추어 본다면, 교재나 교과서는 가르치는 사람을 대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을 때, 할 수 없이 하나의 방편으로 여겨져 왔다. ‘스승의 흔적’으로서의 문서나 작품은 결코 스승이 제공하는 일차적인 교육적 체험을 대행할 수 없는 것이다. 고전이 성현의 흔적 내지 자취에 불과하다는 생각은 이런 점에서 정확한 판단이다.

이러한 문제와 아울러 지금까지의 논의와 관련하여 과학 교과서의 문제점을 예로 들 수 있다. 과학 철학이나 과학사적 관점에서 본다면, 과학의 학문적 구조와 패러다임의 개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즉 ‘과학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완결된, 최근의 이론 중심으로 과학 교과서를 편성하는 관행은 문제시될 수도 있다. 과학의 발전은 누적적, 계선적이 아니라 단절

적, 해체적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과서의 내용이 패러다임의 경합에서 생존한 정상 과학 이론 체계의 사례들을 소개하는 것으로 구성되어서는 안 된다. 과학사에서의 패러다임 경합의 사례와 ‘발견의 맥락’을 제시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과학 교육적’이라 할 수 있다. 오개념의 사례는 오히려 과학 발전의 역사와 과학적 지식의 본질을 더 잘 설명한다.

또, 교과서에 학문적, 이론적 지식을 포함할 것인가, 아니면 생활 세계의 상식을 주로 포함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될 수도 있다. 이러한 쟁점도 ‘교육’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그 답이 자명해진다. 학교가 물론 ‘교육’을 전달할 필요도 없고, 학교에서 하는 모든 일이나 일어나는 모든 것이 ‘교육’이라 할 수는 없지만, 교육의 개념은 생활 세계에 필요한 상식을 전달하는 ‘사회화’의 개념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학문적 이론과 지식 체계는 교육의 ‘소재’나 교육할 거리가 될 수 있지만, 상식 그 자체는 교육할 거리가 되지 않는다. 교육의 맥락에서는 학문과 상식은 철저히 구분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교육적 관점에서 본다면, 교과서 지식과 생활 세계에 필요한 상식은 서로 동시에 공존하기 어려운, 그래서 적합성을 견지하기 어려운 개념들이다.

#### 4. 나오며

문명사적으로 21 세기가 혼돈의 시대요 해체의 시대라는 점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며, 그러한 징표들이 여러 곳에서 여러 양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도 점점 분명해진다. 그러나 교과서 지식은 여전히 근대적 정신을 표방하고 있다. 교과서는 근대 정신을 대표하는

인식론의 한계를 탈피하지 못한 채, 학생들에게 탈근대적, 포스트모더니즘의 세계를 살아갈 것을 요구한다. 어떻게 본다면, 학교라는 제도와 그것에 의하여 규정되는 교과서의 역할과 기능은 학생들이 불확실하고 혼돈스러운 미래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적극적인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다. 또, 교육 그 자체의 개념, 구조, 내용, 기능 등에 대한 학문적, 이론적 탐색을 결여한 채, 피상적으로 교과서의 ‘교육적’ 가치와 역할을 정당화할 때 그 숭고한 의도와는 관계 없이, 교육에 대한 왜곡은 더 체계적으로 심화된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교과서에 대한 기존의 보수주의적, 수정주의적 접근을 넘어서 급진적이고도 비판적인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을 예증하고자 하였다. 다양한 후기 철학적 인식론에 비추어 볼 때, 교과서 지식은 근대성과 제일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객관주의적 인식론의 강요는 지식 그 자체의 개념을 왜곡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포함한다.

교육학적 관점에 비추어 볼 때, 교과서의 기능과 역할은 교육이라는 체험 활동의 고유한 구조적 양상을 왜곡하고 비본질화할 가능성이 크다. 교과서에 대한 물신화 현상은 교육의 원형적 개념에 비추어 볼 때 비판되어야 한다. 교과서의 질과 수준은 우리의 인식수준과 교육에 대한 이해를 넘어설 수 없다는 명제를 받아들인다면, 이제 우리가 이론적, 실천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탐구 과제와 방법론은 비교적 명백하게 그 모습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남아 있는 문제는 우리의 헌신과 애정의 정도와 방향이다. 23

# ICT를 활용한 수학과 교실 수업 개선



글 / 제갈태균 회장 외 5인 (대구과학고등학교 수학교과연구회)

## 1. 서론

교사들은 학생들의 이해를 돕거나 그들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서 흔히 개념을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세분화된 일련의 계열 형태로 제시하거나, 그 개념을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하거나,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많이 풀어 보게 한다. 이러한 지도법이 근거로 하는 가정은 학생들의 개념 획득이 마치 백지에 기록하듯이, 또는 녹음기에 녹음되듯이 수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Dewey, Piaget, Bruner 등의 인지 발달 이론을 바탕으로 최근까지 실시된 많은 연구들에 따르면, 개념을 이해한다는 것은 지식을 기계적으로 연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자신이 그 개념을 자신의 기존의 인지 구조에 동화시키거나, 또는 자신의 기존의 인지 구조를 조절함으로써 새로운 개념이 기존의 지식과 적절한 관계망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학생들이 새로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즉 적절히 동화와 조절을 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새로운 개념과 적절히 관련되는 선행 지식을 갖고 있지 않거나 기존 지식과 새로운 지식 사이의 관련을 맺기에는 간격이 너무 먼 경우, 또는 기존의 개념이 새로운 개념과 같등을 일으키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만일, 학생들이 새로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관련된 선행 지식이 없거나 기존 지식과 새 개념 사이의 간격이 멀기 때문이라면 교사는 먼저 학생들에게 그러한 선행 개념을 형성시켜 주거나 간격을 줄여 줄 수 있는 중간 단계에 대한 지도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ICT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 정보 통신 기술)를 활용한 수학 교육이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하면 새로운 지식과의 괴리감을 없앨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한다. 개인용 PC가 급속도로 보급되면서 모든 일을 함에 있어 컴퓨터의 활용은 무궁

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 제 7차 교육과정에서도 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컴퓨터 교육을 강화하여 학습자의 활동적인 수업을 강조하고, 계산기, 컴퓨터 등의 교구 환경에 중점을 두었다. 그래서 교육 현장에서도 학교 차원의 멀티미디어 환경 구축에 주력하고 있으며, 교단 선진화를 위해 칠판 위주의 평면적인 수업이 아니라 교육 기자재를 활용한 적극적이고 생기 있는 교육 환경을 장려하고 있다. 멀티미디어의 발달과 여러 가지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개발, 그리고 웹의 발달은 ICT를 활용한 교수학적 가능성을 더욱 높여 주고 있다. 그리고 수학 교육에 극적인 변화를 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같이 컴퓨터를 매개로 한 학습 환경이 교수·학습 모형의 기본 체제로 폭넓게 논의되는 시기에 첨단 교육 기법 등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이 교육 현장을 변화시키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특성화 교육으로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 및 창의력을 제고하고 교사와 교과서 중심의 획일화된 교수·학습 방법을 탈피한 학생 중심의 탐구 학습으로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키고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에 대처할 수 있는 인력을 배양한다는 효과를 기대하며 교육 정보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구과학고등학교 수학교과연구회에서는 ICT를 활용한 수학 교육의 큰 틀을 학교 현장에 도입함으로써 교실 수업을 개선하여 수학적 사고력과 창의력을 함양하고 수학적 힘을 신장시키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기 개발된 웹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학습을 하게 도와 주고, 과학 고등 학교에 적합한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제시함으로써 수준별 학습이 가능케 할 뿐만 아니라, 수학용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하여 수학 영재 교육과 우리 나라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꾸준히 강조되고 있는 수학적 사고력과 창의력을 함양하고자 하였다.

## 2. ICT 활용 교실 수업 개선 방안

2002년 4월부터 1년 동안 연구 활동에 들어가면서 지도 대상을 대구과학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로 하고, 제 7차 교육과정의 [10-가]와 [10-나] 단계에 맞추어 적용하였다.

세부 연구 활동으로

첫째, 웹 학습 프로그램을 활용한 개별화 수업

둘째, 수준별 심화 보충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과 적용

셋째, GSP를 활용한 수업과 수행 평가

넷째, 문항 만들기를 통한 창의적 사고력 배양

다섯째, CBT 사이트를 구축함으로써 평가 체제의 혁신으로 정하고 이의 적용을 위하여 ICT 활용 수업 모형을 다음과 같이 개발하고 적용하였다.







하겠고 또다른 경우로는 해당 교육과정보다 정도가 높은 수학 내용 또는 연구를 수행하다가 등장하는 아이디어나 연구 결과 중에 하나의 작은 보조 결과들을 독립적으로 떼어 내어 해당 교육과정에 적합하도록 문제를 만드는 것도 있다. 이 중에 둘째의 경우처럼 새로이 만드는 것은 학생뿐 아니라 교사들에게도 많은 시간과 노력과 부단한 아이디어, 특히 수학적 창의력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작업이므로 대체로 첫 번째 방법이 많이 쓰이고 있다.

수학 문제를 만들려면 수학 문제를 잘 풀어야 한다. 수학 문제를 많이 직접 풀어 보면서 문제의 변형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문제의 변형에는 조건의 변형, 결론의 변형, 풀이의 변형 등이 있다. 문제를 통하여 문제를 만드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인 것이다. 기존의 문제를 변형해 나가면서 그 변형이 충분히 이루어진 경우 신작 문제가 탄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문제를 만들 때는 기존 문제의 풀이를 보면서 문제의 변형을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학생들에게 과제로 통합 교과적인 수학 문항을 개발하도록 주었다. 학생들이 다른 교과를 현재 배우고 있고, 또 다른 교과에서 수학이 적용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통합 교과적인 수학 문항 개발을 과제로 제시하였다. 이 결과 다양한 문항이 제시되었다.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새로운 문항을 만들어 보고 발표·토론하는 과정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학습 태도로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 5. CBT(Computer Based Test) 사이트 구축

CBT는 웹을 기반으로 하고 컴퓨터를 매개로 한 평가를 말한다. CBT는 정보 통신망을 통해 평가가 이루어지므로 평가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탈피하게 된다. CBT는 검사의 내용이 컴퓨터 화면에 제시되고 마우스나 키보드를 사용하여 모든 학습자들이 동일한 검사를 보는 컴퓨터 이용 검사로, 검사의 매체는 종이 대신 컴퓨터를 사용하나 검사의 내용과 순서는 지필 검사(Paper & Pencil Test)와 동일한 검사이다. 이러한 평가 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http://cybertest.mathtaegu.com>에 사이버 테스트 사이트를 구축하였다. 사이버 테스트 사이트의 활용은 수업 시간 중 진단 평가와 형성 평가, 수업 시간에 수행 평가 그리고 한 달에 2~4회 일요일에 테스트를 하였다. 이 사이트는 지금 활용 중이며, 2002년에는 관리권을 가진 교사가 1명으로 제한되었으나 사이트를 수정·보완하여 관리권의 제한을 없앴다. 따라서, 많은 수학 교사가 활용할 수 있게 개편하고 올해부터 연수를 실시하여 관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많은 선생님들이 활용 중이다.



### 3. 결 론

2002년 대구과학고등학교 수학교과연구회에서 연구한 기 개발된 웹 학습 프로그램을 활용한 개별화 수업과 수학용 소프트웨어의 사용, 그리고 연구회 홈 페이지에 DB를 구축하여 수업 설계와 내용 개발, 교수, 평가 등 일련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은 학생들에게 수학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등 파생되는 효과가 컸다. 특히, DB를 구축한 CBT 사이트는 학생들에게 동시에 과제를 제시하고 해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가 즉시 채점되어 지도 교사에게 제시됨으로써 앞으로 활용 가능성이 무궁하게 느껴졌다.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학생들이 기 개발된 웹 학습 프로그램으로 학습하게 되어 교사는 개별적인 학습과 순회를 통한 학생 수준에 맞는 내용을 조언할 수 있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학생들은 자신의 능력에 적합한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유도하여 개별화 수업 체제의 새로운 모형을 제시하였다.
- 과학 고등 학교에 적용할 교수·학습 자료는 일반계 고등 학교의 심화 과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개발된 자료의 공유로 일반화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수준별 학습 자료의 개발은 제 7 차 교육과정의 정착에도 도움을 주었다.
- GSP를 활용한 수업과 수행 평가는 학생들의 흥미를 유도하였으며 다양하고 창의적인 결과물이 나왔다. 이는 정보화 능력을 배양하게 할 뿐만 아니라 수학적 사고 능력을 실제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다양한 탐구 활동과 문제 해결 과정에서 풍부한 경험의 제공은 학생의 창의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배양할 수 있었다.
-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새로운 문항을 만들어 보고 발표·토론하는 과정에서 수학적 사고가 자연스럽게 길러지고 수학적 힘이 신장되었다.
- CBT는 지필 검사로는 얻기 어려운 다양한 정보 수집과, 문항과 학습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지속적인 자료 수집과 관리가 가능하였다. 이로 인해 즉각적인 피드백으로 학습 교정 및 증진이 가능하였다. 또, 정보 통신망을 통해 평가가 이루어지므로 평가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해결되었으며, 많은 교사가 올린 문항 그 자체를 DB로 구축하여 수학 문제 은행을 손쉽게 구축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는 평가자가 문제를 만들 필요 없이 있는 문항에서 추출하여 평가지를 만들 수 있게 되어 평가자의 부담을 더 줄이는 방안이 될 것이다. ㉢



# 편수국 부활은 교육 과제 극복의 지름길

■ 글 / 허필수<에듀토피아 중앙교육 회장>



**교**육인적자원부는 글자 그대로 국가 교육에 관한 정책 수립과 학교 교육, 평생 교육 및 인적 자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 정부의 최고 교육 행정 기관입니다.

현재가 아무리 만족스럽고 행복하다 해도 미래가 없으면 행복으로 연결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기에 오늘의 힘들고 어려움을 이겨 낼 수 있으며 의미를 갖습니다. 따라서, 오늘이 좋아도 내일의 희망이 없으면 불안과 비극으로 연결되게 마련입니다.

교육이야말로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하는 것이기에 세계 선진국일수록 교육에 대한 투자와 정책 개발에 국력을 경주하여 경쟁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식과 정보의 시대에 앞서가기 위해 미래의 주역들인 청소년의 교육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업으로 설정·시행되고 있습니다.

유·초·중·고교의 유아 청소년 교육은 결국

우리 세대의 미래의 자화상입니다. 국토가 좁고 부존 자원이 거의 없는 우리 나라의 경우 국부(國富)의 결정 요인은 결국 국가의 인력 양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실현에 따른 교육력이라고 봅니다. 교육을 국가의 ‘百年之大計’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교육부를 살펴보면 안타깝게도 청소년의 교육과 양성을 책임 맡은 공교육이 부실하고 무력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평준화란 정책이 30 년이나 지속되다 보니 학교 간의 경쟁 의식은 사라진 지 오래이며, 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의 학교 선택권도 없습니다. 거기에 교원의 정년제와 신분 보장이란 조치 때문에 학교는 학생의 교육 결과에 대하여 수요자에게 평가받는 기회도 없이 62세 정년까지 공직 생활이 보장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공교육에서는 시장(市場) 원리나 성과 검증, 평가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데다가 초·중·고 교육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관한 부서(편수국)가 없어진 지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대학 교육은 성인 대상인 만큼 관계가 적지만  
미성년자인 초·중·고교 학생들의 학교 교육은 국가가 가르칠 내용과  
과정 수준·단계를 법으로 정해 놓기 마련입니다.**

편수 행정의 중요성 인식의 무지의 결과가 아니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대학 교육은 성인 대상인 만큼 관계가 적지만 미성년자인 초·중·고교 학생들의 학교 교육은 국가가 가르칠 내용과 과정 수준·단계를 법으로 정해 놓기 마련입니다. 교육과정은 초·중등 교육의 최고의 교육 정책이고, 국가 수준의 교육 내용을 담은 정부 차원의 가장 중요한 문서요, 거기에 따라 개발된 교과서는 초·중등 교육의 모든 내용을 조직, 구성하고 있기에 전문가 중의 전문가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연구·개발해야 하는 교육의 핵심이 되는 기본 설계도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편수국장, 편수관리관, 교육과정심의관으로 정부 기구를 운용하다가 드디어 ‘교육과정정책과’라는 과 단위로 격하시키는 물론 인력을 대폭 감축하는 우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정부 기구 축소라는 명분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기구 축소는 정부가 관장해야 할 일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단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주무국 격인 편수국을 축소 개편한 처사를 어떻게 수용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책 수립과 편수는 교육과정정책과에서, 교과서 개발과 검정 심사는 한국교육과정평

가원이라는 정부 출연 기관으로 분담하여 시행하고 보니 2002년 역사 교과서 파동에서 보듯이 국회에서 교육부와 평가원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 결국 평가원장이 사임한 불행한 사태가 벌어졌던 것입니다.

교육부는 초·중등 교육은 시·도 지방 교육자치 기관에 위임했기 때문에 편수국 폐지는 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가르치고 배워야 할 교육 내용과 범위, 수준, 방향이 중앙 정부가 소홀히 해도 괜찮다는 주장이라면, 제각각 학교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시·도마다, 학교마다 각각 취미와 선호, 가치관에 따라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다르게 되는 기현상이 안 벌어진다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부 조직 내에서 교육과정정책과장과 학교정책실장만으로 정부의 보통 교육 정책을 과연 제대로 추진할 수 있겠으며, 일부 교직 단체에서 교사들이 가르칠 내용과 교과서를 제각기 만들어 쓰겠다고 주장해도 할 말이 없게 될 것입니다.

국가 수준의 학업 성취를 제시하고 결과를 평가하는 기능조차 제대로 안 되는 교육부는



**공교육의 내실화는 교육과정의 연구·개발과  
교과서 발행, 학습 지도, 학업 성취도 평가, 학습 결과의 점검 등  
일련의 정책들을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는  
전문가 집단이 필요하며, 이를 지휘·관리하는 편수국의 부활과 활성화는  
교육부의 기능과 역할을 제 위치에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초·중등 교육에 관해서 얼마나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고등 교육(대학 교육)에 대한 지원과 비중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초·중등 교육은 시·도 지방교육청으로 이관한다는 구실로 소외 또는 소홀함이 그 후유증으로 편수국을 폐지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교과 교육이야말로 공교육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분야별로 국내의 가장 실력 있고 권위 있는 교과 교육 전문가가 ‘전문직’이라는 위상에 걸맞는 예우와 함께 편수관으로 일생을 봉직하여 학습 현장까지 지도·조언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을 가진 편수 행정이 부활되어야 마땅합니다. 인성 교육, 특기 적성 교육, 세계화 교육, 열린 교육, 각 시·도 교육청의 교육 방향 등등 여러 가지 교육 시책들은 사실 교육과정에 거의 다 반영되었으며 교육과정대로 학교 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학교 교육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고교 평준화도 변화되어 수요자가 학교를 선택할 수 있고 그 책임도 가지며 학교는 가르칠 학생을 선택하고 학교장과 교사는 학교 운영의 자율로 그 책무성을 갖게 하면 공교육의 질적 개선은 물론 공교육의 사교육에 대한 경쟁력도 달라질 것입니다. 더불

어 천문학적인 사교육비도 감소되어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킬 것입니다. 공교육의 내실화는 교육과정의 연구·개발과 교과서 발행, 학습 지도, 학업 성취도 평가, 학습 결과의 점검 등 일련의 정책들을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는 전문가 집단이 필요하며, 이를 지휘·관리하는 편수국의 부활과 활성화는 교육부의 기능과 역할을 제 위치에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교육과정을 우선하는 교육 정책은 결코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적 자원의 양성과 교육은 학교 교육의 질적 개선과 경쟁력 확보가 전제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만일, 학교 교육이 제 역할을 못한다면 국가의 인적 자원 개발과 육성도 차질을 빚을 것입니다. 24

# 좋은 교과서 만들기 위해 함께 생각해야 할 일들

■ 글 / 이수랑(법문사 편집상무)



**교**과서는 학생들이 배워야 할 교육 내용을 담은 핵심적인 자료로서 한 나라의 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교과서 정책 입안자들은 그 중요성을 통감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가일층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필자는 대학 교수도 아니고 교과서 집필자도 아니며 정책 입안자도 아니지만, 제2차 교육과정기부터 제7차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검정 교과서 편찬 업무에 참여했던 실무자이다. 필자는 그 동안 이 일에 종사하면서 경험한 부분을 개진함으로써 앞으로 교과서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몇 가지로 나누어 정리하기로 한다.

## 1.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집필상의 유의점’이나 심사 기준표에 의하면 창의력을 매우 강도 높게 언급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는 타 출판사와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다. 다시 말하면 타 출판사로부

터 향의를 받기 싫다는 것이다. 단순한 제작상의 문제인데도 편집자의 아이디어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경우이다. 학생들의 학습에 편리함을 주기 위한 것임을 아무리 강조하여도 부질없는 일이었다. 작은 아이디어도 계발하도록 장려하고 북돋아 주는 데에서 좋은 교과서가 탄생한다고 본다.

교과서 저작자 표기도 그렇다. 교과서 저작자로 한 번 등록하면 사망하거나 외국으로 이민을 가지 않는 한 저작자를 바꾸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은 순전히 행정 편의 때문인 것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이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대답은 예상대로 일관성 유지다. 즉, 집필자 표기: 표지 및 판권에 최초 검정시 명단과 동일하게 표기함(합격자 공고 참조-2001. 7. 26.). 이런 대답이다. 이렇게 되니 당국으로부터 좀 협조적인 대답을 얻으려는 일말의 희망은 사라지고 만다.

교과서 집필에 참여하는 일은 매우 힘들 뿐만 아니라 원고료로 보상받고 마는 그런 일도 아니다. 이것은 참여 그 자체가 보람된 일이므로 금전으로 가치를 측정하기란 어렵

다. 이름 하나 수정 표기하는 절차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알 수가 없다. 좋은 교과서 개발을 표방하면서 내면적으로 이런 걸림돌이 깔려 있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일이다. 한 마디로 무엇이 급선무이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다.

## 2. 교과서의 심사는 권위가 있어야 한다.

교과서 심사는 아무리 강조하여도 오히려 부족할 사항이다. 심사자와 피심사자 사이에는 언제나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저작자 가운테는 심사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저작물을 잘못 심사하였다고 주장하는 이가 있으며, 지금도 제 7차 교육 과정에 준거한 교과서의 심사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대치하고 있는 저작자도 있다. 손자가 할아버지가 엮은 교과서를 평가하는 형국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교과서라면 자신보다 더 좋은 집필자가 없다고 자만하던 분들이 실패한 경우가 많다. 필자가 편찬 기획·진행한 교과서 중에도 제 6차 교육 과정에 의거한 교과서의 체제를 끝까지 고집하다가 결국에는 재검정마저도 실패하여 더 이상 교과서에 참여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고 만 과목도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교과서의 구성 방향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데도 이를 수용하지 않으며, 제 7차 교육 과정의 참뜻을 수용하려 들지 않은 저작자에게도 책임이 있겠으나, 교육인적자원부도 심사의 공정성과 권위를 위하여 각 과목에 편수 담당 공무원이 필히 상근토록 해야 하며, 제 2 외국어라고

해서 여러 과목을 함께 맡아 피심사자에게서 심사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엄정하고 신뢰받는 심사와 피심사자의 깨끗한 승복이 질 높은 교과서를 탄생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심사료에 대해서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 출판사는 교과서를 출원할 때 일정한 심사 수수료를 내야 한다. 책당 1차 심사, 2차 심사를 거치는 동안 적잖은 심사료를 내고 있는 것이다. 합격이 되면 교사용 지도서에 대한 심사료도 큰 부담이 된다. 출원하는 과목 수가 적을수록 심사료는 더 많이 책정된다. 출원하는 출판사끼리 해결하라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조금은 도와 주어야 할 것 같다. 특히, 출원하는 출판사 수가 극히 적은 러시아어와 같이 제 2 외국어인 경우는 더욱더 높은 심사료가 책정되며, 교과서의 1, 2차 심사료와 교사용 지도서 1, 2차 심사료를 합하면 비용이 만만치 않다.

## 3. 정가의 현실화가 요구된다.

학생들에게 좋은 교과서를 값싸게 공급하는 것이야말로 정책 입안자나 출판인들이 해야 할 당연한 몫이다. 그러나 교과서를 개발하고 나서도 출판사에서는 그 교과서에 관련해서 해야 할 일들이 많다. 교과서에는 테이프를 들으면서 공부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출판사가 테이프 제작에 따른 비용을 만회할 길이 없다. 출판사가 알아서 하는 도리밖에 없다. 한때는 한국검정교과서협회에서 일괄 제작할 것이니 개별적으로 제작해서는 안 된다고 하여 무작정 기다려 보기도 했지만, 결국 책임은 출판사로 돌아올 것 같아 남몰래

제작했던 해프닝도 있었다. 우리가 만든 교과서를 선정(채택)해서 쓰는 학생들에게 큰 불편을 끼칠 뻔했던 것이다.

또, 일선 학교 선생님이나 학부모로부터 자습서를 비롯하여 각종 참고 도서의 제작을 요구받고 있다. 변명을 할 수도 없다. 변명하다가 더 심한 항의를 받는다. 능력이 없으면 왜 교과서를 만들어 자기(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선정(채택)하도록 해서 피해를 보게 했느냐는 것이다. 할 말이 없다. 5년 이상 이런 항의를 받기가 두려워 어쩔 수 없이 참고 도서를 만드는 경우가 있다. 5년간 팔아서 원가라도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심정이다. 그러나 그것은 희망 사항일 뿐이다. 러시아 테이프의 경우, 5년 동안 돈을 받고 팔 수 있는 것은 백 세트도 안 된다. 이런 경우, 누가 교과서를 의욕적으로 만들고 싶어하겠는가?

진정 교과서의 발전을 원한다면 출판사가 안고 있는 이러한 속사정을 철저히 조사하여 교과서 정책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개선이 된다면, 출판사도 좀더 여유를 가지고 좋은 보조 교재를 만들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될 것이다. 정가에 반영하지는 않더라도 공동 제작으로 원가를 절감하는 등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 4. 보기 좋은 교과서가 공부도 잘 된다.

제7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서는 혁명이라 할 정도로 모습이 크게 바뀌었다. 종이 질도 한층 좋아졌고, 중학교 교과서는 대부분이 컬러화되었으며, 고등 학교 교과서도 컬러인 교

과서가 전체의 30% 정도로 되었다. 이것은 가히 혁명적이라 할 수 있다. 주위에서 ‘무슨 교과서가 이렇게 호화찬란한가.’, ‘교과서에 너무 많은 돈을 들인다.’는 등의 비난이 쏟아질 정도이다. 필자도 솔직히 이와 같은 의견에 동의하였다.

당시 이를 주도한 교육부 장관도 교과서가 급격히 달라진 외형 체제에 대하여 공격을 많이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매우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다. 지금도 의견을 달리하는 다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제6차 교육과정에서 주류를 이루었던 국판(148×210mm)에 단색 교과서로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때 그런 낡은 생각을 한 자신이 부끄럽기까지 하다.

디자인을 할 때도 컬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단색으로도 훌륭한 디자인을 해낼 수 있었지만 컬러를 도입함으로써 훨씬 다양하고 폭넓게 꾸밀 수가 있는 것이다. 디자인은 단순히 보기 좋게 한다는 조형성뿐만 아니라 가독성을 높이고 책을 더 가까이 함으로써 공부에 대한 열망을 더욱 높여 주는 기능이 있다. 따라서, 디자인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장려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아직도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둔감한 기성세대들이 교과서의 체제에 대하여 구태를 고집하고 있다면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의 구성원으로 살아남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아름다운 그릇도 담고 있는 내용이 좋지 않으면 감수성이 예민한 새싹들에게 오히려 더 큰 해악을 끼친다는 사실도 함께 생각하여야 한다.

## 5. 교과서 개발에만 전념하는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교과서의 개발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사후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 즉, 교과서는 한 번 개발하여 공급하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꾸준히 해 나가면서 질적 개선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

교과서를 발행하는 우리 나라 출판사의 대부분은 당해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작업이 끝나면 교과용 도서 개발에 참여한 인원을 축소 또는 해산시키는 것이 대세인데, 이것은 바람직스러운 일이 못 된다.

한편, 출판사로서는 당해 교육과정 기간 중 2~3년은 교과서 제작에 바쁘지만 나머지는 참고서 개발이나 교과서의 부분 수정 등의 일이 교과서 작업처럼 그렇게 긴박하지 않으므로 많은 인원을 유지하기가 실체는 부담스럽기도 하다.

좋은 교과서를 개발하려면 인원을 단기간에 모집하거나 자료를 급조하는 방법을 취하지 말고 상시적으로 집필진, 편집진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과서 발행 제도를 상시, 수시 검정 제도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좋은 교과서의 개발을 원한다면 하루아침에 여기저기서 불러 모아 짧은 기간에 만들어 내는 그런 방법을 답습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교육과정이 다소 변동이 있더라도 끊임없이 그 과정을 연구하고, 새로운 교과서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는 전문 출판사의 환경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대해 선진 외국의 경우에는 너무나 당연한 일을 우리는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 6. 일관성 있는 교육 정책으로 좋은 교과서를 만들자.

교육을 두고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한다. 입시 제도를 포함해서 교육과 관련된 제도가 수없이 바뀌어 왔다. 심지어는 부동산의 과열 때문에, 교육 정책의 개편을 검토해 보기도 한다. 시행착오로 인하여 얼마 안 가서 또 바꿀 정책은 좀더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교육 정책을 책임져야 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자주 바뀌는 것도 커다란 문제다. 일관된 정책을 수립할 수가 없다. 정책을 수립해 놓고 마무리느커녕 집행도 하기 전에 떠나는 것이다. 이제 제대로 되겠구나 하고 기대하면 정권이 교체되든지 또다른 이유로 바뀐다. 장관이 이런 형국인데 실무자라고 해서 최선을 다하리라고 믿어지지 않는다.

제8차 교육과정(?)이 표류하고 있다. 일관된 정책 수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떠도는 소문만 무성하다. 백년지대계인 교육이 이래서야 되겠는가 하는 걱정이다. 아무도 이에 대하여 명쾌한 답을 내지 못하고 있다. 교과서를 준비하고 있는 출판사도 인력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출판사뿐 아니라 협력 업체, 예를 들면 조판, 제판, 인쇄, 제본 등의 제작 업체와 심지어는 삽화가, 사진사까지도 교과서의 향방을 궁금해하고 있다. 제4차 교육과정기부터 5년을 한 주기로 하여 어김없이 찾아오는 이벤트(?)가 아무 소식이 없으니 목을 쭉 빼고 이리저리 두리번거릴 수밖에 없다. 빠른 시일 내에 정상을 되찾아 모두가 신바람을 내면서 교과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오기를 기대해 마지않는다. 22

## 1. 교육과정 심의관실 창설

1978년 3월, 편수국이 장학실과 통합되었다. 그 결과 장학실이 크게 비대해졌다. 편수와 장학 기능이 통합된 장학실은 실장과 장학 업무를 맡은 두 명의 담당관(교육 연구, 새마을 교육)과 편수 업무를 맡은 네 명의 담당관을 두게 되었다.

즉, 편수 행정은 인문 교육 담당관, 사회과 교육 담당관, 과학 교육 담당관, 교과서 행정 담당관이 맡고 있었다. 인문, 사회과, 과학 교육 담당관실에는 장학관을 담당관으로 하여 교육 연구관, 교육 연구사 등 32 명의 전문직이 교과목별로 배치되어 편수 업무를 수행하였고, 교과서 행정 담당관실에는 부이사관 밑에 서기관과 사무관 등 8 명의 일반 행정직이 배치되어 편수와 발행에 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는 전라북도 교육 위원회의 장학사로 근무하다가 이 해 10월 1일자로 장학실, 새마을 교육 담당관실 교육 연구사로 발령을 받았다. 새마을 교육 담당관실에서 내가 맡은 업무는 교육의 본질과 장학 행정과는 거리가 먼 것들이었다. 담당 업무에 회의와 갈등을 느끼고 있을 때 새로운 전기가 나를 찾아왔다.

1979년 2월 어느 날, 퇴근 무렵 김상준 장학실장이 나를 불렀다. 김 실장은 “함 선생, 편수 파트에 교육과정 심의관실을 새로 만드는데 거기서 일을 좀 해 주었으면 해요.” 하면서 내 눈치를 살피는 기색이었다. 나는 ‘교육과정’이란 단어만 들어도 반가운 나머지 생각하고 말 것도 없이 즉석에서 “예, 그렇게 하지요.” 하고 간단히 수락했다. 이것이 나의 20여 년에 걸친 문교부 편수관 생활의 첫 출발이었다.

내가 편수 업무에 입문한 이 시기에 문교부에는 교육 내용 행정 수행에서 역할 기능상의 일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즉, 문교부가 지금까지 전담해 왔던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 업무를 연구 기관(한국교육개발원)과 분담하여 수행하는 체제로의 대 전환이 이루어졌다.

문교부는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개발에 관한 정책과 기본 계



■ 함수관(한국교육개발원 편수관)



획의 수립,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심의 기구 구성과 심의회의 운영, 개정 최종안의 정리, 확정 및 고시 등의 정책, 기획,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연구 기관(한국교육개발원)은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내용에 대한 연구 개발을 주로 담당하게 되었다.

당시 문교부의 편수 담당 공무원들은 이러한 역할 기능의 분담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저항적 자세였다. 특히, 전문성이 높고 사명감이 강한 장기 근속 편수직일수록 이러한 경향은 심했다. 그래서 양자 간에 미묘한 마찰과 갈등이 있었으며 때로는 연구 협의와 업무 추진 과정에서 상호간의 경험 배경과 의견의 차이로 심한 논쟁과 의견 충돌이 노출되기도 했다.

문교부의 편수직들은 선발된 우수한 교원 출신들로서 대개 교육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일선 학교의 실정과 요구, 문제점 등 교육의 실체에 밝은 편이었다. 반면, 연구 기관의 연구원들은 주로 미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젊은 학자들로서 교육 현장 경험이 부족하고 교육의 실재에도 어두운 편이었으나 해외의 이론과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양자가 상호 협력과 조화를 이룰 것이 요구되었으나 업무 추진에서 그러한 분위기는 쉽게 조성되기 어려웠던 것이 당시의 실정이었다. 기득권 유지와 박탈과의 갈등 때문이었다.

또, 이 무렵 제 4 차 교육과정 개정과 관련하여 문교부의 편수 업무 담당 부서에 특기할 만한 변화가 있었다. 그것은 교육과정 개정 추진 과정에서 문교부 측의 기획, 조정, 종합 등의 역할을 담당할 부서를 창설한 것이다.

편수국이 장학실과 통합된 후 편수관들이 과거와는 달리 인문, 사회, 과학 편수관실로 나누어 일하다 보니 종래의 수석 편수관이 맡아 하던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의 기획, 조정, 종합의 업무를 담당할 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창설된 것이 직제에도 없는 ‘교육과정 심의관실’이었다. 그 후 1980년 2월 27일 정식 직제화되면서 ‘교육과정 담당관실’로 정착되었다. 당시 교육과정 심의관은 박용진 사회 교육 담당관이 겸임하였고, 사회과 교육 담당관실의 정태위 교육 연구관과 내가 교육과정 심의관실 창설 요원으로 배정된 셈이었다.

직제에도 없는 기구로 새로 발족한 교육과정 심의관실은 인문, 사회과, 과학 교육 담당관실과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교육과정 개정 추진의 기획, 연락, 조정, 종합 업무 기능을 수행하면서 한국교육개발원과의 공동 연구 추진의 창구 역할과 협조 및 조정 기능을 수행하였다. 교육과정 심의관실은 1980년에 직제 개편을 단행하여 장학실에서 편수 기능이 독립되어 편수국으로 다시 환원될 때 정식 기구로 확정되었고 부서의 명칭도 ‘교육과정 담당관실’로 변경되었다.

제 4 차 교육과정의 개정이 한창 진행되고 있던 1981년 4월, 교육과정 담당관실의 손재수 연구관이 개인 사정으로 퇴직하고 그 후임에는 연구사로 근무하던 내가 승진하게 되었다. 1981년 3월, 박용진 담당관이 공주교육대학 학장으로 전출되었고, 그 후임은 교육 연구 장학관실의 김상대 연구관이 담당관으로 승진하여 제 4 차 교육과정 개정을 마무리하게 되었다.

당시 이규호 장관은 1981년 12월 31일에 문교부 고시 제 424 호로 제 4 차 교육과정을 고시

하였다. 새 교육과정은 유치원과 국민 학교 1, 2, 3학년, 그리고 4, 5, 6학년의 도덕, 사회, 중학교의 도덕과 국사, 고등학교의 국민 윤리 및 국사는 1982년 3월 1일부터, 국민 학교의 4, 5, 6학년의 나머지 교과는 1983년 3월 1일부터, 중학교의 전 학년과 고등학교의 신입생은 1984년 3월 1일부터 전국의 각급 학교에 적용되었다.

## 2. 제4차 교육과정과 통합 교과서

제4차 교육과정의 개정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국민 학교의 교과목 간의 통합 운영을 처음으로 시도한 것이었다. 즉, 국민 학교 제1, 2학년의 경우 교육과정의 교과 편제는 교과별로 분과, 독립하되 수업 시간은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몇 개 교과를 통합하여 배당하였고 그 수업 자료는 통합 교과서로 편찬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었다. 그러니까 제4차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의 통합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고, 교과의 통합적 운영이라는 분과와 통합의 중간 수준의 형태였던 셈이었다. 그 후 제5차 교육과정에서야 비로소 정식으로 통합 교육과정이 출현했다.

수업 시간이 통합 배당된 교과의 교과서는 통합 교과서로 개발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즉, 도덕, 국어, 사회를 통합하여 ‘바른 생활’로, 산수, 자연을 통합하여 ‘슬기로운 생활’(제1학년만)로, 체육, 음악, 미술을 통합하여 ‘즐거운 생활’로 편찬하기로 하였다. 제1학년 초 1개월 간은 전 교과를 통합한 신입생 입학 초기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으로서 ‘우리들은 1학년’이라는 교과서를 탄생시켰다. 이러한 교과의 통합 운영의 시도는 우리 나라 교육과정사에 처음으로 나타난 것이었다.

나는 이러한 통합 교과서 중에 ‘우리들은 1학년’ 교과서를 맡게 되었다. ‘우리들은 1학년’은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에 남다른 고충과 애로가 많았던 과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까지 역대 교육과정과 교과서 사상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교과서였기 때문이었다. 처음부터 참고할 자료나 교과서도 없이 완전히 새로운 교과서 창조의 산고를 겪어야만 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담당자는 진권장, 서혜경 연구원이었다. 진권장 선생은 서울사대 교육학과 출신으로서 서울 시내 사립 국민 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하다가 연구원으로 전직했기 때문에 현장 경험이 있고 유능한 국민 학교 교사들과 유대도 있어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 그 때 진권장 연구원이 추천하여 ‘우리들은 1학년’ 교육과정과 교과서, 지도서 개발 작업에 참여한 집필진은 구연무, 이미숙, 기청 선생 등이 기억에 남는다. 대학 교수로는 이화여자대학교의 교육 심리학 교수였던 김재은 선생이 적극적으로 도와 주었다.

당시 연구 개발진은 주로 지금의 지하철 2호선 강남역 근처에 있는 유진장 여관에 모여서 작업을 많이 하였다. 김재은 선생님은 외국의 참고 자료와 도서를 보자기에 많이 싸 가지고 와서 제공하고 같이 작업에 참여해서 조언을 해 주어 많은 참고가 되었다.

우리들은 1학년 교과서는 국민 학교 제1학년 신입생이 입학해서 다른 교과의 학습에 들어가기 전에 3월 한 달 동안 학습하는 데 사용하는 교육 자료이다. 학교 교육을 받기 시작하는

학습자가 인생에 있어서 최초로 접하게 되는 첫 교과서가 바로 ‘우리들은 1학년’이라는 교과서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교육 자료이기도 한 것이다. 그 때까지는 각 학교별로 제각기 구성해서 프린트하거나 복사해서 적절히 활용했기 때문에 지역차, 학교차, 담임 교사차가 많이 나는 자료들이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제 4차 교육과정부터 제 1학년 과정에 처음으로 정식 교육과정으로 도입되어 국가 기준화된 것이었다. 나와 교과서 개발팀은 우선 전국의 국민 학교 중에서 그동안 이 프로그램을 특색 있게 운영한 학교를 탐문, 조사하여 그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그리고 외국의 자료를 구해서 참고하고 1학년 담임을 맡은 경험이 풍부한 1학년 담임 교사들의 의견과 아이디어도 모았다.

### 3. ‘우리들은 1학년’ 교과서 탄생

수 차례의 협의와 작업을 통해서 개발진은 ‘우리들은 1학년’ 프로그램의 구조를 결정했다. 당시 개발팀은 ‘우리들은 1학년’의 내용을 ① 학교 생활의 적응, ② 학습의 기초, 기본 기능 육성, ③ 학생의 건강과 안전 유지 등을 기본 골격으로 삼아 66 시간분의 교재를 구성하였다 (실험 후에 학습량이 과다하다는 판단 아래 59 시간분으로 축소 조정하였음. ).

그 때까지 국민 학교 교과서는 모두 국판으로 통일되어 있었는데 ‘우리들은 1학년’ 교과서는 처음으로 4X6 배판으로 넓은 판형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교과서에 Work book 기능을 처음으로 도입하여 그저 깨끗하게 보는 교과서가 아니고 학생들이 직접 그려 넣고, 써 넣고, 색칠하고, 붙이고, 오려 낼 수도 있는 종래의 교과서와는 전연 기본 개념과 형태가 다른 새로운 형태의 교과서로 만들었다.

우리들은 1학년 교과서는 아직 문자 이해득 단계에 있는 입학 초기의 학습자용이어서 주로 삽화, 사진, 디자인, 도형 등 시각적인 표현과 편집이 중요했으므로 더 많은 힘이 들었다. 문제는 삽화와 사진, 편집, 인쇄였다.

당시 1종 도서 개발비의 삽화료는 시중의 일반 도서나 잡지의 삽화료 단가와 비교도 되지

“

‘우리들은 1학년’은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에 남다른 고충과 애로가 많았던 과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까지 역대 교육과정과 교과서 사상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교과서였기 때문이었다. 처음부터 참고할 자료나 교과서도 없이 완전히 새로운 교과서 창조의 산고를 겪어야만 했다.

”

않을 정도로 낮았다. 책정된 삽화료로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삽화가에게조차 차마 삽화를 청탁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그래서 삽화의 수가 많은 다른 저학년 교과서의 개발팀들은 현장 교사 중에서 삽화를 그릴 수 있는 아마추어 삽화가를 물색해서 적은 사례를 내밀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그려 달라는 공색한 사정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는 것을 훗날 동료 편수관들로부터 듣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들은 1학년’ 교과서는 인생에서 최초로 대하는 교과서인데 그래도 장차 먼 훗날까지 좋은 인상으로 남을 수 있도록 질이 높은 삽화를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아무에게나 맡길 수가 없었다. 수소문 끝에 어렵게 두 명의 프로 삽화가를 찾았는데 당시 한국 일보의 연재 소설에 삽화를 그리고 있던 전성보 작가와 동화의 삽화를 많이 그리던 정준용 작가였다.

개발원의 진권장 선생과 나는 무조건 그들을 만났다. 그리고 사정하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무교동의 한 식당에서 소주잔을 기울이며 인생 최초의 교과서에 두 분의 삽화가 들어가는 것은 삽화료로는 계산할 수 없는 보람과 역사적 가치가 있다느니, 별스러운 수사를 다 쓰면서 두 작가를 회유하고 설득했다. 다행히 두 분 모두 순수하고 선한 분들이어서 삽화료보다는 교육적인 가치와 공헌 쪽에 무게를 두고 삽화를 그려 주기로 마음먹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문교부의 편수 공무원의 처지가 보기에 딱하다고 판단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들의 황당한 요구를 들어 주었다.

당시 두 삽화가의 원고 청탁 수락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고 감격스럽기까지했다. 열두 번도 더 절을 하며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말했으나 그 후 그분들에게 보답한 것이 하나도 없어 지금까지도 꺼림직한 마음을 지울 수 없다.

한편으로는 문교부의 편수관이라는 사람이 구차하게 구걸을 해서 교과서를 만든다고 생각하니 속으로는 한없이 자신의 처지가 한심하고 초라하게도 생각되어 그 당시 서글픈 마음을 달랠 길이 없었다.

이런 고초를 거쳐 겨우 실험본 교과서를 만들어 실험 학교에 내보냈더니 웬 말들은 그렇게 많은지, 어찌 그리도 요구 사항과 주문도 많은지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다. 교과서의 내용이 모두 삽화이고 사진이니 더 말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우리들은 1학년’ 교과서의 표지는 처음에 전성보 작가가 그렸는데 실험 단계에서 하도의 견이 많아 고민하던 중 마침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서양 화가인 송의여전 김정 교수를 만나 술을 마시며 이런 사정을 이야기하자 그가 얼마 후 크레파스로 그린 표지를 들고 종합 청사 사무실로 찾아와 주어 얼마나 고맙고 기뻐는지 지금도 그 때의 고마움을 잊을 수 없다. 이래저래 제 4차 교육과정과 ‘우리들은 1학년’ 교과서는 나에게 교과서 편찬의 어려움과 고달픔을 직접 몸으로 가르쳐 준 병아리 편수관 입문기를 항상 회상하게 만들고, 편수관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이 되었다. 21

<1978~1994년 교육과정 담당관실 편수관, 교육과정 담당관, 편수 관리관>

# 국민 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편찬



■ 김용민(배경: 한국학교 교과서)

## 1. 제 4 차 교육과정기에 달라진 것들

제 4 차 교육과정기의 사회과 교과서 편찬에 특기할 일은 첫째, 교과서 개발 시스템이 종래의 편수관과 편수관 주도하에 모인 전문팀(교수, 교사 중심: 이른바 아무개 편수관 사단)을 중심으로 편수관 주도하에서 개발되던 시스템에서 연구 기관에 위탁하여 개발하는 1 종 도서 시스템으로 바뀐 것이고, 둘째, 교과 편제에서 저학년(1, 2학년)은 도덕, 국어, 사회가 통합된 바른 생활 교과서가 생긴 것이다(교육과정 편제표에서는 여전히 분과형이었으나). 셋째, 교과서 외적 체제면에서 전 교과서가 컬러화되었으며 지질이 좋아졌고, 저학년(바른 생활) 교과서는 판형이 4×6 배판으로 커졌다. 넷째, 사회과 교과서의 내적 체제면에서 사회과 탐구 모형의 틀이 제대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교과서 편찬에 투입된 인력이 과거 어느 때보다 많았으며, 이 인력은 이 때 교과서 개발에 참여하여 쌓은 경험으로 그 뒤 한국 사회과 교육을 리드하는 역군이 되는 소양을 쌓게 되었고, 이 분들이 사회과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국민 학교 사회과 교과서 편찬사 중에서 제 4 차 교육과정기의 특징을 위에 든 다섯 가지로 보고,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교과서 편찬 과정, 조직, 주도적 인물 등을 중심으로 에피소드를 가필해 가면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한다.

## 2. 연구 개발형 사회과 교과서

제 4 차 교육과정에 의한 사회과 교과서는 국민 학교 사회과 교과서 중에서는 연구 기관에 위탁하여 개발하게 된 첫 예가 되었다. 사회과 교과서 중에서 제 3 차 교육과정기에 국정, 또는 단일본으로 편찬되었던 중 1, 2, 3 사회(한국교육개발원), 고등학교 국토 지리(서울대 사대), 인문 지리(서울대 인문대), 정치 경제(한국교육개발원), 사회 문화(한국교육개발원) 등 대부분 1978년 중에 개발하여 1979년에 공급된 중·고등 학교용 사

회과 교과서들의 선례는 있었지만 국민 학교용은 이 때가 처음이다. 연구 개발형 교과서를 개발한다는 취지는 비교적 긍정적이었으나, 실제로 연구 기관에 위탁하여 개발해 보니, 공급 기한에 쫓기는 짧은 개발 기간 때문에 실제로 연구하여 나온 연구 결과를 적용하는 교과서가 되지 못하고, 종래의 편수관 주도하의 편찬팀들이 편찬하는 형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다만 편찬 과정이 보다 도식화, 과학화되고 편찬 과정에 연구 인력이 많이 참여할 수 있었던 이점은 있었다.

이 연구 개발형 교과서 제도가 성안된 것은 1977년 말경이었다. 1977년 김인정 교과서 사태로 유능한 선배 편수관들이 물러난 후, 편수국과 교과서 행정 재건 또는 쇄신을 위해 장기 육 편수국장과 편수과 행정팀(김상동 사무관 중심)은 전 교과서 국정화와 편수관 대대적 증원을 골자로 하는 안을 내었으나, 장인숙 차관에 의해 거절당하고, 그 다음에 다시 성안된 것이 연구 개발형 교과서 제도와 외부에 교육과정개발센터(CDC)를 두는 제도였다. 이 때, 연구 개발형 교과서와 교육과정개발센터가 있어야 한다는 안을 낸 쪽은 한국교육개발원의 이영덕 원장, 신세호 부장, 이화여대 강우철 교수 등이 안을 낸 걸로 알고 있다. 이 안의 구체적인 성안을 위하여 남산에 있던 국사편찬위원회 사무실에서 관계 인사들이 모여 작업했는데, 주무는 신세호 부장, 변영계 연구원 등이었다고 기억된다. 이 때, 편수국에는 행정 파트 사무관이 참가하여 정부의 의견을 내었지만, 연구 개발형으로 갔을 때의 문제, 보완할 점 등에 대한 의견을 내는 정도였다. 필자도 가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오라는 지시를 받고 몇 번 가서 참여하였으나, 대세는 연구 개발형으로 확정되어 있었다.

이야기가 옆으로 나갔으나, 사회과 교과서 편찬을 맡은 한국교육개발원 사회과 교육 연구실은 이를 위한 기초 연구가 상당히 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강우철, 정세구 등 자문 교수와 한면희 실장을 중심으로 한 사회과 교육 연구실에서는 평가 자료 개발 프로젝트(EM 사업)를 통하여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을 하였고, 교과서 모형 개발 연구 등의 연구 실적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연구 개발형으로의 기초는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짧은 개발 기간(교육과정과 교과서 동시 개발, 개발 기간 1년여)과 많은 책 수(바른 생활 교과서, 지도서 8책, 사회 12책)를 연구, 개발하여 책을 편찬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무리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회과 교과서 단원 전개 모형 개발 연구의 실적이 있었던 한국교육개발원 사회과 연구실에서는 국민 학교 사회과 교과서 단원 전개를 대단원명, 대단원 도입(개관), 주제명, 주제 도입, 연구(공부할) 과제, 본문(팩트, 스토리 중심), (보충·심화 문제), 정리로 하는 틀을 정착시키고, 각 부문(도입, 과제, 본문, 정리)의 서술 형식, 서술 내용이 정리되어 지금까지 사회과 단원 전개의 틀로써 쓰여 오게 되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편수관 주도의 국정 교과서 편찬이든, 연구 개발형 교과서 편찬이든 담당자가 유능하고, 함께 참여하는 팀들이 전문성이 있고 팀워크가 좋으면 좋은 교과서 편찬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연구 개발형은 그 취지를 살릴 수만 있으면 연구 개발형이 좋은 교과서를 만드는 조건이 된다는 것은 명백한 일이라 생각한다.



### 3. 교과서 편찬, 심의 과정 관여 인사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제 4 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서 편찬, 발행 과정에서 문교부는 기획, 위탁, 예산 배정·심의, 인쇄, 공급의 일을 맡고, 위탁을 받은 연구 기관은 기초 연구, 집필진, 연구진 구성, 원고 및 삽화 작성, 수정 등의 작업 과정을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제 4 차 교육과정기의 국민 학교 사회과 교과서 개발 당시 문교부 사회 과학 담당관실의 담당관은 이영교(작고), 김기열(작고) 장학관이었고, 초등 사회과 담당은 필자 혼자였으나, 교육과정 심의회, 교과서 편찬심의회와 개발 기관의 협의회가 열릴 때에는 박병호(사회), 임덕순(지리) 연구관이 참여하였고, 1980년 11월에 부임한 윤종영 연구사는 후에 참여했다.

필자는 제 4 차 교육과정에 의한 국민 학교 사회과 교과서 편찬이 끝난 1982년 9월 일본의 동경도립대학으로 해외 연수 유학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 후 교과서의 수정 및 관리는 사회과의 영역별로 윤종영(역사), 민흥기(지리), 나청운, 이영주(사회) 편수관이 이를 나누어 맡은 것으로 알고 있다.

1 종 도서 편찬심의위원이었던 분은 이원순(서울대), 이찬(서울대), 은용기(경서중), 최완기(서울 시립대), 차경수(서울대), 조광준(서울교대), 이태근(서울교대), 박환이(중대부국), 구연무(돈암국), 권석주(서울시 장학사), 한면희(한국교육개발원), 김태홍(서울사대부국) 등이었다고 생각된다.

개발 기관에는 교과서 개발을 위한 집필진, 연구진, 협의진이 구성되어 있었는데, 집필진, 연구진 명단은 당시 교과서 관권란에 명기되어 있고, 협의진은 어떤 분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한국교육개발원 사회과 교육 연구실의 교과서 담당자로서는 정세구 자문교수(현 서울대 사대 교수), 한면희 실장(현 인천교대 교수), 이양우(지리, 현 진주교대 교수), 안희천(사회, 현 서울교대 교수), 서재천(사회, 현 공주교대 교수), 최병모(사회, 현 한국교원대 교수), 김항구(역사, 현 한국교원대 교수) 씨 등이 초등 사회과 교과서 편찬에 관여했다. 한면희 실장을 비롯한 연구원들은 각각 전공과 관계 있는 단원 영역을 맡으면서 학년, 학기별 교과서 전체를 맡아 정리, 편집하는 역할을 했다. 이들 중 한면희 실장을 제외한 분들은 국민 학교 사회과 교과서와 처음 인연을 맺게 되었지만, 사회과의 배경이 되는 각 학문 영역의 내용 요소를 국민 학생 수준에 맞추어 짜고 전개시키는 데 많은 노력을 했다.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교과서 담당별로는 6 학년 : 서재천, 김항구, 5 학년 : 안희천, 최병모, 4 학년 : 이양우, 3 학년 : 한면희 등으로 되어 있었던 것 같다. 이 분들은 이때 국민 학교 사회과 교과서 개발 경험과 본인들의 탁월한 능력과 노력에 힘입어 현재 한국 사회과 교육계의 거장이 되었다.

### 4. 바른 생활 교과서

제 4 차 교육과정을 개발할 당시, 연구 개발을 위탁받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저학년의 교과

통합이 제기되었을 때, 작업, 회의 등에 참여한 편수관들은 이를 전적으로 반대하였다. 이것은 지금 생각해 보면 각 교과 담당자들이 자기 교과를 지키려는 교과 교육자의 영토 수호 의지의 발로가 아니었을까 생각되지만, 당시는 우선 실험이나 연구를 해 보고, 그 결과에 좇아 통합을 하든지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고, 교과 자체가 관련 학문의 통합인데 오랜 교과 교육 전통을 무시하고 교과를 통합시킨다는 것은 교과 교육의 원리상 있을 수 없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이영덕 원장(내가 기억하기로는 첫 발안자가 아닌가 생각됨.)과 통합과의 입김도 세어, 절충안으로 나온 것이 교과서만의 통합이었던 걸로 알고 있다.

그러나 막상 교과서 개발에 들어가 보니 도덕, 국어, 사회를 통합한 단원을 구성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워 당시 이 교과서 개발을 맡은 이대규 국어 교육 연구실장(현 부산대 교수)을 비롯한 한국교육개발원의 국어, 도덕, 사회과 교육 연구실 팀들이 무척 고생한 걸로 알고 있다. 필자는 바른 생활 교과서 개발 주무가 국어 교육 연구실이고 내용 자체가 국어 중심이기에, 사회과 교과서 개발에서 관심 밖의 사안이라고까지 생각하기도 했었다. 말하기로는 도덕, 사회과적 소재를 가지고 국어 습득 능력을 기르는 국어 교과서를 만든다고 했지만, 이게 쉽게 될 수 있는 일인가.

그러나 이대규 실장을 중심으로 하여 개발된 바른 생활 교과서(지금 기억으로 맨 첫 단원에 실린 글이 ‘가자, 가자, 산으로 가자.’였음.)가 문교부에 제출되었을 때, 인문 과학 담당 관실의 최현섭 선생과 함께 비교적 괜찮은 교과서라고 판단하고 실험에 투입할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느닷없이 김찬재 편수국장(후에 차관)께서 국민 정신 교육에 적합한 교과서가 아니니 다시 개발하되,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개발하라는 것이 아닌가. 그 때 그 교과서가 왜 청와대에 보고되었는지(특별한 현안이 없는 한 교과서 한 권이 보고되는 예는 흔하지 않았음.) 또, 어떤 관점에서 분석되어 부적합 판정이 났는지는 알 수 없었다. 당시 모든 교과서 개발 예산은 문교부에서 직접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고 개발 기관에 위탁하여 쓰도록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바른 생활 개발비는 이미 다 써 버린 상황에서 어떻게 처음부터 교과서를 개발해야 할지 매우 당혹스러웠다. 최현섭 선생과 필자는 우선 개발 대표로는 강우철 교수를 추천하기로 하고 국어, 사회, 도덕 영역별 교과 전문가로 팀을 짜기로 했는데, 최현섭 선생이 이 일을 무난히 해낼 수 있을 분은 정진권 선배밖에 없을 것 같다고 했다. 그 뒤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기억이 없는데 정진권 선배께서 합류하게 되었다. 이미 최현섭, 정진권 편수관께서 이와 관련된 글을 발표하면서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 작업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 때 필자는 편수관실에 근무한 지 9년이나 되었는데 무얼 어떻게 해야 할지 가닥조차 잡지 못할 정도로 모르는 게 많았다. 호텔에서 커피값을 아끼느라 강우철 선생의 등산 버너를 갖다 놓고 물을 끓여 커피를 마시면서, 강 선생한테서 교과서 내용 요소를 짜는 틀의 양식을 새삼스럽게 그려 가며 배운 노하우는 그 뒤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많은 브레인스토밍과 작업 과정을 거쳐 교과서 단원 구성안을 짜고 내용안을 확정짓고 이것을 저학년 수준에 맞게, 재미있게 쓸 수 있는 분을 여러 분 모셔서 각각 몇 단원씩 맡아 쓰도록 했으나, 제대로 된

것이 나오지 않자 무리인 줄 알면서도 정진권 선배님께 하시도록 부탁하는 수밖에 없었다. 정 선생은 그 많은 양의 원고를 정리해 와서 서성옥, 구연무 교장 등 초등 선생님들께 읽기를 부탁하곤 했는데 나중에는 일정에 쫓기어 모든 걸 혼자서 하시게 된 줄 안다. 그 때 필자 같이 무능한 사람은 밖으로 표현은 안 하면서도 마음 속으로 많이 부끄러워했다.

이 교과서가 개발, 공급된 뒤 정 선생님이 인문 과학 편수관실에 발령받아 계실 때, 대선 배요, 편수직에의 애착과 금지를 누구 못지않게 지녔고, 최현배 선생 이래의 유능한 국어 편수관이었던 정 선생을 좀더 잘 모셨어야 했는데 제대로 못해 드린 것 같아 세월이 갈수록 마음 속에 드는 짐으로 남아 있다. 그 때 필자 나이도 갓 마흔이었던 것 같은데 왜 그리 알이 들지 않고 성숙하지 못했는지……. 지금에 와서 반성하고 후회해 본들 다 지나간 일일 뿐…….

다시 바른 생활 교과서로 가서, 바른 생활 교과서의 첫 단원의 첫 페이지에 어떤 내용과 어떤 글자를 실을 것인가를 놓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사람과 협의한 기억 때문에 지금도 어느 교과서든 첫 단원의 첫 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에 관심을 가진다. 학교에 처음으로 들어온 아동이 맨 처음 대하는 교과서의 장면은 평생 기억 속에 안고 다니는 것이기에, 첫 장면은 세심한 배려를 가지고 구성해야 한다. 그래서 첫 장면 구성은 우리 나라의 전통과 상징을 표현하고, 학생의 장래와 희망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며, 교과 교육과정의 내용 요소가 깃들여져 있음과 동시에 처음으로 배우는 글이기에 흥미롭고 배우기 쉬운 글과 문장이 들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한 브레인스토밍은 길고 지루했다. 일본 옛날 교과서의 붉은 해, 사쿠라, 후지산 등이나 최근 교과서에 나타난 바닷가에서 바다로 향하여 뻗어 나가야 함을 상징하는 글과 그림 등이 그 때 본 것 중에서 인상적이었다.

바른 생활 교과서 맨 첫 페이지는 ‘하늘, 파란 하늘, 파란 하늘에 우리 태극기.’라는 글과 관련된 삽화가 나왔는데, 우리 나라의 자랑스러운 것 중 파란 가을 하늘과 태극기가 가진 상징성을 중심으로 구성한 것이었다. 교과서가 나가자 처음으로 배우는 글자치고는 어렵다는 반응이었으나, 내용이 지닌 함축성과 상징성은 국민 정신 교육용으로 본다면 무리가 없다는 반응이었다.

## 5. 교과서의 체제

사회과 교과서뿐 아니라 제 4 차 교육과정기의 모든 교과서가 지질이 개선되고 컬러화되었으며, 1, 2 학년 교과서와 음악, 미술, 교과서가 판형이 확대되었다. 제 3 차 교육과정기의 4, 5, 6 학년 사회과 교과서는 색도가 없는 흑백 교과서였는데, 제 4 차 때부터 전면 컬러화됨으로써 외적 모습이 일신되었다. 컬러화되자 색감이 좋은 삽화용 사진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각종 화보에서 좋은 사진을 잘라 쓰는 경우가 제법 많았는데, 원판과 달리 사진 효과가 좋을 리가 없었다. 그래서 좋은 원판을 구하기 위해 각 시·도, 시·군 공보실, KOTRA, 도로공사 등에 직접 찾아가거나 공문을 보내 원판 대여 사용을 허락받아 사용하기

도 했다. 그 중 교과서 표지에 쓰이는 사진은 그 학년 내용 요소를 상징하고, 사회과 학습의 대상인 사회 현상을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어야 하므로 그런 사진을 썼다. 사회 4-1의 표지로 실린 경부 고속 국도 금강 휴게소 부근 원경 사진은 도로공사에서 협조받은 것이었다.

교과서 내적 체제, 즉, 단원 전개 절차는 제 4 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서가 개발되기 전에, 한국교육개발원 사회과 교육 연구실에서 1977년(?)에 연구한 사회과 교과서 단원 전개 모형에 대한 연구 보고서와 모형 교과서 개발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제 4 차 사회과 교과서에 적용되었다. 사회과의 단원 전개 절차가 탐구형 모형으로 바뀐 것은 이미 제 3 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서부터이지만, 이것이 보완된 것이다. 그 때 어떻게 하면 사회과 내용이 어렵다는 얘기를 듣지 않을 수 있도록 짜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전개시킬 것인가, 그리고 사회과의 배경이 되는 각 영역의 내용을 하나의 단원이나 주제 속에서 어떻게 통합하여 구성할 것인가를 놓고 모두 고민하기도 했다.

## 6. 끝내며

제 4 차 교육과정기의 사회과 교과서 편찬은 편수 행정의 변천면에서 보면 연구 개발형 국민 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첫선을 보인 것이었다. 연구 개발 기관에 위탁하면서 극소수의 문교부 담당자(문교부의 초등 사회과 담당은 실질적으로 필자 혼자였음.)가 많은 책을 담당함으로써 조정, 심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 문교부 담당자보다 개발 기관 쪽에서 교과서 개발의 주도권을 쥔 상황이었다. 위탁 개발을 맡은 한국교육개발원의 사회과 교육 연구실은 많은 인원을 보충하였고, 이들 연구원들은 새로운 연구 개발형 교과서 편찬에 많은 노력을 하여 비교적 짜임새 있는 교과서가 나오게 했고, 본인들의 능력과 학력에 교과서 편찬과 관련된 경험이 보태어져 전문성 있는 사회과 교육가로 성장하였다.

교과서의 외적 체제면에서도 전면 컬러화와 지질 개선으로 국력 신장에 걸맞는 교과서를 내게 되었고, 내적 체제인 단원 전개 절차면에서도 탐구 학습 과정 중심의 전개 체제가 정착되었다. 제 4 차 교육과정기에 처음으로 등장한 저학년의 통합 교과서인 바른 생활은 교과서 편찬 사상 유례 없는 재개발이라는 절차를 거치면서 편찬되었고, 국어 교육의 언어 교육 논리보다 국민 정신 교육면이 보다 강조된 교과서가 되었다. 24

<1973~1994년 사회과 편수관, 교육과정 담당관, 사회 과학 편수관>

# 1980년대 교과서의 위상



■ 이홍국 (해천대학교 교수)

## 1. 머리말

우 리 교과서사에 있어 1980년대처럼 다사다난했던 때도 드물 것이다. 역사적 경험으로 보아, 대체로 정권이 바뀌면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 바람을 몰아오게 마련이다. 그런 와중에 우리의 교과서도 들어 있었던 것이다. 우선, 1980년대라고 하면, 이른바 신군부 세력에 의한 제 5 공화국 시대를 말하게 된다. 그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의 1980년대는 제 4 차 교육과정기(1981. 12. ~1987. 6.)가 이행된 시기이기도 하다.

당시의 교과서 사정을 보면, 1982년부터 새 교육과정에 의한 신·개편 적용이 시작되었다. 중·고등 학교 교과서의 경우는 1종 도서 개발이 착수됨과 아울러, 1982년 4월 1일에 2종 도서의 검정 공고(문교부 공고 제 82-17 호)로 이어졌다. 2종 도서는 이듬해(1983) 1월 10~31일에 신청을 받아, 그 합격본(과목당 5종 이내)에 한하여 1984학년도부터 적용하기 위해서였다.

이 무렵에 있어, 교과서의 위상은, 좋은 교과서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모색이 있었다든지, 국민 학교 저학년용에서의 통합 교과서 모형이 이루어졌고, 독본 제작 체제의 전면적인 개선 등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그런 한편으로, 일본의 사회과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야기된 한국사 왜곡을 둘러싼 문제는 국내 외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이와 같은 일련의 일을 차례로 알아보도록 한다. 제한된 지면이므로 하나의 ‘비망’을 위한 서술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 2. 교과서의 변화

제 4 차 교육과정기는 건전한 심신의 육성, 지력과 기술의 배양, 도덕적인 인격의 형성, 민족 공동체 의식의 고양 등 4대 지향점이 기본 틀로 구성되어 있다.<sup>1)</sup> 이 교육과정기는 또한 광복 이후 처음으로 교과서관에 대한 모색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당시의 교과서에 대한 생각을 살피고, 교과

서 출판에 반영된 몇 가지 변화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 가. 좋은 교과서에의 모색

1963년, 함종규 교수는 처음으로 교과서에 관한 정의를 내보인 바 있다. 그는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구성에 따라 조직되고 배열된 교과와 주된 교재로서 교수용에 제공되는 학생용 도서이다.”<sup>2)</sup>라고 정의했다. 그 후, 교과서에 대한 좀더 다양한 관점들이 취합, 제시된 것은 1987년 문교부(교육과정 담당관실)에 의해서였다. 이것이 30 쪽짜리 대내용 정책 자료인 「좋은 교과서란 어떠한 교과서인가?」였다. 이에서 보면, ‘교과서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라고 하여 보수적인 생각, 중간적인 생각, 혁신적인 생각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 교과서관을 밝혀 놓고 있어 주목을 끌었다. 이 중에서 혁신적인 생각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가. 교과서는 워크북, 각종 참고 문헌, 사전 등과 같은 자료도 포함하는 것이다.

나. 교과서는 그 자체를 배우고 익혀야 할 목적물이 아니라,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다. 교과서는 학습 효과를 보다 더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 중의 하나일 뿐이다.

라. 교과서는 지역차, 능력차를 충분히 고려해서 여러 가지 종류를 만들 수 있다.<sup>3)</sup>

이상에서 보인 ‘혁신적인 생각’은 오늘의 관점에서 볼 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교과서는 하나의 제도 매체로 존재하는 교수·학습 수단이기는 하나, 그 기능과 활용성 면에서 교전적(敎典的)인 엄숙·권위주의로부터 크게 벗어나 있다는 사실이다. 이 같은 관점은 추상적이거나 ‘좋은 교과서의 조건’을 생성하도록 이끌었다. 즉,

① 가르치기 편리하고, ② 배우는 데 유용하고, ③ 교과 교육 목표의 특성을 잘 반영시켜야 하며, ④ 학생들이 매력을 느끼도록 하며, ⑤ 교과 목표 달성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이 기울여진 것<sup>4)</sup>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교과서도 하나의 책(도서)이므로 ‘편집 디자인’과 같은 외형적 측면에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한다면, “그러한 외적 마무리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지원이 되지 못한 점 등을 이 기회에 깊이 인식해야 할 것”<sup>5)</sup>이라고 자성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이른바 ‘5 공 시절’에 교과서 편수 당국에서 전향적(前向的)인 교과서관을 제시함과 아울러, 스스로의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내보이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자성적 비판은 교과서 행정 당국이 보여 준 최초의 사례였다.<sup>6)</sup>

오늘에 생각해 보면, 당시의 그러한 견해는 1980년대식 분위기에 비추어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교과서에 대한 인식을 어떤 일로



에 고정시키지 않으려는 생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특기해 둘 만한 일이다.

한편 윤리, 사회과 교과서들을 통하여 당시의 국정 슬로건이었던 ‘정의 사회 구현’에 관한 정권적 빙자가 두루 나타나는 등 세련되지 못한 징험(徵驗)들이 드러나기도 했다.

## 나. 교과서 발행에 반영된 변화

제 4 차 교육과정기에 편찬, 발행된 교과서 가운데 눈에 띄는 특징을 든다면 통합 교과서의 생성과 외적 체제의 전면적인 개선 사례를 꼽을 수 있다.

### (1) 통합 교과서의 발행

제 4 차 교육과정기 중 국민 학교 교육과정(문교부 고시 제 442 호, 1981. 12. 31.)은 1, 2 학년의 경우 각 교과목의 수업 시간을 2~3 교과씩 몇 개의 교과군(教科群)으로 묶어 배당했다. 이로써 교육과정의 통합 운영, 교과목의 통합적 지도 근거를 국가 수준에 맞춘다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개발한 교과서가 통합 모형인데, 이는 획기적인 일이었다.

원래 이 모형은 제 2 차 교육과정(문교부령 119 호, 1963. 2. 15.)이 적용된 때부터 고안된 바 있으나, 실제로 실현을 보기는 제 4 차에 이르러서였다. 이의 개념은 도덕, 국어, 사회를 「바른 생활」로, 산수, 자연을 「슬기로운 생활」로, 체육, 음악, 미술을 「즐거운 생활」로 하며, 이들 8개 교과목을 통합하여 「우리들은 1 학년」으로 각각 묶어 낸 것이다. 특히, 「우리들은 1 학년」의 경우는 초등학교 입학 초기인 3월 한 달 동안의 기초 학습 내용을 취학 전 생활과 관련하여 활동 주제별로 구성한 통합 교재로 개발되었다. 이와 같은 체제는 광복 후 최초의 모형으로 일선 학교에 적용되었던 것이다.<sup>7)</sup>

### (2) 교과서 체제의 개선

여기서 ‘교과서 체제’란 ‘외적 체제’를 말한 것이다. 1982년은 제 4 차 교육과정기가 사실상 시작된 해였다. 당시 교과서의 질적 개선이 전에 없이 적극적으로 실현되었는데, 우선 1 종 도서의 지질 개선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종래에는 ‘깁지’를 주된 용지로 사용했으나, 1982 학년도 신학기부터 미색 중질지(70 g/m<sup>2</sup>)로 바꾸었던 것이다. 따라서, 2 종 도서의 경우도 1983학년도부터 1 종 도서와 같은 용지로 교체되었다.<sup>8)</sup> 이후 미색 중질지의 사용은 1990년대 말까지 「음악」, 「미술」, 「서예」, 「사회과 부도」 등을 제외한 모든 교과서에 적용되어 외적 체제 개선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그리고 판형의 대형화도 제 4 차 교육과정기에 실현되었다. 요컨대, 종래의 국판이 4X6 배판으로 확대되었고, 학생들이 교과서에 직접 그릴 수 있게 하고 써 넣게 함으로써 학습 친화력을 돕도록 유도했다. 한편, 고등학교용 과학 교과서들(물리, 화학, 생물, 지구 과학 등)은 크라운판으로 변형하여 내용 제시의 효율화와 학습 효과를 높이려 애썼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전자 관련 도서가 완간을 본 것도 제 4 차 교육과정기였다. 1969 학년도에 처음으로 개발된 「전자 기기」(공업계 고등학교용)로부터 시작된 이 분야의 교과서(1

종 도서)들은 제 4차 교육과정기가 끝나는 1987년까지 연차적으로 37 책의 신·개편이 완료되었고, 10 책의 교사용 지도서를 완간한 바 있다. 특히, 전자 관련 도서들은 우리 나라의 전자 공학 발전을 가능케 한 기본 교재로 뒷받침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 3. 한국관 왜곡 - '교과서 파동'에 대한 비망

제 4차 교육과정기는 교과서 신·개편 및 체제 개선 등 기본 현안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외적 환경으로 한·일 양국 간의 교과서 분쟁이 거듭되고 있었던 시기이기도 했다. 전 국민을 엄청난 충격에 휩싸이게 했던 일본 문부성의 검정 도서를 둘러싼 한국관 왜곡에 따른 일련의 '교과서 파동'이 그것이다.

#### 가. 사건의 발단과 왜곡의 노출

##### (1) 사건의 발단

1982년 6월 말, 일본 문부성에 의한 교과서 검정 완료와 더불어, 「아사히 신문(朝日新聞)」 등 언론 매체들에서는 자국 정부가 검정한 교과서 관련 기사를 일제히 보도했다. 당시 일본 전역에 전시 중이던 「고교 일본사」, 「고교 세계사」 및 「고교 현대사」 등 22 책의 신검정본 도서들이 한국을 포함한 동남아 여러 나라에 걸쳐 그들이 자행한 식민 통치 행위, 또 그런 과정에서 저지른 갖가지 범죄 행위를 은폐, 조작한 내용이 그대로 노출되었다는 지적이었다.

##### (2) 드러난 왜곡

이렇게 발단된 한국관 왜곡 사건은 즉시 현해탄을 건너 국내 여론을 크게 자극했으며, 마침내 전 국민의 공분으로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물론, 당시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은 검정본에 나타난 묵과할 수 없는 왜곡 표현에 관한 문제였다. 이를테면, 안중근 의사를 '건달'의 뜻이 강한 '壯士' 살해범으로, 3·1 운동을 '폭동'이라 표기하는 등 여러 역사적 사실에 대하여 합리화시키거나 위증을 드러냈던 것이다.

“

당시 일본 전역에 전시 중이던 「고교 일본사」, 「고교 세계사」 및 「고교 현대사」 등 22 책의 신검정본 도서들이 한국을 포함한 동남아 여러 나라에 걸쳐 그들이 자행한 식민 통치 행위, 또 그런 과정에서 저지른 갖가지 범죄 행위를 은폐, 조작한 내용이 그대로 노출되었다는 지적이었다.

”

이러한 사례는 현대사 쪽에서 더욱 심하게 노출되고 있었지만, 단순히 용어상의 문제라기보다 한국사 전반에 걸친 사관(史觀)의 왜곡임에 분명했다.

무엇보다도 문제의 교과서들에서는 한·일 관계사를 지배, 피지배의 관계로 파악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한·일 관계사의 대부분을 일본이 한국을 굴복시킨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정의는 항상 일본 쪽에 있고, 잘못은 항상 상대방(한국)에 있다는 논리를 폈다.<sup>9)</sup> 예를 들면, 일본이 주어가 되는 침략 사실의 경우 침공은 ‘진출’로, 탄압은 ‘진압’으로, 출병은 ‘파견’으로, 수탈은 ‘양도’로, 지배는 ‘통치’로, 전제(專制)는 ‘통제’로, 패퇴는 ‘철퇴’로 각각 바꾸었던 것이다.

상대적으로 한국이 주어가 되는 국제 관계에 대해서는 복속, 세력화, 종주권화 등의 용어를 어느 시대에서나 사용했고, 심지어는 독립 운동조차 ‘폭동’이라는 말을 서슴없이 사용했다. 이와 같이 한국 관련 역사를 전개함에 있어, 예부터 불명예스러운 점은 크게 부각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를 왜곡하여 더욱 불리한 상태로 표현했던 것이다. 그런 가운데 대외 침략 과정의 부당한 행위는 표면상으로 명분을 내세워 이를 정당화시켰고, 오히려 상대국의 행위에 대하여 그릇된 처사로 이해하도록 교묘하게 묘사한 사실이 드러났다.<sup>10)</sup>

당시 일본의 검정 도서에 표현된 한국관 왜곡 사태와 관련하여, 우리 쪽에서도 강도 높은 대응을 계속한 바 있다. 1982년 8월 3일, 한국 정부는 ‘비망록(備忘錄)’을 일본 정부에 전달함으로써 한국관 왜곡에 따른 수정과 재발 방지를 요구했던 것이다.

## 나. 끝나지 않은 과제

교과서 왜곡 파동은 1982년 11월 24일, 일본의 오가와(小川平二) 문부상이 교과서 시정 관련 담화(금후 조치)를 발표함으로써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1986년에 와서도 또 한 차례의 거센 파문이 일었다. 이 해에는 특히 후지오(藤尾正行) 문부상의 망언으로 인하여 한국인의 분노를 극도로 자극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는 한국의 국권 피탈과 관련하여, “한·일 합방은 이토(伊藤)와 고종(高宗) 간의 담판 합의에 근거한다.”라고 전제한 다음, “이토의 교섭 상대가 고종이므로 한국에도 책임이 있다.”라고 망발하는 등 매우 유감스러운 물의를 빚었다.

이와 같은 일련의 불행한 사태는 1980년대 후반까지 계속되었다. 한·일 양국 간에 첨예한 ‘교과서 분쟁’이 연속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로 하여, 우리 사회에는 ‘한국사의 재조명, 재탐구’ 분위기로 변저, 국사관(國史觀)의 정당한 확립을 위해 학계와 일반의 지혜를 모으게 되었다. 마침내 1987년 8월 15일 독립 기념관 건립으로 이어지는 등 전 국민의 단결된 힘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한·일 양국 간의 교과서 파문은 정작 종지부를 찍었는가? 이 물음에 대하여 누가 “그렇다.”라고 답변할 것인가?

#### 4. 맺음말

지금까지 제 4 차 교육과정기에 보인 교과서의 위상과 관련하여 몇 가지 특징적인 사례들을 살폈다. 그 결과, 대내적으로는 교과서에 관한 생각(교과서관)이 모색되었고, 통합 모형의 개발, 외적 체제의 개선, 전자 관련 도서들의 완간 등 발전적인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일본의 검정 교과서에 반영된 한국관 왜곡 파동을 경험했다. 이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그리고 당시의 교과서에 구현된 편찬 이데올로기를 보면 과장된 내셔널리즘이 도도하게 흐르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 또한 교과서는 시대의 거울이라는 명제를 생각하게 하는 부분일 것이다. 23

<1969~1971년, 1978~1994년 대한교과서(주) 기획출판부장, 교과서 연구소 간사>

- 1) 문교부, 「초·중·고등 학교 교육과정 (1946~1987) : 총론」(서울 : 문교부, 1986), pp. 169~170.
- 2) 함종규, 「교육과정과 교과서」, 「교과서 회지」 제 1 집 (서울 : 한국검인정교과서발행인협회, 1963.5.), p. 22.
- 3) 교육과정담당관실, 「좋은 교과서란 어떠한 교과서인가?」(서울 : 문교부 교육과정담당관실, 1987), p. 4.
- 4) 교육과정담당관실, 위의 자료, p. 22.
- 5) 위의 자료, p. 23.
- 6) 이종국, 「한국의 교과서 출판 변천 연구」(서울 : 일진사, 2001), p. 339.
- 7) 문교부, 「80년대의 한국 교육 개혁」(서울 : 문교부, 1983), p. 70.
- 8) 이종국, 「한국의 교과서」(서울 :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1), p. 197.
- 9) 정재정, 「일본의 논리 전환기의 역사 교육과 한국 인식」(서울 : 현음사, 1998), pp. 156~161 참조
- 10) 한국교육개발원, 「외국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한국관 일본·미국·영국·프랑스」(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1985), p. 41.

“

제 4 차 교육과정기에 보인 교과서의 위상과 관련하여 몇 가지 특징적인 사례들을 살폈다. 그 결과, 대내적으로는 교과서에 관한 생각(교과서관)이 모색되었고, 통합 모형의 개발, 외적 체제의 개선, 전자 관련 도서들의 완간 등 발전적인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일본의 검정 교과서에 반영된 한국관 왜곡 파동을 경험했다.

”

『기술·가정』 통합 교과목과 관련된 이야기

■ 김 / 고석달(서울 이숙중학교 교장)



## 1. 기술·가정과 의 탄생

**문** 교부 편수국 과학 교육 담당관실로 발령을 받은 것이 1979년 4월 1일부터가 교육과정 시기로 보면, 제 3 차 교육과정기이고, 제 4 차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기초 연구가 한창 진행 중인 때였다. 그리고 문교부 직제상으로는 장학실과 편수국이 있어 교육의 꽃이요, 교육의 태양이라는 별칭까지 나오던 때였고, 교육 전문직 수도 문교부 전 직원의 약 30%에 육박했었다. 또, 교육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양 실국의 상호 보완 체제가 잘 이루어져서 전문직들의 자부심도 대단했던 것으로 생각한다.

나는 1980년 전임 이상혁 편수관으로부터 업무를 인계받아 제 4 차 교육과정 기초 연구 단계에서부터 기술과 업무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그 당시 연구 개발은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해서 진행하였으며, 이 때에도 기술과와 가정과의 통합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으나, 워낙 양 과목의 학문적 체계, 교과역사, 상호 이해 관계가 서로 얽혀 통합의 결실은 맺지 못하고 연구 단계에서 그치고 말았다.

그 후 1986년 제 5 차 교육과정 개정 기초 연구 단계에서는 그 동안 변천된 시대적 요구 상황, 남녀 성 역할의 변화 등을 내세워 제 4 차 교육과정에서 실현되지 못했던 기술과(과목명은 생활 기술)와 가정과의 통합 논의가 다시 불붙게 되었다. 이는 남학생은 가정 과목을 배울 수 없고, 여학생은 기술 과목을 배울 수 없다는 현실적 요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기술과와 가정과를 남녀 구별 없이 선택할 수 있게 하고, 두 과목을 통합하여 기술·가정과를 남녀 공통으로 이수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었다. 이는 여자의 사회 활동이 활발해지고 남녀 평등의 이상 실현을 위해서 성차 없이 능력과 소망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사회 생활을 통하여 자신을 실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여성에게도 남성과 같이 직업 생활과 사회 생활을 위한 준비 교육과 기술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가족의 형태도 부부가 함께 집안일, 육아일 등을 공동

으로 하는 것이 요구됨으로써 가정과 교육이 남성에게도 제공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따라서, 긴 세월의 어려웠던 통합 논의는 종식되고 제 5차 교육과정에서 처음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기술·가정과가 탄생하게 되었다.

## 2. 내용꾸미기의 어려움

기술·가정과의 통합이 이루어졌으나 뚜렷한 안을 가진 게 아니었으므로, 우선해서 할 일은 두 과목의 내용을 상호 관련성을 찾아 정선, 축소하고 교과서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런데 교과서 개발 기관을 정하기가 어려웠다. 이것은 가정과가 있는 대학이나 기술과가 있는 대학에 위탁하자니 한쪽 편에 치우친다는 객관적인 타당성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으며, 궁리 끝에 중간적 입장에 있는 한국교육개발원을 개발 위탁 기관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교과서 개발의 기획 심의 단계에서 교과서 단원 수는 기술과 가정을 똑같이 분배하였으며, 단원 수에 맞춰 연구진과 집필진 수를 배정하였다. 그 후 진행된 각종 심의회에서도 남녀 똑같은 심의 위원 수 배정으로, 어느 한쪽에 유리하게 하는가, 불리하게 하는가 하는 쌍방간의 견제 의식이 공존하게 되었고, 누가 그 심의회에 참석하고 무슨 발언을 했으며, 대응 논리는 무엇인가 등 한치의 양보도 없이 늘 긴장감 속에 진행되어 마치 남·북한 정치 회담만큼이나 어려운 고비가 여러 차례 있었다.

그리고 연구·집필진이 모여 내용을 구성하는 면에서도 기술과에서는 양 과목의 상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기술과 산업’, ‘제도의 기초’, ‘컴퓨터의 이용’ 등을 뽑았으며, 내용 서술에서도 기존의 기술과 내용보다는 여학생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하도록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요소로 꾸미게 되었다. 즉, 인간이 옛날부터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져 왔던 가정 생활 속에서 쓰여지는 돌과 목재를 이용한 기구, 청동을 이용한 기구, 철을 이용한 기계 기구로 물레, 재봉틀, 자전거, 자동차와 자동화 기기로 발달되는 역사적인 것들을 인식시키도록 하였다.

또한, 원시인들이 자연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생활해 왔으며, 옛날 건설 기술과 국토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균형 있게 개발하였는가에 대해서도 소개하였다. 통신 기

“

교과서 개발의 기획 심의 단계에서 교과서 단원 수는 기술과 가정을 똑같이 분배하였으며, 단원 수에 맞춰 연구진과 집필진 수를 배정하였다. 그 후 진행된 각종 심의회에서도 남녀 똑같은 심의 위원 수 배정으로, 어느 한쪽에 유리하게 하는가, 불리하게 하는가 하는 쌍방간의 견제 의식이 공존하게 되었고,

”



술의 발달에서는 문자와 인쇄술, 전신 전화, 방송과 위성 통신의 개발 등을 다루었다. 그리고 사람이 물건을 나르는 옛날의 수송 기술이나 증기 기관을 이용한 수송 기술을 육상 수송 뿐만 아니라 해상 수송 수단으로도 이용됨을 소개하였다.

이러한 대단원의 내용을 정하고도 소단원 내용이나 사진의 보기를 예로 넣을 때에는 가정과는 우리 생활 속에 접근된 가정 생활에서 사용되는 기기를, 기술과는 산업 사회에서 사용되는 기계 기구를 예로 하자는 안이 대두되어 심의회 때마다 양쪽의 의견을 조율하기에 여러 모로 어려웠던 기억이 난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기술과는 6개, 가정과도 6개의 대단원을 조직하였는데, 교과서 내용을 구성하면서 그 수준이나 범위를 결정하기가 가장 어려웠던 단원은 컴퓨터 단원으로 기억된다.

‘컴퓨터 이용’ 단원은 현대 기술 문명의 총아로서 컴퓨터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초 능력을 길러 주기 위하여 도입돼야 한다는 게 단원 설정의 배경이며, 그 주요도로 보면 과목의 단원으로서가 아니라 한 과목으로 독립시켜야 한다는 안과 이번 개정에서는 기술과 영역에 수록하여 소개하자는 안, 상업과에서 다루자는 안 등이 있었는데, 논란 끝에 기술과 영역을 확충시킨다는 데 의견이 일치되었다.

따라서, 그 내용을 구성하는 데 있어 컴퓨터의 발달 과정과 이용 분야를 알게 하여 컴퓨터의 역할과 중요성을 이해시키고, 컴퓨터를 구성하고 있는 중앙 제어 장치, 주기억 장치, 연산 장치, 입출력 장치, 보조 기억 장치 등의 기능을 알게 하여 컴퓨터 활용 지식을 가지고, 컴퓨터 프로그램에 필요한 각종 언어를 이해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 컴퓨터 사용 방법에서는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한 키보드의 구성, 시스템 명령어, 순서도 및 프로그램 작성 방법 등에 관한 지식을 알게 하여 실제로 컴퓨터를 다룰 수 있고 간단한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한다는 내용으로 구성하게 되었다.

### 3. 삽화 표절 시비

이렇듯 어려운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기술·가정 교과서(실험본)는 한국교육개발원을 통해 일선 연구 실험 학교에 투입하여 그 내용, 표현, 단원 구성, 편집 체제 등을 현장 교사와 학생들로 하여금 실험 검증하게 하였다. 그런데 이 시기에 문제가 생겼다. 즉, ‘기술·가정 2’ 교과서 중 ‘재료의 이용’ 단원에 수록한 ‘목재의 이용’에서 목재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목재의 구조와 성질, 종류와 용도에 대한 내용 소개와 함께 목재 구조, 응이, 목재 수축 변형 등의 삽화가 소개되었는데, 그 삽화가 일본 교과서에 실린 것을 표절하였다는 기사가 일간 신문에 게재되었던 것이다.

그 당시 교과서 내용 삽화 등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오류만을 찾아 내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때문에 모든 편수관들은 행여나 자기가 맡은 교과서에 잘못이 있는 게 아닌가 하고 늘 긴장을 하고 있었으며, 행여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이들을 논리적으로, 인간적으로 해결하느냐 하는 것도 담당 편수관이 처리해야 할 몫이었다. 문제가 된 이 단원의 집필자는 고인이

되신 충남대학 기술과 김진순 교수가 맡았는데 이에 대해 나와 집필진은 심사숙고 끝에 만들어 낸 답변 자료는 이러하였다.

“목재의 구조나 수축 변형 등 자연 상태의 각종 재료나 기술적인 원리는 국가마다 다를 수 없으며, 기본적인 구조는 세계 공통으로 같을 수 있는 것이 자연 과학이 갖는 특성이기 때문에, 내용 표현에서 유사할 수 있다.”라는 논리로 답변 자료를 써서 보냈더니,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이 내용에 대해 상당 부문 이해하면서도 자료의 궁핍성을 지적하였다. 물론, 이 같은 민원 제기가 있기 전에도 그랬지만 그 후에도 삽화 제작시에는 이 같은 경험으로 해서 더욱 신중을 기하는 자세로 임했다.

#### 4. 앞으로 기술·가정과의 전망

기술·가정과의 통합 신설을 촉진시킨 데에는 중학교 교육의 의무화가 점차 확대되고, 남녀 공학, 특히 혼성 학급을 편성한 학교에서 교육과정 운영상 겪고 있는 문제점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요구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기술·가정 통합 과목이 탄생되었으나, 새로운 과목이라는 점에서 교사들의 경험 부족과 시설 설비 등의 준비가 미흡하여 다소간의 시행 착오가 불가피하였다.

그 후 기술·가정 통합 교과로서의 문제점은 제 7 차 교육과정에서도 그 동안 논의돼 왔던 필요에 따라 기술·가정이 통합되어 필수로 적용하고는 있으나, 그간의 시행착오 및 문제점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하였기 때문에, 오늘날 일선 학교에서는 한 사람의 교사가 기술·가정 부문을 다 가르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기술·가정과 교사가 기술 부문과 가정 부문으로 나누어 가르치는 곳도 있어 교육과정 운영면에서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현장 학교의 현실을 감안하여 통합 교과로서의 성격을 분명하게 설정하고, 교과 내용면에서도 남녀 공통 내용이나 단원 요소의 계열성, 범위, 실험 실습 과제의 재구성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연구·검토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23

<1979~1994년 공업과 편수관>

“

‘목재의 구조나 수축 변형 등 자연 상태의 각종 재료나 기술적인 원리는 국가마다 다를 수 없으며, 기본적인 구조는 세계 공통으로 같을 수 있는 것이 자연 과학이 갖는 특성이기 때문에, 내용 표현에서 유사할 수 있다.’는 논리로 답변 자료를 써서 보냈더니,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이 내용에 대해 상당 부문 이해하면서도 자료의 궁핍성을 지적하였다.

”

# 편수관 천명론(天命論)

■ 글 / 박삼서 (교육인적자원부 장학관)



## 1. 설레는 마음으로

1994년 12월 13일 초저녁이었다. 책상에 앉아 ‘한국 문학

과 도교 사상’ 시리즈 논문을 살피고 있는데 전화벨이 컷가를 울렸다. 수화기를 들자 ‘축하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15일부터 교육부로 출근하라는 전달 내용이었다.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교육부에 근무한다는 두려움에 어깨가 무거워지는 듯했다. 교육부에는 선택된 사람, 높은 사람이 근무하는 곳, 보통 사람은 가 보기조차 엄두도 못 내는 곳으로 생각했는데, 막상 편수관(당시의 공식 명칭)이 되어 교육부에 근무하게 되었다는 데에서 오는 야릇한 감정이 온몸을 엄습했다.

문민 정부가 들어서면서 교육 분야에서도 개혁의 소용돌이는 예외가 아니었다. 교육부 조직도 변화가 심하였다. 편수 행정 부분도 장학편수실에서 편수국으로 기구가 독립되면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였고, 국어과와 지리과에 인원 충원을 특채로 하였다. 시·도 교육청과 대학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지리과는 5명, 국어과는 6명이 경쟁을 하였다. 응

모 자격을 학위 소지자로 제한하고, 대학에서도 추천을 하도록 한 것은 처음 시도였다. 학위 논문 심사, 논술 시험, 면접 등 몇 단계의 관문을 통과해야 했다.

당시에는 교과 교육 논문이 그리 많지 않았다. 구전십기(九轉十起)의 우직함으로 얻은 학문적 소득이지만, 문학 사상의 교육학적 접근을 만족스럽게 이루어 내지는 못했다. 그러나 사상소(思想素), 교육소(教育素)의 개념을 도입한 것은 새로운 시도였다고 본다. 논문에 대한 심사는 상대적 평가에 기댈 수밖에 없었다.

논술 시험의 논제를 받았을 때에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학창 시절과 대학원 과정에서 배우지 못했으며, 현장에서도 전혀 생각해 보지 못한 ‘교과서 기능’에 대하여 글을 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생각나는 대로 적절한 논거를 들고, 글의 짜임에 논리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였다. 그러나 워낙 시간이 부족하여 마지막으로 읽고 세밀하게 검토해 보지는 못했다.

면접은 네 분의 면접관 앞에서 물어 보는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이었다.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하려고 결심은 하였으나, 스스로 느끼는

중압감 때문에 일부 답변은 동문서답이 되지 않았나 한다. “왜 편수관이 되려고 하느냐?”라는 물음에는 “참다운 교육자가 되고자.,” “공부한 것을 살리려고.”라는 좀 어색한 답변을 했다.

어쨌든, 편수관이 되는 운명은 막을 수 없었던 모양이다. 설레면서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교육부에 출근하게 된 것이다.

## 2. 초심자로서의 각오

이러한 일련의 선발 과정은 편수관이 되도록 하는 통과리레일 수도 있다. 이들 과정을 겪으면서 편수에 대한 마음가짐을 굳게 하고, 새로운 세계에 대한 안목을 가지게 된다. 12월 15일 청사 현관에 출근 첫발을 들여놓으면서 역사에 남는 ‘좋은 편수관’이 되리라 결심했다.

차관실에서 지리과 N 연구사와 함께 발령장을 받았다. 높은 분 앞이라는 생각에 눈동자 돌리기도 힘들었다. 전국에서 뽑힌 사람으로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근무하라는 L 차관님의 당부 말씀이 지금도 귓가에 맴돈다. 실과 국, 과를 돌면서 신입 인사를 했다. 처음 만나는 분들이라 자연스럽지는 못하였지만, 우리 교육계를 이끌어 온 유능한 분이라는 생각에 나 자신도 무언가를 남기고 믿음을 주는 사람이 되리라 마음을 굳게 다졌다. 중무식 다과회에서 K 장관을 처음 근접하여 만났을 때에는 그 동안 가졌던 관료에 대한 선입관을 불식시킬 수 있었다. 그 이후 높은 분을 만난다는 두려움도 없어졌다.

Y 인문 과학 편수 담당관님은 편수관은 복사부터 잘 해야 된다면 이 일부터 가르쳐 주셨다. 공문서 형식, 문구 하나하나를 바로 잡아 주시고, 공문 내용 파장에 대한 책임감

도 강조하셨다. 사안 처리의 경중과 선후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방법을 알려 주시고, 정책에 대한 사적인 감정과 소신은 떨어뜨려 버려야 한다고 하셨다. 공인으로서의 살아가는 방법은 이 때 배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어과 전임 B, H 두 분 선배님은 편수 업무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하셨다. 교과용 도서 심의회마다 동행하여 편수관으로서의 임무를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고, 당시 교과서에 대한 일천한 지식을 새롭게 일깨워 주셨다. 어떤 때에는 친형님처럼 의미 있는 말로써 교육부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의 태도와 마음가짐을 가다듬도록 하셨다.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대과 없이 편수관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안내와 가르침의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고맙기 그지없을 뿐이다.

편수관이 되었다는 기쁨을 만끽할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1995학년도 1 학기에 적용되는 1, 2 학년 교과서와 3, 4 학년 실험용 교과서 집중 작업이 막 시작되어 함께 밤을 지새며 연말 연시를 보내야 했다. 그야말로 눈빛으로 종이를 뚫을 정도로 윤독(輪讀)하면서 교과서가 갖추어야 할 조건을 세밀하게 검토하였다. 새벽이 되어 글자가 보이지 않아 몽롱한 상태에서 헛소리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기만 하다.

이렇게 좀 힘든 작업을 하면서 ‘편수관의 자질’이 나에게 있는가 하고 자문해 보기도 했다. 처음에는 ‘알맞은’, ‘알맞는’의 구별도 하지 못하고, 교육과정과 교과서와의 관계도 자세히 몰랐다. 더구나 교과서를 교수·학습 활동으로 구조화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더욱 문외한이었다. 며칠 동안 작업을 같이 하면서 빠른 속도로 교과서 대한 지식이 축적되었다. 무식하다는 말을 듣지 않으려고 검토 관점을

나름대로 메모하고, 남모르게 관련 서적을 읽기도 했다.

그 동안 노도(怒濤)처럼 몰아쳐 오는 일과 고달픔에 눈물을 흘린 적도 많았다. 새벽에 집으로 돌아가 옷만 갈아입고 출근한 날도 하루 이틀이 아니다. 시급하게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문제로 청사에서 밤을 지낸 적도 있다.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할 때, 피로가 겹쳐서 졸다가 경복궁역을 지나쳐 독립문역, 연신내역까지 갔다가 돌아오기도 했다. 하루는 실수하지 않으려고 너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다가 방송 안내가 있어 하차해 보니 안국역인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연구사에서 연구관, 장학관으로 승진하면서 기쁨도 맛보고 책임감도 통감했다. 그 고달픔 속에서도 선배님들의 격려 말씀은 오늘을 사는 좌우명이 되기도 한다.

### 3. ‘좋은 편수관’이 되려고

그 동안 ‘좋은 편수관’이 되려고 노력했다. 모자라는 능력을 보충하려고 책도 많이 읽고, 글도 꽤나 썼다. 그리하여 좋은 편수관의 조건을 나름대로 생각해 보고, 또 그렇게 되려고 다짐했다.

좋은 편수관은 교육 철학이 뚜렷해야 한다. 너무 승하지도 둔하지도 않는 재주가 있어야 한다. 확고한 신념과 우직함도 요구된다. 남이 보지 않을 때에도 한결같은 마음의 소유자야 한다. 예리한 판단력과 실천력도 가져야 한다. 자기와 다른 의견을 포용할 줄도 알아야 하며,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라도 주장하는 기개도 있어야 한다.

좋은 편수관은 역사 의식과 국가관도 뚜렷해야 한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보이는 곳만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곳을 볼 줄 알아야

한다. 나보다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여유도 있어야 하고, 자신의 존재를 강하게 의식해야 하는 순간을 잘 포착해야 한다. 바위처럼 함묵할 줄도 알아야 하지만 정의를 위해선 사자후(獅子吼)를 보여야 한다. 상상력을 많이 발휘해야 하지만 공상에 흐르지 않도록 자제해야 한다.

좋은 편수관은 남다른 열정을 보여야 한다. 사명감에 식음을 잊을 때도 있어야 하고, 출퇴근 시간에도 머릿속에는 교과서에 대한 토론이 계속되어야 한다. 교과서 관련 토론에 새벽이 오는 줄도 모르고 자기 주장에 몰입하는 바보가 되어야 한다. 애정과 욕심을 어느 정도는 편수의 열정에 녹여야 한다.

좋은 편수관은 직관력이 있어야 한다.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줄 알아야 한다. 사물을 조감(鳥瞰)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야 한다. 대상에 편견을 갖거나 한쪽으로 생각이 치우치지 않는 균형 감각을 언제나 유지해야 한다. 멀리서도 가까이 볼 수 있거나, 가까이에서도 멀리 볼 수 있는 혜안(慧眼)의 소유자여야 한다.

좋은 편수관은 문장을 이해하고 구사하는 능력이 보통은 넘어야 한다.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고 표현하고, 고운 것은 곱다고 묘사할 줄 아는 문장력을 가져야 한다. 억지가 아닌 합리적인 논리를 확보하고 글로써 이를 주장할 줄 알아야 한다. 사고와 창의가 조화를 이루는 글 솜씨를 가져야 한다. 남의 문장에 자신이 매료되기도 하지만, 독자가 자신의 문장에 매료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좋은 편수관은 인간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해야 한다. 상대의 장점을 칭찬하면서 인간에 대한 상호 이해가 남달라야 한다. 기쁠 때 같이 웃고 슬플 때 같이 울면서 자신의 존재를

관계 속에서 찾아보고 만남 속에서 해석해 보아야 한다. 편수관은 움직이는 교육부 장관으로 자처하면서 현장 교사, 대학 교수, 전문 연구원 등과 힘을 합쳐서 공동의 교육적 실체를 창의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은 그 동안의 편수관 생활에서 얻은 안목(眼目)이다. ‘좋은 편수관’은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편수관으로서의 자질을 갖는다. 선천적으로 타고 나는 것이 아니고 배우면서 좋은 편수관이 된다. 밥도 뜬이 들어야 맛이 제대로 나듯이 편수관도 뜬이 드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동안 앞에 예거한 좋은 편수관의 자질에 나 자신이 얼마나 ‘인격과 능력’에서 근접하게 되었는지 걱정스러울 뿐이다.

#### 4. 운명적 소임을 마음에 담고

국가 교육의 근간은 교육과정과 이를 바탕으로 만든 교과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개정, 개발하는 담당자는 편수관이다. 그러므로 편수관의 자질과 능력이 국가 교육의 성패를 좌우함은 물론이다. 좋은 편수관이 많으면 국가는 저절로 발전할 수 있다.

편수관은 하늘이 만들어 주는가? 본인이 되고 싶다고 해서, 아니면 남이 시켜 준다고 해서 편수관이 되는 것은 아니다. 편수관은 하늘이 만들어 준다고 말하고 싶다. 이는 편수관의 자존심, 자긍심과도 관계가 된다. 어떤 정기를 타고 났기 때문에 편수관이 된 것이다. 선배 편수관을 만나 보면 이러한 인상이 더욱 짙다.

관상을 보고 성명을 풀이해 주면서 “당신은 학교를 떠나야 큰일을 할 수 있다.”라며 도장을 새겨 준 사람을 우연히 만난 일, 용비어천

가 91장 ‘눈물’과 관련한 시험 문제로 대학교 총장의 추천을 받아야 했고, 교육부에서 편수관 합격을 알려 주기 며칠 전 위대한 세 명의 성인을 만나는 꿈을 꾸고, 꿈에서 깨어나 한참 동안 그 황홀함과 외경(畏敬)에 도취되었던 일, 이 모두를 운명으로 돌리고 싶다. 그렇다고 전적으로 운명론자가 되고 싶지는 않다. 그 동안 남이 모르는 눈물 나는 노력도 있었기 때문이다.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이 없는 편수관이 되는 것, 이것이 운명적, 아니 천명적 소임을 다하는 길이라고 다짐해 본다. ‘편수관 천명론’을 주장하고 싶다. 국어 교육 강화 방안(1997), 중학교 국어 교과서 경향성 내용 시비(1997년), 중학교 국어 제재 교체 사건(1998년), 중학교 국어 교과서 공모제(1999년),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 조정(2000년), 소위 대안 교과서 문제(2002년), 중학교 국어 교과서 오류 파동(2002년) 등 굵직한 사건이 머리에 스친다. 앞으로 이들 사건에 대하여 하나하나 뒤안길에서 의미를 부여해 보고자 한다.

편수에 미쳐 버리면 편수밖에 모르게 된다. 편수는 몇 년을 계속해서 경험해 보아야 그 진수(眞髓)를 알 수 있다. ‘좋은 편수관-좋은 교육과정과 교과서-좋은 교육-좋은 나라’라는 긴밀성은 사명감을 가진 좋은 편수관이 되도록 강요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좋은 편수관은 원만한 인간 관계에서 성숙한다. 이러한 모든 명제의 참뜻과 사리(事理)를 이제야 겨우 깨달았다.

좋은 편수관은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는 영원한 ‘진리의 창조자’이다. ‘편수관’이란 용어가 다시 살아났으면 하는 소망이다. 가르쳐 주시고 아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24



# ‘교과서 출판 교실’ 연수를 마치면서

■ 글 / 정광숙(장원교육 팀장)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다. 그래도 삭막한 도시에서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것은 그나마 가로수이리라. 샛노란 은행잎이 가을 비바람에 노란 나비 떼처럼 보도 위에 사뿐히 내려앉는다. 계절이 가고 오는 건 자연의 법칙인데 유독 가을만은, 맞이하는 것도 보내는 것도 애상적(哀傷的)이 되니 아마도 가을이 지닌 특성 때문이 아닐까.

## 1. 교과서 연수 이야기

교과서 출판 교실 연수를 다녀온 지도 여러 날이 지났다. 길지도 않은 3일간의 일정이었으나 익숙지 않은 객지 생활에 게다가 빈틈없는 일정으로 강행하는 연수가 만만치는 않았다. 출판 교실 강의실 안에는 우리나라 초·중등 국정, 검·인정 교과서들이 질서정연하게 전시되어 있었다. 그 중 폐사(弊社)의 제7차 고등 영어 교과서와 지도서가 다른 출판사의 그것들과 어깨를 나란히 자리 잡고 있었다. 마치 타처에서 고향 사람을 만난 듯 무척이나 반가웠다.

이번 출판 교실 연수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었기에 열심히 귀담아 들었다. 제7차 교육과정 이해에서부터 교과서론, 교과서 관련 법규, 교과서 출판 기획 및 편집론, 교과서 문장론, 교과서 편집 디자인론에 이르기까지 전문가들의 성의 있는 강의는 어느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알찬 내용들이었다. 우리 나라 교과서 편찬의 발전을 위해 이런 값진 연수를 받을 기회를 마련해 준 한국교과서연구재단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좋은 연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먼저, 이번 ‘교과서 출판 교실’을 운영하게 된 배경을 생각해 본다. 이에 대해서는 주최 측인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의 운영 목적을 보면, ‘교과서 발행사에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교과서 출판에 관한 지식과 기법 등을 습득하게 하여, 우리 나라 교과서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 점에 있어 연수에 참가한 사람으로서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

이번에 참가한 연수생들은 연수에 관한 사전 지식이 별로 없었으며, 다만 아는 것은 연

이번 3일간의 연수가 교과서를 편찬하는 데 필요한 기초 지식과 함께 교과서 제작  
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였다는 점에서 그 뜻이 있다고 본다.

수 과목과 배당 시간뿐이었다. 한편, 이들 연수 과목을 학습하는 데 있어 그 범위와 수준이 어떠할까, 우리들 수준에 맞을 것인지, 또 연수(研修)는 연구하고 닦는 일을 뜻하는데, 연수생 스스로가 무엇을 연구하고 노력할 것인가도 궁금한 일이었다. 그리고 연수는 무엇을 배워서 더 높은 지식과 기술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자기 주도적인 학습 태도가 필요할 텐데 하는 등 연수 태도와 함께 여러 가지로 궁금하고 기대되는 것들이 있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강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매우 적절하였다.’는 판단과 우리 연수생들은 교수·학습에 있어 토론에 참여하거나 주제 발표 후 협의 등의 세미나식의 학습이 아니고 대체로 기존의 강의법이었기 때문에, 강의를 경청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 다만, ‘교과서 편집 디자인론’의 강의는 조형성 등 미적 표현 형식 때문에, 프리젠테이션을 사용함으로써 다른 연수 과목 강의와는 차별화되었다.

그리고 이번 ‘교과서 출판 교실’의 여러 연수 과목은 교과서를 편찬하는데 중요한 지식과 기법 등을 제공하지만, 그 중에서도 ‘교과서 출판 기획 및 편집론’은 교과서 출판사에 속해 있는 편집자라면 기획·편집의 중요성과 기획력이나 편찬 기법 때문에, 큰 기대를 가지고 수강하였으며, 강사의 말 한 마디 한 마디에 신경을 쓴 것은 사실이다. 또, 교과서 출판은 일반 단행본과는 다르며 기획에 있어서도 이론적인 것, 실무적인 것, 교육 당국의

교육적인 것 및 집필상의 유의점과 출판사의 제 사정과도 관련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일은 단순한 기획이 아니라 좋은 교과서를 만들어 검정 합격 후 발행, 공급까지 해야 하는 장기 과정을 연계시켜야 하는 등 고도의 두뇌와 전사적(全社的) 전략이 필요한 내용이라는 점에 있다.

물론, 이 연수 과목 외에도 ‘교육과정론’이나 ‘교과서론’ 등은 교과서를 꾸미는 데 있어 그의 배경이 되고 그 정신이 교과서에 융해되어 나타나야 하며, 직접적이거나 구체적인 표현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교과서 편찬에 준거가 된다는 점에서 이들 연수 과목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지할 수 있었다.

한편, ‘교육과정론’과 ‘교과서론’ 및 ‘교과서관련 법규’ 등은 상호간의 연계적인 내용 때문에 다소간 중복되는 느낌이 있었으나, 도리어 중복으로 인한 강의가 연수생에게는 교과서를 편찬하는 데 그의 준거 개념과 관련성 등을 뚜렷하게 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교과서 출판 교실’에 참가한 연수생은 교과서를 만드는 데 참여한 경험이 적은 사람들이 많았으며 이들은 대체로 연수 내용이 교과서와 관련된 실무적인 것, 직무에 적용될 수 있는 것 등을 기대한 듯하였다.

끝으로, 이번 3일간의 연수가 교과서를 편찬하는 데 필요한 기초 지식과 함께 교과서 제작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였다는 점에서 그 뜻이 있다고 본다. 그리고 앞에서 제시한 바처럼, 앞으로도 좋은 연수의 기회가 주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학교 교육은 또 어떠했던가. 교과서 파고들기만 해 왔다.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에 따라 만들어진 교과서의 내용을 그대로 가르치기만 하면 되었다.  
시험을 위해 지식만을 주입해 온 학교와 학부모가 아이들의 생각을  
제대로 자라게 하지 못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슬픈 교육 방식을  
못 버리고 있는 것 같아 더 안타까울 뿐이다.

## 2. 교육 현실을 돌아보며

며칠 전 2004 학년도 대학수학능력고사를 치렀다. 대학수학능력고사를 치르던 날 그리고 그 이튿날, 수능 점수가 낮은 것을 비판하여 여학생 두 명이 투신 자살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보도되었다. ‘대학수학능력고사’란 말 그대로 대학에서 수학(修學)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인데 그 평가 때문에 꽃다운 나이의 아이들이 극단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고, 그 평가 점수로 67만 명의 가치를 서열 매기는 무섭고도 비인간적인 시험 제도를 언제까지 지켜보아야 할지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없다. 짧게는 3년, 길게는 12년 동안 교육을 받는 목적이 일류 대학을 가기 위한 것이고, 일류 대학의 졸업장을 출세를 보장받는 증서로 생각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

흔히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건 교육밖에 없다고 한다. 옛날과 다르게 요즘은 교육의 대부분이 제도 교육인 학교에서 이루어진다. 할머니, 어머니의 생활 속에서 배우고 깨우치게 되던 지혜도, 밥상머리에서 일깨워 주시던 할아버지의 가르침도 이제는 모두 학교의 몫이 되었다.

학교 교육은 또 어떠했던가. 교과서 파고들기만 해 왔다.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에 따라

만들어진 교과서의 내용을 그대로 가르치기만 하면 되었다. 시험을 위해 지식만을 주입해 온 학교와 학부모가 아이들의 생각을 제대로 자라게 하지 못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슬픈 교육 방식을 못 버리고 있는 것 같아 더 안타까울 뿐이다.

교육이 정상화하려면 학벌 위주의 사회적 인식이 우선 사라져야 함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으라마는 교육 개혁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참여 정부도 교육부도 아직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더 늦기 전에 청소년의 정신 건강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때이다. 더 이상 무너져 가는 아이들의 삶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학생의 적성과 능력, 진로에 적합한 학습자 중심 교육의 실천, 세계화·정보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 능력을 신장하여 21 세기의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을 육성하겠다는 제7차 교육과정의 목표는 입시 위주의 주입식 교육 현실을 안타까워하던 사람들에게 큰 기대를 갖게 했다.

하지만 시행한 지 3년이 지난 현재 어떠한가?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해 볼 일이다. 학생들의 학습량은 여전하고, 제도 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시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도 남긴다. 공교육의 붕괴와

사교육비 부담에 대한 탄식도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얽힌 실타래를 푸는 방법이 ‘실마리’를 찾는 것뿐이듯, 우리 교육 현실도 이 혼란함 속에서 우리 나름의 현명한 해결책을 찾아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경험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얽힌 실타래의 끝을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하지만 또 하나 분명한 것은 반드시 그 끝을 찾아야 실타래를 풀 수 있다는 것도…….

두 가지 궁여지책(窮餘之策)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첫째는, 교과서를 활용하는 교사의 융통성—활용 능력이랄까—에 기대를 걸어 보고 싶다. 교과서는 최소한의 진리를 담은 그릇이라 생각했으면 좋겠다. 교과서는 ‘학교에서 교육을 위해 사용하는 학생용의 주된 교재’라고 정의한다. 교과서는 학습 내용을 제시하고 이를 학생이 탐구해 나가도록 하며, 학생 자료를 학생의 학습 동기를 유발시키는 기능, 학습 과제를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저자나 편집자가 제안한 최소한의 텍스트에 살을 덧붙여 활용하고 적용하는 것은 교사의 몫이라고 본다. 그 작품이 다루어지는 현장에 적절하게, 학습자의 수준에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교과서를 만드는 사람들은 학생들이 그들이 거쳐야 할 교육과정 가운데에서 익히고 생각해야 할 내용을 엄선하여 실어야 함은 기본이다. 더 욕심을 내어 본다면, 학습자가 혼자서도 주도적으로 학습이 가능한, 쉽고 재미있고 친절한 교과서를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

둘째는, 문학 교육의 강화이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문학 교육을 다음과 같이 규정짓고 있다. “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문학 작품을 수용하면서 인간의 다양한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심미적인 정서를 기른다. 이를 통해 국어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존중하며 사랑하는 태도를 길러 성숙한 문화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도록 한다.”

학생들이 문학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세계를 이해하며, 문학의 가치를 자신의 삶으로 통합하려는 태도를 길러 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물론 현 임시 교육 안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말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시를 난도질하기보다는 시 한 편을 온전히 가슴을 열고 느끼며 자신의 삶 속에 용해시켜 낼 수 있다면 아이들의 삶에 윤기가 흐르고 그들 스스로 가치 있는 삶을 가꾸어 나갈 것이다.

얽힌 실타래를 뒤적이며 한참 이리저리 씨름하다 찾은 실마리는 다시 술술 실타래를 풀어 내는 법이다. 그리고 가끔은 그 끝을 찾지 못하거나 완전히 매듭이 지어져 더 이상 풀어 낼 수 없을 때에는, 어느 한 곳을 가위로 싹둑 잘라서 끝을 만들어 보자. 여기저기 매듭으로 이어진 실은 우리의 정성으로 파스한 장갑이 되어 다시 태어난다는 사실을……. 25

# 국정 교과서 심의 수당에 관한 이야기

■ 글 / 송달용(교육인적자원부 교육연구사)



지 금으로부터 약 8년 전인 1995년 5월경으로 기억한다. 당시 농업계 고등 학교 근무 경력 6년차의 젊은 교사 시절이다. 선배 교사들의 도움으로 이제 겨우 학교라는 곳의 분위기라든가, 농업계 고등 학교 교사로서 각 시기별로 어떠한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되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한 감이 조금씩 잡혀갈 때쯤이었다.

교육부로부터 전화가 왔다는 연락을 받고, 실험 포장(圃場)<sup>1)</sup>에서 전공생<sup>2)</sup>들의 실습 지도를 하다가 전화를 받아 보니, 당시 교육부 농업 편수관으로 재직 중이신 두창묵 장학관(현재 여주 자영농업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임 중)의 전화였다. 제 6차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새로 개발되는 1종 교과서<sup>3)</sup>의 심의를 맡아 주어야 하겠다는 요지의 내용이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농업계 고등 학교 교사로서 학교 업무에 매진하기보다는 어딘가 주변인 같은 어색한 느낌으로 생활하고 있던 본인에게, 두창묵 편수관의 그 전화 한 통은 이후, 교직에 임하는 자세를 바꾸게 할 만큼 영향력이 큰 충격적인 전화였다.

초·중·고등 학교를 모두 서울에서 다녔고 대학에 가서야 비로소 농업과 농업 교육을 접해 본 필자로서는, 농과대학을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농업계 고등 학교 교사로서 가장 어려운 점이 교실에서의 이론적인 수업보다는 포장(圃場) 실습에 대한 풍부한 노하우였다.

그러던 차에 교육부의 농업 교과 담당 편수관이 본인의 능력(?)을 인정하고, ‘1종 교과서 심의’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것이다.

심의 자료인 집필 원고 초안을 우편으로 전달받고 약 1주일 간을 그야말로 정성을 다하여 꼼꼼하게 검토하였다. 검토한 자료를 들고 지정된 일시에 심의 장소인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농업교육과(현재는 서울의 관악 캠퍼스로 이전하였으나, 당시에는 농과대학이 수원의 농촌진흥청 옆에 별도 캠퍼스로 위치하고 있었다.) 회의실로 첫 번째 심의를 하러 가던 날에는, 당시 일 년에 한두 번 입을까 말까 하던 신사복 정장까지 차려입고 갔었다. 국가에서 개발하는 교과용 도서의 심의위원이라는 자부심에 어깨를 으쓱거리며…….

회의 탁자 중앙에 담당 편수관이신 두창묵

장학관이 근엄하게 앉아 계신 가운데, 전국에서 선발된 심의위원들과 해당 교과서를 집필한 집필위원들이 흡사 전투를 치르기라도 하는 듯한 긴장 속에 집필 원고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마주 앉았다. 담당 편수관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며, 혹시 심의 과정에서 잘못됨이 없을까 하나하나 원고를 검토해 나갔던 모습은 엄숙함마저 느끼게 하였다.

약 5시간의 긴장된 심의 과정이 모두 끝나고, 미리 준비해 온 서류(심의 검토 의견서 등)와 검토한 자료를 집필위원들과 편수관에게 전달하고 나니, 편수관은 각 심의위원들에게 얼마 안 된다며 미안한 표정으로 심의 수당이 들어 있는 봉투를 나누어 주면서, 수당 지급 관계 서류에 서명을 하도록 하였다.

국가에서 개발하는 교과서 심의에 심의위원으로 참석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감격에 겨워하던 차에 수당까지 주시다니 하는 황송스러운 마음이 당시 본인의 솔직한 심정이었다. 뿌듯한 마음으로 서류에 서명을 하면서 확인한 심의 수당은 5만 원에 세금을 공제하고 4만 7천 원 정도가 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각종 물가와 비교해서 수당 금액이 그리 썩잖지 않은 금액이기도 했지만, 그 수당이 더 소중하고 뿌듯하게 느껴진 것은 전국에서 선정된 유능한 선배 교사들과 함께 국가에서 개발하는 교과서의 내용을 심의, 검토하고 받은 ‘심의 수당’이었기 때문이었다.

그 후, 몇 년간 1종 교과서 심의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제 7차 교육과정을 준비하던 1997년에는 농업계 고등 학교 교육과정 각론 개발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도 했었고, 1999년에는 드디어 농업계 고등 학교 ‘환경 보전’ 과목의 집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교과서 개발의 전 과정을 주도해 보는 영광도 누렸다.

그러다가 교육부 전문직 공채 3기로 합격하여 수원에 있는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 파견 근무를 하던 중, 2000년 9월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의 부름을 받았다.

8년 전 그렇게도 위대해 보이던 교과서 편수 업무를 직접 맡게 된 것이다. 제 7차 교육과정이 개정됨에 따라 연차적으로 개발되고 있었던 ‘농업에 관한 교과’ 39책과 특수 학교 ‘농업’ 교과서 및 지도서 등 모두 41책에 대한 국정 도서 편수를 담당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미 집필이 완료되어 심의가 진행 중인 교과서와 2001년, 2002년까지 3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개발 계획이 잡혀 있어 집필이 진행되고 있는 교과서 등, 농업에 관한 모든 교과서의 개발 업무를 총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바로 심의위원들께 지급하는 심의 수당과 관련된 서류 작성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었다.

8년 전, 그 감격 속에 받았던 심의 수당 5만 원이 단 한푼도 현실화(인상)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지급되고 있었던 것이다. 지방에서 참석하는 위원들께는 여비도 되지 않는 금액을 심의 수당이라고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sup>4)</sup>

해당 분야에서는 전국적으로 최고라고 인정되는 분들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하고, 300여 쪽에 달하는 교과서 집필 원고에 대하여 검토, 심의를 부탁드리고는 그에 대한 심의 수당이 달랑 5만 원인 것이다.

2002년 9월, ‘잠사’ 관련 과목의 2차 심의<sup>5)</sup> 때로 기억된다. 전체 7명의 심의위원 중에 서울대학교를 정년 퇴임하시고 명예 교수로



활동하고 계신 노(老) 교수님이 계셨다. 우리나라 잠사학계의 최고 권위자이면서, 산증인으로 인정받고 계신 노(老) 교수를 전임 편수관계서는 심의위원으로 위촉하였던 것이다.

사방이 책으로 가득 차 있어서 바람도 잘 통하지 않고, 밀폐되어 답답하기 그지없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교과용 도서 심의회실<sup>9)</sup>’에서 무더위 속에 무려 4시간(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정도의 심의를 어렵게 마치고, 가장 부담스러운 수당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시간에 문제는 드디어 터지고 말았다.

그렇지 않아도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한 분씩 조심조심 서류에 서명을 받고 있을 때, 작심하고 말씀을 하시는 듯, 노(老) 교수님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교과용 도서 심의회실’을 울렸다.

“송 편수관! 편수관계서는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 내 나이가 올해로 68세요. 평생 우리 나라의 잠사학 발전을 위해서 이 나이 되도록 열심히 살아왔소. 하오만, 이번 교과서 심의를 하면서 분노와 함께 서글픔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소. 이번 교과서 검토, 심의를 위해 내가 투자한 시간이 꼬박 1주일이요. 나이 탓으로 눈이 밝지 못해서 젊은이들보다는 능률이 떨어지는 점도 물론 있겠지만, 그 보다는 이 책이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이 사용할 교과서라기에, 그것도 국가에서 책임지고 개발하는 국정 교과서라기에 정성을 더 기울였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소. 다른 심의위원들도 모두 마찬가지로 거라 생각하오. 다들 젊잖은 학자들이라 금전에 연연한다는 모습을 보이기 싫어 모두들 침묵하고 있지만, 이 자리의 연장자로서, 또한 이번 심의회의 심의위원장으로서 오늘이 마지막 심의회라

고 하니, 대표 자격으로라도 내가 한 마디 해야겠소.

지난 달에 나는 필요한 경비 전액을 중국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약 열흘 동안 북경에서 열리는 잠사 관련 학회에 참석하여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소. 매년 잊지 않고 초청을 해 주어 고맙게 여기면서 참석하고 있소.

내가 보아하니 여기 계신 심의위원님들 모두 어느 곳에 가시든 참석하기만 하면 최소 하루에 수십만 원 이상의 참가 수당을 받으시는 전문가들이요. 시간이 바로 소득과 직결되는 분들이란 말이요.

송 편수관! 전문가는 전문가로서 적절한 대우를 해 줄 때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법이요. 이렇게 심의하려거든 다음부터는 1주일에 5만 원 정도 수당을 받은 만한 저급 인력을 선발해서 하시오!”

무슨 할 말이 더 있겠는가! “다음 교과서 개발시에는 반드시 심의 수당을 현실화해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 이번만은 노여움을 푸시고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사죄를 드리면서 설득할 도리밖에…….

다행히 집필 대표를 맡고 계신 교수님께서 적극적으로 변호를 해 주셔서 그 자리의 민망스러움은 겨우 면할 수 있었다.

검정 교과서 검정 수당은 국정 교과서 심의 수당의 3배(1일 16만 원 정도) 정도가 된다. 물론, 검정 작업은 그 성격상 외부와 격리된 상태의 합숙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숙박을 하지 않는 국정 교과서 심의와 단순 비교를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주로 실업계 고등 학교 교과서가 대부분인 국정 교과서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집필 수당

및 심의 수당을 포함하여 전체 개발에 소요되는 예산의 현실화<sup>7)</sup>는 시급한 실정이다.

각종 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학습에 대한 흥미나 관심이 저조한 것이 실업계 고등 학교 학생들의 현재 실상이다.

필요한 비용을 제대로 투입하지 않고, 개발에 참여하는 집필위원과 심의위원들의 교과서에 대한 애정과 사명감에만 호소해서는 수준이 낮은 실업계 고등 학교 학생들의 관심을 이끌어 낼 만한 우수한 교과서는 만들어 낼 수 없다.

주어진 교육과정이 아니라 각 교육 주체가 서로 협력하여 여건에 맞게 만들어 실천해 가는 교육과정이 제 7차 교육과정이다.

새 교육과정에 따라 새로 개발되는 교과서,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국정 교과서 심의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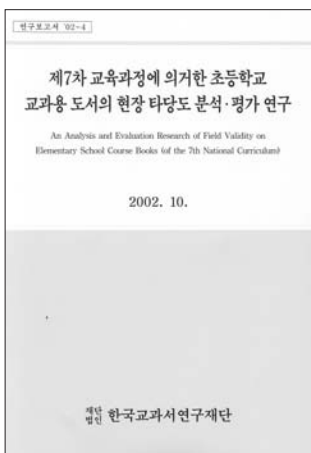
교육인적자원부에 몸담고 있는 직원으로서 직접 언급하기에 부담스러운 점도 있지만, 교육인적자원부가 국정 교과서 심의위원들을 진정 전문가로 인정한다면 그에 합당한 수당을 지급 해야 할 것이다. 전문가인 그들의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서 1주일에 5만 원이라는 심의 수당은 너무 심하지 않는가……. 23

- 1) 농업계 고등 학교의 경우 과학실과 같은 실험실이나 가정실과 같은 실습실뿐만 아니라, 작물을 재배하는 농장과 동물을 사육하는 축사 등 다양한 형태의 실험, 실습 포장이 학교 안에 있다.
- 2) 일상적인 교과 수업 외에 특별히 본인의 적성에 따라 전공 포장을 선택하여 방과 후 등을 이용하여 추가로 전공과 관련된 학습을 더 하는 학생들을 의미한다.
- 3) 당시에는 교과용 도서의 구분이 1종 교과서, 2종 교과서, 인정 도서 등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현재는 1종

교과서는 국정 교과서, 2종 교과서는 검정 교과서로 명칭이 바뀌어 사용되고 있다.

- 4) 대학 교수나 일부 고등 학교 교사들 중에는 심의 수당을 받기 때문에 소속 기관으로부터 여비를 받지 못하고 오시는 분들이 더러 계셨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심의회 개최 공문에 소속 기관에서 여비를 지급해 달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발송하기도 해 보았지만, 일부 기관(주로 사립 대학)의 총무과 등에서는 심의 수당을 받기 때문에 여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여비 지급 거부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시해 오는 경우도 있었다.
- 5) 개발 기관에서 제출된 초고에 대한 1차 심의, 학교 현장 교사들로부터 검토를 받는 현장 검토, 앞의 심의 내용을 반영한 최종 원고에 대한 2차 심의 등 모두 3번 실시하는 교육부 주관 교과서 심의 중 마지막 심의 과정이다.
- 6) 무려 2300여 권에 달하는 교과용 도서뿐만 아니라 그의 서너 배는 될 법한 각종 장학 자료용 책자를 보관하는 서고(書庫) 역할도 함께 하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교과용 도서 심의회실'은 각종 자료와 교과용 도서 수정본 및 결재본 등을 몇 겹으로 쌓아 놓아, 발 디딜 틈도 없이 겨우 심의회를 운영할 수 있는 정도의 탁자와 의자를 놓을 수 있는 공간만이 간신히 확보되어 있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각 교과 편수관들이 일정상 너무 바쁘다 보니 심의위원들의 편리를 도모하지 못하고, 환경이 열악한 줄 알면서도 '교과용 도서 심의회실'을 이용하여 심의회를 개최하곤 하였는데, 그 날도 본인의 형편상 전국에서 오신 심의위원들을 그 답답한 곳에 모실 수밖에 없었다.
- 7) 실업계 고등 학교 전문 교사가 대부분 국정 교과서로 분류가 되어 있다. 이와 같은 국정 교과서의 책당 전체 개발 비용은 평균 3천만 원 정도이다. 이는 최소한 2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 개발하고 있는 검정 교과서와 비교할 때, 현실을 무시한 너무나 형편 없이 적은 금액이 아닐 수 없다.

# 제7차 교육과정에 의거한 초등 학교 교과용 도서의 현장 타당도 분석·평가 연구



## 〈연구 보고서 2002-4〉

이 연구는 탄력적 변화를 가능하게 한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용 도서의 현장 타당도 분석이 교육 현장의 현실과 요구를 실질적으로 교과용 도서의 개선과 수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연구의 목적은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용 도서의 현장 타당도를 분석·평가하여 교과용 도서의 개정 및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두었다.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용 도서의 개발에서는 수준별 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교과서의 변화로 수학은 성취 기준에 따라 단계적인 교수·학습이 전개되도록 개발되었으며, 국어, 사회, 과학 및 영어 교과는 학생의 능력에 따라 학습의 양과 폭이 달라질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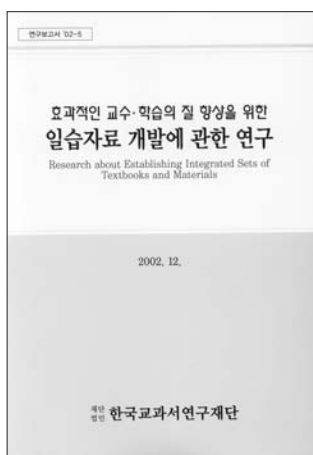
교과용 도서 개발 지침을 분석한 결과 수준별 교육과정 반영, 학습자의 학습과 학습 과정을 중시하는 교과용 도서의 개발, 자기 주도적 학습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교과용 도서의 개발, 학습 동기, 흥미 유발을 돕는 편집 체제, 정보 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교과용 도서 개발 등에 초점을 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각 교과용 도서에 대한 현장 타당도를 분석·평가하기 위한 설문 조사 결과 제7차 교육과정의 정신을 반영하는 세계화·정보화 사회로 대변되는 지식 기반 사회에 학생들이 탄력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자기 주도적 능력과 창의성 신장에 적합한 교과서 구성이 되어 있는 비교적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 쉽고 재미있고 친절하며 활용하기에 편리한 교과서 편찬이라는 명분에 걸맞게 각 교과용 도서가 자기 주도적 학습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의 학습 발달 단계에 적합한 흥미와 동기 유발, 학습자의 정서를 고려한 다양한 편집 체제 및 디자인 기법의 도입이 학습 효과 상승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많은 교사들이 공감하고 있음을 설문 조사 결과 알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하여 교육 현장의 요구가 실질적으로 차후 교과용 도서의 개선과 수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는 서울공진초등학교 류연수 님, 오종렬 님, 서울녹번초등학교 정선숙 님, 서울도곡초등학교 백경선 님, 서울반원초등학교 김웅현 님, 서울사대 부설초등학교 한춘희 님, 국제교육진흥원 함정식 님이 공동으로 수행한 것임.

# 효과적인 교수·학습의 질 향상을 위한 일습 자료 개발에 관한 연구



## 〈연구 보고서 2002-5〉

이 연구는 앞으로 교과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각종 교과서 일습 자료를 포함한 교과서에 따른 ‘한벌(일습: 一襲) 자료, 또는 교과서 보조 자료’를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추진되었다.

이 연구는 일습 자료에 대한 초·중등 학교 및 대학의 교원과 교과용 도서 편수 작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 전문직 및 교과 교육 연구원과 출판사 편집진 등을 대상으로 의견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정부 차원에서 일습 자료 연구·개발 및 보급의 필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둘째, 일습 자료의 종류나 구성을 보면 현장 교사들이 수업에 바로 투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주제별 소책자나 워크북 형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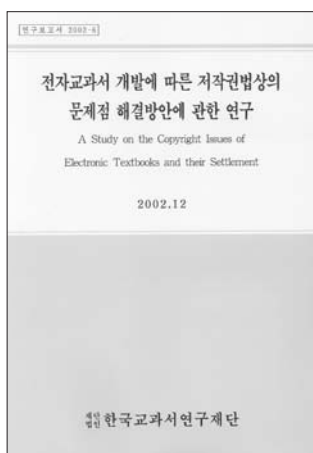
일습 자료 제작 및 보급을 생각하여야 한다. 셋째, 발행 주체는 각 민간 출판사가 자율적으로 개발하는 자유 발행제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일습 자료의 개발, 집필에는 현장 교사들이 많이 참여해야 한다. 다섯째, 해당 교과서 검·인정 심사를 할 때, 관련된 일습 자료에 대한 심사도 함께 실시하여 교과서 채택에 반영하도록 한다. 여섯째, 일습 자료 구입과 관련된 예산은 정부나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 초·중등 학교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교과에서 1차적으로 필요한 주요 일습 자료의 유형을 제시하였는데, 교수·학습을 위한 일습 자료가 가장 필요한 교과는 사회, 과학, 국어, 영어, 기술·가정 교과 등이고 보조 자료의 유형별로는 서책 형태의 참고 자료(이야기책 등), 시청각 매체, CD-ROM을 비롯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활동 자료집이나 활동지, OHP TP 자료 등의 순으로 개발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교육과정 및 교과용 도서의 교수·학습 자료의 연구 개발에 많은 도움을 주고 교과서 발행자와 교육 전문가 및 현장 교사들이 지역이나 학교 수준에서 교과서 관련 자료를 개발하는 데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최석진 님, 김정호 님, 박영순 님, 서울교육대학교 이완기 님, (주)교학사 이승구 님이 공동으로 수행한 것임.

# 전자 교과서 개발에 따른 저작권법상의 문제점 해결 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 보고서 2002-6〉

이 연구는 전자 교과서의 개발·이용과 관련하여 야기되는 저작권법적인 쟁점을 분석하는 데에서 출발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전자 교과서의 작성·개발의 보상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현재 보상금 지급 기준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저작물의 유형을 좀더 확대할 것을 제안하고 콘텐츠의 이용과 관련 기술적 보호 조치에 의하여 저작권자에게 간접적인 접근권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 이에 관한 입법을 함에 있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위해서는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방지하는 기술적 보호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저작 인접권에 대해서는 ‘실연자의 실연’ 및 ‘방송 사업자의 방송’도 게재되도록 하고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고, 실연자나 방송 사업자의 저작 인접권을 제한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전자 교과서의 이용과 배타적인 저작권과 관련, 교육 목적을 위한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현행 제23조 제2항의 규정은 전자 교과서를 위하여 적절한 것이 아니며, 저작권이 제한됨으로써 이익을 얻게 되는 주체를 현행법의 교육 기관 이외에 교사와 학생들도 포함되도록 하는 입법이 이루어져야 하며, 전자 교과서를 위하여 제한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는 배포권이나 전송권도 포함되는 입법이 행해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끝으로, 미국 저작권법상 발달해 온 공정 이용의 원리를 한국의 저작권법 체제에 수용하는 것에 대한 쟁점과 관련하여, 미국에서와 같은 법원의 역할을 할 수 없으며 판례법 국가가 아닌 한국에 이를 도입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연구의 결과가 입법이나 기존 법률의 개정 과정에 많은 참고가 되어 전자 교과서가 보다 더 활성화되어 교육을 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는 인하대학교 법과대학 이대희 님, 광운대학교 법학과 안효질 님이 공동으로 수행한 것임.

# 교과서에 숨겨진 비밀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주최 - 제1회 교과서 관련 수필 작품 공모 초등부 최우수작

■ 글 / 김영우 (광주효동초등학교 5학년)



작년 여름, 학기말 평가 시험이 끝나고 나서 있었던 일이다.  
점수가 매겨진 시험지를 받아든 나는, 몹시 우울해 있었다. 왜냐하면, 열심히 공부한 대가치곤 성적이 너무 형편 없었기 때문이다. 전교 석차를 따져 보기는커녕, 반에서 3등 하는 것으로 만족해야만 했으니까.

물론, 시험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높은 점수를 받는 게 더 좋지 않겠는가? 하지만 시험 점수는 늘 내가 원하는 만큼 나오질 않았다.

‘나는 왜 열심히 공부하는데도 성적이 안 오르는 걸까?’

수업 시간에도, 급식을 먹을 때에도, 친구들과라 축구를 할 때에도, 온통 그 생각 때문에 정신이 없었다. 아까 축구할 때만 해도, 수비수인 내가 명칭히 서 있는 바람에 라이벌 5반에게 두 골이나 그냥 내줬으니까.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진영이를 만났다. 진영이는 전교에서 1, 2등을 다투는 우등생이다. 또한, 학원에 안 다니고 집에서 혼자 공부하는 걸로 유명한 아이이기도 하다.

나는 너무 마음이 답답해서 진영이에게 고민을 털어놓았다.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올라간다고……. 학원에서 어려운 문제도 많이 풀어 보고, 또 각종 참고서로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시험을 보면 성적이 형편 없이 나온다고 말이다.

난 사실, 그런 말을 하면서도 별다른 기대는 하지 않았다. 하도 마음이 답답해서 그냥 한번 해 본 소리였다. 그런데 진영이의 대답은 실로 뜻밖이었다. 집에 가서 교과서와 시험 문제를 잘 비교해 보면 고민이 해결될 거라나?

나는 처음에 진영이가 농담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피식 웃으며 “그래? 그렇다면 교과서에 정답이라도 써 있다는 거냐?”라고 말했다. 그랬더니 진영이는 웃지도 않고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였다.

나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시험지를 꺼내서 교과서와 비교해 보기 시작했다. 잠시 후, 나는 정말로, 진짜로, 뒤로 자빠질 만큼 놀라고 말았다. 진영이 말대로 교과서 속에 정답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던 것이다. 특히, 국어의 주관식 문제는 교과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게 많았고, 또 수학 주관식 문제도 익힘책에 있는 문제가 대부분이었다.

나는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 동안 시험 공부 한답시고



다른 참고서랑 문제집만 집중적으로 공부했지, 교과서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것이다.

‘아, 그랬었구나. 교과서에 이런 비밀이 숨겨져 있었구나!’

그 후로 나는 교과서 마니아(mania)가 되었다. 여름 방학이 시작되자마자 미리 받은 2학기 교과서로 혼자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수학을 공부할 땐,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어떡하나?’ 하며 걱정도 했지만, 교과서에 나오는 순서대로 차근차근 풀어 가며 공부했다. 그랬더니 ‘이게 정말 내가 처음 배우는 수학 문제인가?’ 하는 의심이 갈 정도로 너무 쉽고 빠르게 이해가 되었다.

또한 국어와 사회는 교과서를 외우다시피 할 정도로 읽고 또 읽었다. 자꾸만 읽다 보니 핵심 내용이 저절로 머릿속으로 쏙쏙 들어왔고, 다른 책을 읽을 때 줄거리를 이해하는 데에도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교과서를 여러 번 읽다 보니 나도 모르게 글 쓰는 실력이 부쩍 늘어서, 광주시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독후감 대회에서 학생 부문 대상을 받는 영광도 안았다.

그리고 과학은 내가 제일 좋아하고 자신 있는 과목이어서 공부하기가 더욱 쉬웠다. 단지 실험 관찰을 직접 해 볼 수 없다는 것만 빼곤, 혼자 공부하는 데 문제될 게 전혀 없었다.

2학기가 되자 아빠께서 “참고서랑 문제집 사야지? 오늘 사다 줄까?”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는 단호하게 “이젠 필요 없어요.” 하고 말씀드렸다. 아빠는 깜짝 놀라시며 “그럼 이제부터 공부를 안 할 생각이나?” 하며 걱정하셨지만 난 그냥 웃기만 했다. 내 비밀을 알고 계시는 엄마도 나랑 공범(?)이 되어서 호호 웃으셨다.


나의 수업 태도는 2학기가 되면서부터 확 달라지기 시작했다. 왜냐 하면, 교과서 위주로 공부하다 보니 선생님의 말씀을 하나도 놓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선생님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으려 하다 보니 수업 태도가 눈에 띄게 좋아졌고, 수업 태도가 좋다 보니 선생님의 칭찬을 매일 듣게 되어 학교 생활이 더욱 즐거워졌다.

그런데 교과서에도 비밀이 숨어 있었지만, 선생님의 말씀에는 더 큰 비밀이 숨어 있었다. 방학 동안에 혼자 공부할 때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었던 문제들이 선생님의 말씀 한 마디에 순식간에 해결되었다. 전엔 잘 몰랐던 것을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확실히 알게 되자, 이젠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척척 풀리는 게 아닌가?

나는 드디어 4학년말 평가 시험에서 우리 반 일등을 차지했다. 비록 전교에서는 5등에 머물렀지만, 반에서 1등 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행복했다.

그리고 올해 5학년 1학기말 평가 시험에선 전교 2등을 했다. 올백을 받아 전교 1등을 차지한 진영이가 나를 보더니 농담을 한다.

“야, 이러다가 너한테 1등자리 뺏기는 거 아냐?”

교과서로 공부하라고 괜히 가르쳐 줬네.” 

# 마음으로 읽는 교과서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주최 - 제1회 교과서 관련 수필 작품 공모 중등부 최우수작

■ 글 / 박지용 (서울상계고등학교 3학년)



고 3이 된 지도 반년이 넘어간다. 학창 시절의 마지막이다. 바쁘게 입시를 준비할 시기지만 나는 교과서 하면 꼭 기억에 남는 일이 있어 그 일을 소개하고자, 이번 글쓰기에 참여하게 되었다.

초등 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국정 교과서를 받아 고 3이 된 지금 까지, 교과서와 함께 한 지 12년째다. 교과서란, 전 학년의 학교 학습 과정이 모두 들어 있는 지식의 보고이자, 삶의 지침서이다.

하지만 요즘 아이들(물론 나도 요즘 아이지만)을 대상으로 교과서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교과서를 소중히 여기는지 이러한 것들을 묻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말 것이다. 과거엔 새 교과서를 받으면 새 책을 받았다는 기쁨에 설레어 잠을 설쳤다고 하던데, 그런 설레임은 고사하고 요즘은 표지를 싸는 일조차 하지 않는 아이들이 태반이다. 그뿐만 아니라 들고 다니기 무겁다며 단원별로 찢는 건 예사고, 표지의 과목 이름은 국어는 ‘북어’로 미술은 ‘마술’로 수학은 ‘순대’로, 마음껏 낙서까지 하는 판이다. 또한, 교과서에 삽입된 위인들의 사진엔 온갖 손장난으로 여자는 남자로, 젊은이는 늙은이로, 흉한 꼴을 만들어 놓기도 한다.

과거엔 나도 이런 나쁜 손장난을 즐기는 철없는 아이였다. 하지만, 나의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모두 바꾸어 놓는, 그러니까 교과서가 소중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일이 일어났다.

내가 고등 학교를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초여름의 일이다. 중간 고사를 막 끝나치고 친구들과 롯데월드에서 놀러 한바탕 신나게 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목이 말라서 편의점에 들어가 음료수를 하나 고르고 어슬렁거리다 계산을 했다. 그런데 계산을 하고 돌아서는 내게 점원이 책을 놓고 간다며 날 불러 세우는 것이었다. 물론, 내 책이 아니었다. 롯데월드에서 책을 가지고 놀러갈 만큼 난 모범생이 아니었다. 내 책이 아니라고 말하려고 그 책을 내려다 보는데 학교 국어 교과서였다. 그것보다도 책은 투명 표지로 깔끔하게 포장되어 있었고, 단원마다 색색의 쪽 표시 띠가 붙어 있었다. 아마도 여학생의 책인 것 같아 난 모른 척 그 책을 받아두고 편의점을 나왔다. 장난기가 발동한 것이다.

책이 이렇게 깔끔한 것으로 봐서 아마도 예쁜 내 또래의 여자 아이일 거라고 생각했다. 책을 찾아 주면 내게 고마워하겠지 하는 맘으로 책을 들고 집으로 왔는데 이상하게도 책에 이

름과 학교가 적혀 있지 않았다. 혹시라도 책 사이에 단서가 있지 않을까 해서 책장을 한 장 한 장 넘겨 보았다. 내 교과서와는 달라도 아주 달랐다. ‘국어가 무슨 필기가 필요해! 내용만 알면 되지.’ 이런 맘으로 허술하게만 교과서를 정리한 나와는 전혀 달랐다. 색색의 펜으로 단원과 종류를 달리하여 상세한 내용까지 모두 필기가 되어 있었다. 그 중에서도 눈길을 끄는 것은 국어 사전을 찾아 적은 듯한 꼼꼼한 낱말 뜻의 정리와 해석, 단원이 끝날 때마다 종이를 붙여 이 단원을 통해 자신이 느끼게 된 점을 마치 소설책을 읽고 난 뒤의 독후감처럼 예쁘게 써 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교과서의 남은 공간엔 책에 소개된 시인의 또다른 시들도 예쁘게 정리되어 있었다.

학교에서도 공부 잘 하는 아이들의 교과서를 보면 뻑뻑하게 잘 필기 된 것을 본 일은 있으나, 이렇게까지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정리된 교과서를 본 것은 처음이었다. 이 사람은 교과서를 ‘딱딱하고 식상한 골칫거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아끼는 소설책처럼 다루고 있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었다. 그런 느낌을 받게 되자 곧바로 반성과 죄책감이 들기 시작했다. 내가 함부로 여겼던 교과서에 대한 반성과 그렇게 멋지게 교과서를 만들어 낸 그 아이가 책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마음아파할지를 생각하니 죄책감이 심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아무리 뒤져 봐도 주인의 이름이나 학교는 도무지 나와 있지 않았다. 그 날 밤, 나는 내 국어 교과서를 펴 놓고 그 아이의 필기 내용을 옮겨 적어 보았다. 한 페이지를 적는데 30분이 족히 걸렸다. 이렇게 중요한 뜻이 담긴 단어와 어구들이 교과서 속에 이처럼 많이 들어 있었다는 걸 난 그 날 처음 깨달았다.

친구들과 모여 앉아. “관치기를 하기엔 국어 책이 두꺼워서 제일 좋아.”라며 웃어 대던 내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학원을 다니는 것보다 학습지를 여러 개 하는 것보다 내게 주어진, 늘 내 손에 있는 교과서 속에 모든 지식이 있다는 것을 왜 그렇게 몰랐는지 내가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이틀간을 고민한 끝에 난 책의 주인을 기필코 찾아야겠다고 결심했다. 그 사람이 누구든 책을 찾아 주고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을 꼭 전해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고민 끝에 친구의 충고로 처음 책을 가져왔던 편의점으로 갔다. 친구 말에 의하면 그렇게 소중하게 쓰여진 책이라면 반드시 주인이 찾으러 올 테니 가 보라는 것이었다. 떨리는 맘으로 편의점으로 들어갔다. 사람들이 많았다. 부끄러운 마음에 가게 구석을 방황하다가 사람들이 모두 나간 후 천천히 점원에게 다가갔다.

“저기요, 여기서 책을 한 권 주웠는데요. 혹시 주인이 찾으러 왔나 해서요.”라고 더듬대며 어렵게 말을 꺼내자 점원이 무슨 책이냐고 물었다. 국어 교과서라고 하자 살짝 웃는 눈치였다. 교과서라면 썩 가격에 대형 서점에서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요즘 아이들)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점원은 잘 모르겠다며 직원실에 들어가 물어 보고 오겠다고 했다. 얼마 후 점장이라는 아저씨가 나오더니 그 책을 찾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다. 너무나 반가운 나머지 난 눈물까지 흘릴 뻔했다. 그런데 그 아저씨의 말을 들으니 정말 눈물이 났다. 며칠 전 한 손님이 오더니 메모지에 글을 써서 주더라는 것이다. 이게 뭐가 하고 들여다 봤더니. ‘중요한 책을 잃어버렸어요. 국어 교과서예요. 여기 놓고 간 것 같은

데 보지 못하셨나요?’라고 쓰여 있었다고 한다. 아저씨가 잘 모르겠다고 그런 책 못 봤다고 하자 그 사람은 메모지를 꺼내서 ‘혹시라도 책을 보게 된다면 연락해 주세요. 정말 소중한 책입니다.’라면서 연락처를 주고 가더라는 것이다. 아저씨 말로는 그 사람은 말을 못하는 사람(병어리)인 것 같다고 했다. 나이도 좀 먹은 듯한 남학생이라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어안이병병했다. 멍한 기분으로 한참 동안 서 있었다.

여학생도 아닌 남학생이었고, 정상인도 아닌 장애인에 나이가 들어 보이는……. 누굴까? 아저씨에게 연락처를 받아두고 편의점을 나왔다. 고민 끝에 전화 번호를 누르고 얼마를 기다리자 상대방이 전화를 받고 “야학방입니다.”고 하는 것이었다. 야학! 참으로 생소한 단어였다. 우물대며 책 잃어버린 사람을 찾았다. 잠시 후 책 주인이 거기에 있다며 찾으러 오겠다는 것이다. 어디냐고 내가 물었더니 당고개 근처의 야학방이라고 했다. 집에서 멀지 않은 거리였다. 내가 가겠다고 했다. 어째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모르지만 그 곳에 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순간 들었다.

당고개 허름한 건물들 틈 2층에 야학방이 있었다. 그 곳에 들어서자 젊은 누나가 뛰어나오며 책을 전해 주러 온 학생이냐고 물었다. 그렇다고 했다. 허름하고 협소한 장소에 칠판과 의자, 책상이 몇 개 놓여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그 책의 주인을 만나게 됐다. 우유 공장에서 날품을 하는 고학생이었다. 농아여서 일반 학교에서는 공부도 할 수가 없었고, 집안 형편이 어려워져 특수 학교도 다닐 수가 없다고 했다. 그래서 일을 하며 이 야학방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됐으며, 젊은 누나가 소개를 해 주었다. 책을 돌려 주었더니 고맙다고 하면서 몇 번이고 나보다 나이도 많아 보이는 그 형은 고개 숙여 인사를 했다. 한없이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 누나는 이 야학방의 선생님인 모양이었다. 하나를 설명하면 열 개 스무 개를 공부하는 학생이라며 그 형을 칭찬했다.

형이 가져왔다는 우유 한 잔을 마시고 그 곳을 나와 집까지 40분이 넘는 거리를 걸어서 돌아왔다. 돌아오는 길에 내 머릿속에는 참 많은 반성과 후회와 결심들이 스쳐 지나갔다. 교과서 참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겼는데 그 형에게는 며칠을 맘 졸이며 찾게 만든 소중한 물건이었다니. 나는 모든 신체 기능이 멀쩡한데도 공부가 싫고 그만 두고 싶을 때가 많은데, 그 형은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면서도 공부하고자 피나는 노력을 하다니……. 이렇게 해이한 맘으로 살지 말아야겠다고 몇 번이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후 2학년 때 세 책 몇 권을 받은 후에는 가져온 그 날로 표지를 예쁘게 포장했다. 가능하다면 많은 교과목의 내용을 내 스스로 열심히 필기하고자 노력했다. 고 3이 된 지금도 가끔 그 형과 국어 교과서를 떠올리며 나를 반성할 때가 있다. 우리들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는 교과서. 가장 중요한 지식이 가득 들어 있는 그 교과서의 소중함을 다시금 우리 학생들 모두가 느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얼마 남지 않은 입시 준비 기간에 내가 교과서와 씨름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나는 내가 성인이 되어 교과서가 없는 생활을 하게 된다면 조금은 서운해질 것만 같다. 하지만 교과서의 지식은 내 머릿속에 가득 품은 채, 그 형이 전해 준 교과서의 의미는 내 마음에 품은 채 살아갈 것이다. 21

# 바둑이는 어디 간겨?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주최 - 제1회 교과서 관련 수필 작품 공모 일반부 최우수작

■ 글 / 김선민(서울응암초등학교 교사)



신학기가 시작된 지 며칠이 지나도록 영민이가 교과서를 가져오지 않았다.

“영민아, 왜 교과서 안 가져왔어?”

“……, 저……, 이사……, 없어서…….”

“이사 갔어? 엄마께 여쭙 봐. 엄마가 알고 계실 거야.”

그 때 느닷없이 영민이와 일학년 때 한 반이었던 호진이가 끼어들었다.

“선생님! 제네 집 없어요.”

사업에 실패한 아버지는 가출한 지 수 개월이 지나도록 행방불명이고, 빚쟁이에게 쫓기다 못한 어머니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하느라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사정이었다. 3월은 아직 찬바람이 온몸을 엄습하고 있었지만 초가을에나 어울릴 옷을 입고 등교하는 영민이의 모습을 보면서 측은했는데 도무지 영문을 알 수 없었다.

영민이의 손을 잡고 찾아간 곳은 재건축으로 철거될 시장 건물의 문 닫은 가게 한 구석을 판자로 막은 작은 방이었다. 여기저기서 주워 온 이불과 옷가지가 널려 있는 작은 방에서는 역겨운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고, 다른 한 구석에는 라면을 끓여 먹은 듯한 냄비와 차가운 냉기에 딱딱하게 굳은 밥 한 사발이 놓여 있었다. 그 곳에서 한겨울을 난 영민이는 무상 급식 우유를 제대로 삼킬 수 없을 정도로 목이 부었고,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

이튿날 교과서 담당 선생님께 신학년도 교과서 여분이 있는지를 문의하였다. 공교롭게도 교사용을 제외하고는 교과서가 남아 있지 않았다. 하지만, 시내의 한 서점에서 교과서를 구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최후의 방법으로 남겨 두고 일단은 다른 방법을 강구하였다.

“선배님, 선배님 반 아이들 중에서 작년에 쓰던 2학년 교과서 좀 깨끗한 걸로 한 질만 모아 주세요.”

나는 3학년 담임을 맡고 계신 선배 선생님을 찾아가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고 도움을 구하였다. 그분은 흔쾌히 이삼일 안에 깨끗한 것을 골라 한 질을 마련해 주겠다고 장담하셨다. 며칠 후,

“김 선생, 그게 말이야…….”

“네, 선배님. 아하, 그거요? 벌써 마련하셨어요?”

우리 교실까지 직접 찾아온 선배 선생님을 반갑게 맞이하며 말을 꺼냈는데 이상하게도 그분의 손에는 교과서가 들려 있지 않았다. 웬일일까?

“김 선생, 지난번에 부탁한 거 말이야. 그게 허, 참…….”

선배님의 말씀은 이랬다. 아이들에게 작년에 쓰던 교과서를 보관하고 있으면 깨끗한 걸로 골라 가져오라고 하였더니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다. 하도 이상해서 몇몇 아이들의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사정 이야기를 하고 부탁을 하였더니, 교과서는 모두 정부에서 새 것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재활용으로 보냈다는 것이다. 아! 이럴 수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다른 반 선생님들께도 사정을 말씀드리고 쓸만한 교과서를 구하려고 하였지만 어렵게 가져온 것들은 대부분 낙서와 파손으로 제 모양이 아니었다. 그거라도 한 질을 마련해 주려고 생각해 보았지만 가뜩이나 어려운 환경의 아이에게 상처까지 줄 수 없다는 판단이 들어 나는 결국 시내 서점에서 구하기로 결정하였다.

오랜만에 들른 시내의 대형 서점은 학기 초를 맞이하여 학생과 부모들로 북적댔다. 다양한 도서들이 진열되어 있는 책장에 분주한 걸음으로 책을 찾거나 아예 자리에 앉아 독서를 즐기고 있는 모습들이 보였다. 그런데 희한하게 매장 한쪽에 발을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게 아닌가. 궁금하기도 하고 교과서도 찾을 겸 그 곳으로 가 보니 다른 진열대에 비해 훨씬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참고서들이었다. 한 눈에 보기에도 수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양 손에 들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참고서를 찾아 진열대를 오가고 있었다. 그 한 구석에 초등 학교 교과서가 실로폰의 음판처럼 아름다운 소리를 내며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간혹 몇몇이 책을 어루만지기는 하였으나 저 건너편 참고서 진열대처럼 범석대지는 않았다. 교과서보다 참고서에 의존하는 그들을 안타까워하며 나는 영민이에게 전해줄 교과서를 즐거운 마음으로 골랐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나는 새로 산 영민이의 교과서를 하나씩 꺼내서 들춰 보았다. 거의 매일 들여다보는 교과서였지만 지하철 의자에 앉아 펼쳐 보는 아이들의 교과서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다. 단순히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규범과 질서가 존재하며 아름다운 이야기와 순수한 노래가 재미있는 놀이와 어우러져 있는 또 하나의 세계였다. 어떤



이야기는 웃음을 자아내기에 충분했고, 어떤 이야기는 감동적이었으며, 어떤 사실은 새삼스럽기까지 했다. 초등 학교 2학년 교과서를 무릎 위에 펼쳐놓고 혼자 웃으며 읽는 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중년의 신사분이 말씀하셨다.

“아니, 어린애들 교과서가 그렇게 재미있수?”

“애, 지금 보니 정말 재미있네요. 한 번 보시겠어요?”

그건 아마 내가 교사로서 매일 가르치는 교과서를 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매일 교실에서 교과서를 대하는 것처럼 아이들의 마음으로 돌아가 읽어 보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집에 돌아오니 아내의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허기를 자극했다. 그 때, 문소리를 들은 딸 아이가 할머니 방에서 달려 나왔다.

“아빠, 아빠! 할머니께서 우리 교과서에 뭐가 없다고 자꾸 찾으셔.”

아니 이게 무슨 소린가? 딸아이는 한 손에 1학년 국어 교과서와 연필을 들고는 다른 한 손으로 나를 이끌고 어머니 방으로 갔다.

“할머니, 할머니. 아빠한테 말해 봐요. 어서요. 빨리.”

“그게 말이여……. 아, 왜 그거 있잖여? 바둑이, 바둑이 말이여.”

“네, 어머니. 바둑이요?”

“그래, 바둑이 말이여. 왜 아범 어릴 때 공부하던 책에 나오던 바둑이 말이여. 그 바둑이가 어디 간겨? 철수랑 영희는 또 어디 간겨?”

“아빠, 아빠, 할머니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야? 응?”

그 때 딸아이가 방바닥에 앉아 쓰기 책에 연필로 글씨 연습을 하였다. 그것을 본 어머니께서 버럭 화를 내셨다.

“아, 이 녀석아 교과서에다 낙서를 하고 그러. 그러면 못쓰는 법이여. 그 귀한 것을 함부로 다루면 어떡혀.”

“이잉, 할머니 왜 그래요? 제가 뭘 어쨌다구!”

나는 그냥 방을 나왔다. 한참 동안 할머니와 딸아이는 언쟁을 벌이는 듯했다. 그도 그럴 것이 할머니에게 있어 교과서는 아주 귀하고 소중한 것이었다. 교과서 이외에는 그 무엇도 우리에게 배풀어 줄 지식이나 경험이 없었던 시절에 그것은 우리를 버티게 하여 주는 가장 큰 재산 목록 1호였던 것이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었으며, 배고픔을 이길 수 있었으며, 지금의 대한 민국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다. 할머니께서는 바로 그 교과서의 소중한 함을 간직하고 계셨던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아이들은 먼지가 폴폴 나는 바둑이 교과서를 배우지 않아도 된다. 아이들은 어디에 내 놓아도 손색이 없을 우리의 교과서를 통하여 세상을 발견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것이다. 그 세상은 그들이 발견하고 만들어 놓은 세계에 대한 보답이며, 그 보답의 역사는 후손의 교과서에 영원토록 간직될 것이다. 영민이의 교과서처럼. ㉔

## 심사를 마치고

교과서를 대상으로 글을 쓰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교과서’에 얹힌 경험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이에 공감할 수 있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작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심사 과정에서 그대로 감지할 수 있었다.

초등부는 예상보다도 응모 편수가 매우 적었다. 아마도 교과서에 대한 경험이 적은 데서 오는 것이라 생각된다. 상당수 작품에서는 주제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교과서에 대한 추억담이나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에 대한 감상문, 교과서란 무엇인가에 대한 문헌적 설명 등 단조롭고 평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몇몇 작품은 매우 수준이 높아서, 문장의 기교나 세련미 등에서 초등 학생 작품 이상으로 보일 정도여서 우열을 가리기가 매우 어려웠다. 인터넷이나 전자 교과서 같은 새로운 대체 매체에 대한 인식이 높아 교과서 기능이나 역할에 대한 변화 양상을 학생들이 체감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중등부에서는 교과서에 대한 비슷한 경험담을 쓴 것이 대다수이다. 교과서를 배고 잠잔 일, 교과서에 낙서한 일, 교과서를 잃어버리고 끔끔 앓던 일, 교과서를 빌려 주었는데 모른다고 잡아떼는 이야기, 반대로 빌려 왔는데 돌려 주지 못한 경우 등 비슷한 소재의 작품이 많았다. 국어나 도덕 등 하나의 교과서에 대한 경험담을 밀도 있게 문학적 구조로 표현한 것도 있지만, 여러 교과서를 파노라마식으로 나열하여 주제나 논점을 흐리게 한 작품도 꽤 있었다. 초등부에서도 나타났듯이 교과서에 대한 미담이나 경험담을 독창적인 감각으로 쓰기보다는 수록된 문학 작품을 단순히 설명하거나 감상하는 형식의 글도 의외로 많았다. 몇몇 학교에서 단체로 응모하여 이러한 소재의 획일성이 더욱 두드러지지 않았나 한다.

일반부는 교과서에 대한 추억을 다룬 작품이 많았다. 새 교과서를 달력으로 싸던 이야기, 책보를 메고 다니던 이야기, 물에 젖은 교과서 말리기 등 유사한 내용이 많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작품도 있다. 수필 형식은 그 특성상 사실성 못지않게 주관적인 느낌이나 생각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한데, 일부 작품은 필자의 독창적인 느낌을 전달하기보다는 사실 전달에 치우쳐 작품성의 한계를 드러낸 경우도 있었다. 교과서를 보

는 관점이 어떻게 글 속에 녹아들었는가에 따라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달라서 최우수 작품을 선정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랐다.

대체로 응모 편수에 비해 우수한 작품이 많지 않았다. 같은 느낌이나 경험도 어떻게 글로 표현하고 구성하느냐에 따라 작품성이 달라진다. 이번 심사에서는 같은 소재라도 이러한 기법을 잘 살린 작품을 등위로 선정했다. 단순히 ‘교과서’에 얽힌 사실적 이야기를 떠올리기보다는 독자의 마음을 움직이면서 ‘교과서’에 융해된 새로운 주제를 암시하는 제목을 붙이는 것도 같은 범주에서 평가하였다.

중등부는 중학교와 고등 학교의 구분이 없는 탓인지 교과서에 대한 인식의 태도가 천편일률적(千篇一律的)이거나 아니면 천차만별(千差萬別)이어서 심사에 애로가 많았고, 중등과 고등을 구분할 필요성을 느꼈다. 띄어쓰기, 문단나누기, 문장 부호 사용 등 원고지 사용법을 너무 모른다는 사실에 심사위원 모두가 놀랐다. 원고지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앞으로는 작품 응모도 원고지만을 사용하게 하거나 학교마다 응모 편수를 제한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교과서의 역사는 일면 교육의 역사다. 교과서와 관련한 글짓기는 교육의 역사를 쓰고 알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 그러므로 교과서에 대한 교육도 교육의 중요한 분야임에 틀림없다. 작품을 심사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새롭게 느꼈다. ㉔

2003. 9. 27.

제 1 회 교과서 관련 수필 공모 심사위원회

심사위원장 한 명 희

# 21 세기에 주도하는 좋은 교과서 만들기에 큰 관심

■ 한국교과서연구재단(조사 연구부)

## 1. 앙케트 조사 배경 및 개요

우리 연구재단에서 발행하는 ‘교과서연구’지는 1988년 12월 교과서 개선 연구를 목표로 창간호를 낸 이래 제 40호를 발행하였으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역사가 15년이 된다. 그 동안 본 연구지는 우리 나라 교과서와 교육에 관해 중점적으로 논고하여 왔으며, 교과서의 본질 규명과 현장 교육에서의 적합성, 교과서 체제와 내용 분석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점 등에 대해 꾸준히 논의하였다.

‘교과서연구’지의 앙케트 조사는, 보다 좋은 ‘교과서연구’지로 발전하기 위해, 또한 21 세기에 주도하는 좋은 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연구물로서, 그 편찬 방향과 내용 등을 모색하고자 실시하였다. 그의 설문 조사 개요는 다음과 같다.

- 조사 내용 : 편집·발행에 관한 일반적인 것 (12 문항)
- 조사 대상 : 교원, 교육 전문가(교육 연구직·장학직), 교육 행정가, 교과서 출판인(편집인 포함)
- 조사 기간 : 2003. 9. 9.~9. 30.
- 설문지 발송 수 및 회수 수(율) : 총 270 부, 144 부(회수율 53.3%)

이번에 실시한 앙케트 조사는, 이 연구지가 탄생한 후 5년이 지난 1993년 12월(교과서연구 제 17호, 한국 2종 교과서 협회 실시)에 처음 실시하였으며, 그 후 10년이 지난 뒤인 금번이 두 번째가 된다.

## 2. 앙케트 조사 결과

1. 본 연구지는 21세기의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교과서 전문지로서, 이 잡지에서 다룰 연구 영역을 다음 14개 분야로 분류하였습니다. 선생님께서 이 중에서 어떤 영역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_\_\_\_\_ 위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부터 1, 2, 3, 4, 5 위까지 그 순위를 적어 주십시오.

**결 과**

연구 영역	합 계	연구 영역	합 계
① 교과서의 본질	305	⑧ 학습 평가	37
② 교과서 제도	268	⑨ 입시 제도	54
③ 교육과정	368	⑩ 교과서 가격 및 공급	29
④ 교과 교육	118	⑪ 현장 교육	99
⑤ 교과서 체제	263	⑫ 학습 자료	52
⑥ 교과서 내용	366	⑬ 외국의 교과서 제도	86
⑦ 학습 지도	75	⑭ 자료 해설	45

※ 교육과정이 368 점으로 가장 강조해야 할 영역으로 나타났으며, ‘교과서 내용’이 366 점으로 두 번째로 강조되었다. 그 뒤로 세 번째로 ‘교과서의 본질’이 305 점, 네 번째가 ‘교과서 제도’로 268 점, 다섯 번째가 ‘교과서 체제’로 263 점으로 나타났다.

2. 1 번에서 제시한 영역 이외에 추가되어야 할 것이 있으면 적어 주십시오.

**결 과** 새 연구 영역으로 적시한다면, ① 교과서의 변천(역사) ② 교과서 편찬 등을 들고 있다.

3. 귀하는 본 연구지가 어떤 성격(유형)의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① 학회지(논문집)
- ② 교과서 연구 자료집
- ③ 본 재단 업무 및 PR 지
- ④ 교과서 연구와 재단 업무가 복합된 자료집
- ⑤ 관련 업무 보고서
- ⑥ 기타

**결 과** ‘교과서 연구 자료집’이 52.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교과서 연구와 재단 업무가 복합된 자료집’이라는 의견이 두 번째로 나타났다. 이 두 개의 의견이 본 연구지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4. 그렇다면 본 연구지는 기획 편집상 어떤 성격(유형)을 띠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한 가지만 체크해 주십시오.

- ① 순수 교과서 연구지
- ② 교과서 논문집
- ③ ‘교과서와 교육’에 관한 연구지
- ④ 교과서 연구 논문과 교과서 관련 자료집

**결 과** ‘교과서 연구 논문과 교과서 관련 자료집(42.4%)과’, ‘교과서와 교육에 관한 연구지’(41.

7%)로서의 성격을 띠어야 한다고 조사되었다. 이 점에 있어 본 연구지는 ‘순수 교과서 연구지’와 ‘교과서 논문집’의 성격에서 벗어나고 있다.

5. 본 연구지가 선생님의 연구 활동이나 직장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크게 도움이 된다.                      ② 조금 도움이 된다.
- ③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④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결 과** “조금 도움이 된다.”의 항목이 75 %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그 다음이 크게 도움이 된다가 14.8 %로서 이 두 개를 합치면 약 90 %가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다.

6. 문항 5에서 “④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에 표시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① 연구 활동이나 직장 생활과는 관련성이 없다.
- ② 편집 체제 등의 불비
- ③ 변화 없는 내용의 게재
- ④ 관변 업무의 과다 게재
- ⑤ 기타

**결 과** 변화 없는 내용의 게재 1명, 관변 업무의 과다 게재 1명뿐이었다.

7. 본 연구지는 최근 5년간 발행 평균 쪽수가 120 쪽입니다. 이 쪽수는 연 2회간으로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너무 많다.    ② 많다.                      ③ 적당하다.    ④ 부족하다.    ⑤ 너무 부족하다.

**결 과** 쪽수가 ‘너무 많다.’와 ‘많다.’는 거의 없는 실정이며, ‘부족하다.’는 의견이 50.6 %로 가장 많았고, ‘적당하다.’는 의견은 34 %, ‘너무 부족하다.’는 의견이 14 %로 나타났다. 이 같은 통계로 보아 부족하다는 의견이 64.6 %를 차지하고 있다.

8. 본 연구지의 연간 발행 횟수에 대해 몇 회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2회                      ② 3회                      ③ 4회                      ④ 5회                      ⑤ 5회 이상

**결 과** 연간 발행 횟수에 대해 연 4회가 64.6 %로 가장 높게, 그 다음이 2회(12 %), 세 번째가 연간 5회(10.6 %), 네 번째가 5회 이상(9 %)이었다. 이 점으로 보아 연간 4회 발행이 83.8 %를 차지하고 있다.

9. 본 연구지의 편집 레이아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가독성과 조형성이 아주 좋다.
- ② 가독성과 조형성이 대체로 무난하다.
- ③ 가독성과 조형성에 문제가 있다.
- ④ 기타



**결 과** “가독성과 조형성이 대체로 무난하다.”라는 의견이 61.2 %로 나타났다. “가독성과 조형성에 문제가 있다.”가 28.2 % (40명)인 점은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10. 본 연구지의 게재 논문의 진술 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수준이 매우 높다.
- ② 수준이 높다.
- ③ 아주 알맞다.
- ④ 수준이 낮다.
- ⑤ 수준이 매우 낮다.

**결 과** “아주 알맞다.”가 64.5 %로 조사되었다. 그 밖의 ‘수준이 높다.’가 16.2 %인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11. 본 연구지 집필자(저자) 구성에 대해 평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대학 교수가 너무 많다.
- ② 대학 교수가 너무 적다.
- ③ 일선 교원이 너무 많다.
- ④ 일선 교원이 너무 적다.
- ⑤ 주제에 따라 저자의 구성이 아주 적절한 편이다.
- ⑥ 잘 모르겠다.
- ⑦ 기타

**결 과** ‘일선 교원이 너무 적다.’라는 의견이 36.2 %로 나타났으며, ‘주제에 따라 저자의 구성이 아주 적절한 편이다.’라는 의견도 24.4 %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통계로 보아 일선 교원의 참여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된다.

12. 본 연구지의 편집·발행에 대해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 주십시오.

**결 과** 약 60개의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이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의견 주제	의견 숫자	의견 요약 등
1	집필진의 다양화 도입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성 및 전국화 기대</li> <li>• 현장 출판사 및 일선 교사 참여 확대</li> </ul>
2	내용의 보완 등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선정, 조직, 수준과 범위 등에 유념하여 원고 위촉</li> <li>• 현장 교육 보강(9)</li> <li>• 교과서 정책 등 보완</li> </ul>
3	편집·디자인 등의 적극 도입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EDI’ 교육개발, KERIS ‘에듀넷’ 수준으로 상향 조정</li> <li>• 조형미 제고 및 전문지 특성 부각</li> </ul>

4	지상 토론 또는 지상 좌담란 설정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계·업계 등의 여론 반영</li> <li>• 교과서 편찬·발행 등 정론 선도</li> <li>• 교과서 좌담 문화 도입</li> </ul>
5	연간 발행 횟수 증가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 연 2회간은 전문지로 부적절하다.</li> <li>• 연 4회간 이상을 요망</li> </ul>
6	배포처 및 배포량 증가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행사 최소 2~3부 배포망</li> <li>• 지방 교육청 초·중등과에도 배포망</li> <li>• 배포처 등 재조정 등으로 실제 독자에게 배포되게 조치망</li> </ul>
7	교과서 전문지로 위상 제고 방 안 연구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준 제고로 유일의 전문지 위상 확보</li> <li>• 학회지로 등록망</li> <li>• 원고료 상향 조정망</li> </ul>

### 3. 앞으로의 과제

양케트 조사 문항은 편집·발행에 대한 통례적인 것을 선정하였으며, 분석은 기초 통계를 알아보는 빈도 분석법으로 하였다. 이것은 대체적인 여론과 경향성 등을 파악하고자 하는 조사 목적 때문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것 중 긍정적인 평가 사항은 ‘교과서연구’지를 발전시키는 데 더 활용할 것이며, 부정적인 측면은 그 원인을 분석하여 이들을 개선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 가. 계속 추진할 사항

연구 영역 중 빈도가 높은 ‘교육과정’, ‘교과서 내용’, ‘교과서의 본질’, ‘교과서 제도’, ‘교과서 체제’ 등은 계속해서 주요 연구 영역으로 삼는다. 그리고 본 재단 발행 ‘교과서연구’지는 그 성격(52.9%)을 ‘교과서 연구 자료집’으로 하며, 그 내용 구성은 주로 ‘교과서 연구 논문과 교과서 관련 자료’ 및 ‘교과서와 교육에 관한 연구’ 등으로 한다. 한편, 본 연구지의 게재 논문 수준은 현 상태가 괜찮다는 의견이 아주 높아 그대로 추진(유지)한다.

#### 나. 보완·개선할 사항

본 연구지가 독자에 ‘도움이 된다.’(75%)고 하였는데, 앞으로는 제반 사항을 개선하여 ‘크게 도움이 된다.’는 쪽으로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지가 ‘가독성과 조형성에 문제가 있다(27.2%)’에 대해 이 분야의 전문가에게 의견을 들어 개선하는 쪽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typography와 디자인 쪽의 개선이 요구된다.

집필진 중 ‘일선 교원이 너무 적다’(36.2%)에 대해 앞으로는 현장인(일선 교원, 일선 편집자 등)의 참여를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과서연구’지의 쪽수는 부족하고, ‘연 2회간은 연 4회간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견과 본 재단 연구 사업 중 ‘교과서 연구 관계 간행물의 발행’을 제고시키기 위해 연 4회간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㉓ (기록 허 강)

# NEWS

## 연구재단 소식

### ✳ 임원 동정

#### ○...황병수 이사 퇴임

우리 연구재단의 황병수(전 한국검정교과서협회 이사장) 이사가 2003년 8월 5일자로 퇴임하였다. 그 동안 바쁘신 중에도 이사회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이사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 ○...이해영 이사 취임

신임 한국검정교과서협회 이해영 이사장은 우리 연구재단의 당연직 이사로 2003년 8월 5일 취임하였다.

### ✳ 외국의 교과용 도서 구입

○...우리 연구재단은 교과서의 국제 비교 연구와 교과서 개발 등에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자 교육인적자원부의 협조를 얻어 외국의 교과용 도서를 수집하였다. 이번에는 미국, 일본, 중국, 대만 등 4개국의 초·중등 교과용 도서 722권을 현지 재외 한국교육원 등을 통해 구입하였다. 교과용 도서 구입에 협조해 주신 재외 한국의 교육원장, 한국학교 교장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 ✳ 제6회 국내외 교과용 도서 전시회 개최

○...우리 연구재단은 각국의 교과용 도서를 비

교해 보고 우리 나라 교과용 도서의 기획·집필·편집·제작에 참여하거나 이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나라 교과용 도서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2003년 8월 7일부터 2003년 8월 12일까지 6일간 서울 시립 남산도서관 1층 전시실에서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전시회는 우리 나라 등 24개국의 초·중등 교과서 6,752권을 전시하였으며, 특히 현재 우리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7차 교과용 도서뿐만 아니라, 군정·교수 요목기부터 제6차 교육과정기까지를 함께 전시하여 옛 교과서의 모습과 교과용 도서 변천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와 교과용 도서 발행사인 (주)교학사, 대한교과서(주), (주)두산,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 (주)지학사, (주)천재교육, (사)한국검정교과서협회 등이 후원하여 전시회가 성황을 이루었다. 전시회에 협조해 주신 관계 기관 및 발행사에 감사드린다.

### ✳ 제1회 교과서 관련 수필 작품 공모 시상

○...우리 연구재단은 초·중·고등 학교 재학생 및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우리 생활 속에 친근감과 호감을 주는 교과서에 대해 생각해 보고, 교과서의 기능과 중요성을 재인식해 봄으로써 우리 나라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교과서 관련 수필 작품을 공모하였으며, 2003년

9월 30일에 수상자를 발표하였다.

이번 작품 공모에는 초등 54 편, 중등 234 편, 일반 132 편 등 총 420 편이 응모, 최우수상에는 초등부에 광주효동초등학교 김영우 학생의 '교과서에 숨겨진 비밀'이, 중등부에 서울상계고등학교 박지용 학생의 '마음으로 읽는 교과서'가, 일반부에 서울응암초등학교 교사 김선민 선생님의 '바둑이는 어디 간겨?'가 수상하는 등 최우수상 3 명, 우수상 6 명, 장려상 17 명, 입상 71 명 총 97 명의 수상자에게 2003년 10월 17일 우리 연구재단 이사장실에서 상장과 상금을 수여하였다. 특히, 이번 시상에서는 최우수상 수상자에게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상을 수여하였다. 금번 수필 작품 공모에 협조해 주신 관계 기관 및 발행사에 감사드린다.

#### ✧ 교과서 출판 교실 개설 운영

○...우리 연구재단은 교과서 발행사 근무자의 자질 향상과 교과서 출판에 관한 지식 및 기법 등의 습득으로 우리 나라 교과서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3일간(21시간)의 일정으로 '교과서 출판 교실'을 2회 운영하여 56 명이 이 과정을 수료하였다.

이번 출판 교실의 운영은 교육과정론, 교과서론, 교과서 관련 법규, 교과서 출판 기획 및 편집론, 교과서 문장론, 교과서 편집 디자인론 등으로 교과서 편집 실무에 꼭 필요한 과정으로 편성하여 참가자는 물론 발행사 등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출판 교실에 협조해 주신 관계 기관과 발행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23

## 알림 다 고(古) 교과용 도서 수집

우리 연구재단은 국내 유일의 교과서 전문 연구 기관으로

고(古) 교과용 도서를 수집합니다.

기증해 주신 자료는 『교과서정보관』에 비치하여 교과서 연구가는 물론,

일반인들도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역사적 자료로 소중히 보존하겠습니다.

- 대 상: 전 교과용 도서(교과서, 인정 교과서, 지도서, 참고서, CD, 테이프 등)
- 수 량: 제한 없음.
- 기 간: 수시 접수
- 보 상: 기증자에게는 '기증서' 교부와 아울러 명단을 영구히 보존하고, 실비 보상도 할 수 있음.
- 연락처: (우) 135-936  
서울 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31-11 서울빌딩 6층  
한국교과서연구재단 『교과서정보관』 담당자 앞  
Tel: (02) 501-9103(대), Fax: (02) 501-9105

# 교과서 개별 구입 안내



초·중·고등 학교 학생이 전학이나 교과서 분실 등의 사유로 교과서를 개별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교과서 발행사 홈 페이지, 발행사 직매장, 개별 지정 판매 서점, 지역별 검정 교과서 공급인 판매소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개별 구입을 할 때에는 교과 명과 출판사 및 저자(지은이)를 정확히 알아야 구입이 편리함을 알려 드립니다.

## 교과서 발행사 연락처

구 분	발행사명	전화 번호	홈 페이지	발행 도서 (각 발행사 홈 페이지 참조)
검정 교과서	(사) 한국검정교과서협회	(02) 3663-5409~12	www.ktbook.com	* 중·고등 학교 검정 도서 전과목
국정 교과서	대 한 교 과 서 (주)	(031) 735-8105	www.daehane.com	〈제 6 차 교육과정〉 중·고등 학교 국정 도서 〈제 7 차 교육과정〉 * 초등 학교 전과목 * 중 학 교 : 국어, 생활 국어(1, 2학년), 국사, 도덕 1 * 고등 학교 : 공업계, 수산 해운계 전문 교과
	(주) 교 학 사	(02) 701-6371	www.kyohak.co.kr	* 중 학 교 : 국어, 생활 국어(3학년) * 고등 학교 : 농업계 및 상업계 전문 교과
	(주) 두 산	(02) 3398-2700	www.dong-a.com	* 고등 학교 : 국어, 문법, 국사 및 외국어계 전문 교과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	(02) 865-8225	www.eduplus.com	* 중 학 교 : 도덕 2, 3학년 * 고등 학교 : 해양 과학, 관광 영어 및 가사 실업계 전문 교과
	(주) 지 학 사	(02) 330-5302	www.jihak.co.kr	* 고등 학교 : 도덕, 시민 윤리, 윤리와 사상, 전통 윤 리, 생활과 과학, 과학계 전문 교과
	(주) 천 재 교 육	(02) 3282-1773	www.chunjae.co.kr	* 고등 학교 : 확률과 통계, 이산 수학, 체육계 전문 교과
	향 우 산 업 (주)	(02) 2203-6601~2		* 고등 학교 : 교련

## 발행사 직매장

구 분	위 치	전화 번호
(사) 한국검정교과서협회	서울 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377-2 선일빌딩 2층 (2호선 망원역 부근)	(02) 3663-4292
대한교과서(주)	서울 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41-10 (본사 1층 ) (7호선 논현역 부근)	(02) 541-8247

※ 기타 개별 지정 판매 서점, 지역별 검정 교과서 공급인 판매소는 **교육인적자원부 홈 페이지(www.moe.go.kr)** 참고

『교과서연구』는 교과서의 질적 수준 향상에 관한  
 종합적인 조사·연구의 성과·교육 제도·교육 과정·교육 자료 등  
 교육 현장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교과서연구』에 게재할 원고를 모집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바랍니다.

원고를 모집합니다

교과서 전문 연구지

# 『교과서연구』

## ◆ 원고 내용

- 교과서 및 교육과정 관련 연구와 교육 현장의 교과 운영 현황과 교과서 활용 방안 등
- 교육 현장과 관련된 교수·학습의 특색 있는 내용 등
- 『교과서연구』를 읽고 느낀 점이나 새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 등
- 교과서와 관련된 제언·수필·시·만화 등

## ◆ 원고 매수

- 200자 원고지 30매 내외(A4 용지 10포인트 4매 기준)

## ◆ 원고료

- 채택된 원고에 대하여 소정의 원고료 지급

## ◆ 보내실 곳 : 135-936

서울 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31-11 서울빌딩 6층  
 재단법인 한국교과서연구재단 『교과서연구』 편집자 앞  
 E-mail 주소 : editor@ktrf.re.kr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 (02)501-9103으로 문의



# 연구재단 후원 기금 출연 안내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은 민법 제 32 조 및 공익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 4 조에 의거 교과서의 질적 수준 향상과 교과서 제도에 관한 국제 비교 연구 등 교과서와 관련한 종합 연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공익 법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재단 운영을 위한 후원 기금(출연금)을 모금하오니 출연에 많이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이 사 장 한 병 천

❖ 출연 대상 : 개인, 기관, 법인 및 단체

❖ 출연금 접수 : 수시

❖ 출연금의 종류 : 현금, 유가증권, 부동산

❖ 출연 참여 방법

○ 현금은 연구재단 예금 계좌로 직접 입금

— 계좌 번호 : (농협) 003-01-19074

— 예 금 주 : 한국교과서연구재단

— 소득 공제용 영수증 발급

※ 출연금은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에 의거 종합 소득 금액의 100분의 10의 한도 내에서 기부금 특별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유가증권 또는 부동산은 출연 방법 별도 안내

○ 분할 또는 별도의 납입 기한을 정하여 출연 가능

❖ 출연금 용도

○ 교과서 관련 조사 연구비

○ 「교과서정보관」 건립비

○ 출연자 지정 용도 등

❖ 기금 출연자에 대한 예우

○ 일정액 이상의 기금을 출연해 주신 분들의 명단은 동판으로 제작하여 영구 보존하고, 정부 포상을 추천하겠습니다.

○ 건물을 출연하신 경우에는 건물의 이름을 출연자의 성명이나 아호 또는 출연자가 원하는 명칭으로 부서하고 건물에 각인하여 보존하겠습니다.

○ 출연해 주신 분의 명단은 한국교과서연구재단 간행물에 수록하고 간행물의 무상 구독 특전을 제공하겠습니다.

❖ 연락처

○ 기금 출연에 관한 문의 사항은 한국교과서연구재단으로 연락바랍니다.

— 주 소 : 서울 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31-11(서울빌딩 6층)

— 전화 번호 : (02) 501-9103, e-mail : adm@ktrf.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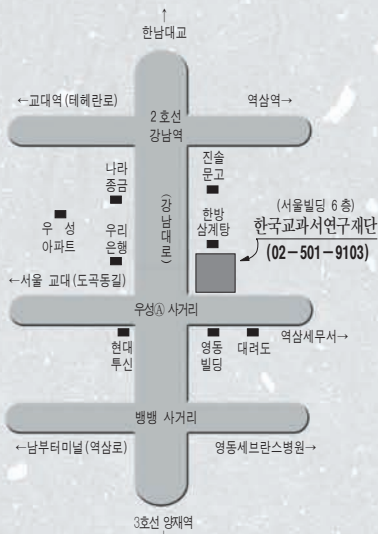
한국교과서연구재단 부설

## ‘교과서정보관’ 이용 안내



교과서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이 분야의 전문가와 교과용 도서 개발의  
기획·집필·편집·제작을 담당하는 분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 ● 찾아오는 길 ●



### 보유 자료

구 분	국 내	국 외	계
교과용 도서	18,747	4,994	23,741
일반 자료	1,911	—	1,911
계	20,658	4,994	25,652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이집트, 중국, 대만 등의 교과용 도서 보유

### 열람 시간

구 분	기 간	시 간
평 일	3~10월	09:00~18:00
	11~2월	09:00~17:00
토요일	1~12월	09:00~13:00

\* 공휴일 휴관

### 교통편

#### ● 전철

- 강남역(2호선) 2번 출구 진솔문고 방향 우성아파트 사거리
- 양재역(3호선) 2번 출구 뱅뱅사거리 방향 우성아파트 사거리

#### ● 일반 버스

- 17, 66, 68, 78-1, 78-3, 83-1, 97-2, 239-1, 414 역삼초등학교 하차
- 33-1, 289-1 서초2동사무소 하차

#### ● 좌석 버스

- 45, 736-1, 910, 916, 917, 1005, 1005-1, 5500 역삼초등학교 하차